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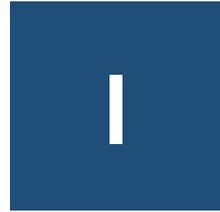
- 최종보고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연구용역

2017. 9

목차

I. 연구 개요	2	IV. SEDPI 산출결과	68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측정항목의 정의	69
2. 연구 추진체계	8	2. 모형값 산출	91
		3. 결과의 해석	102
II. 개념의 정립	12	V. 시민 조사결과	108
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13	1. 조사설계 및 기획	109
2. 유사 선행연구 검토	21	2. 시민 응답결과	114
3. 유사 지수체계 벤치마킹	25	3. 종합 시사점	135
III. 모형의 설계	29	VI. 정책적 제언	140
1. 모형의 기본 구조	30	1. 정책 성과관리 관점의 제언	141
2. 논리모형을 통한 도해	35	2. 정책관리 관점의 제언	145
3. SEDPI 구체화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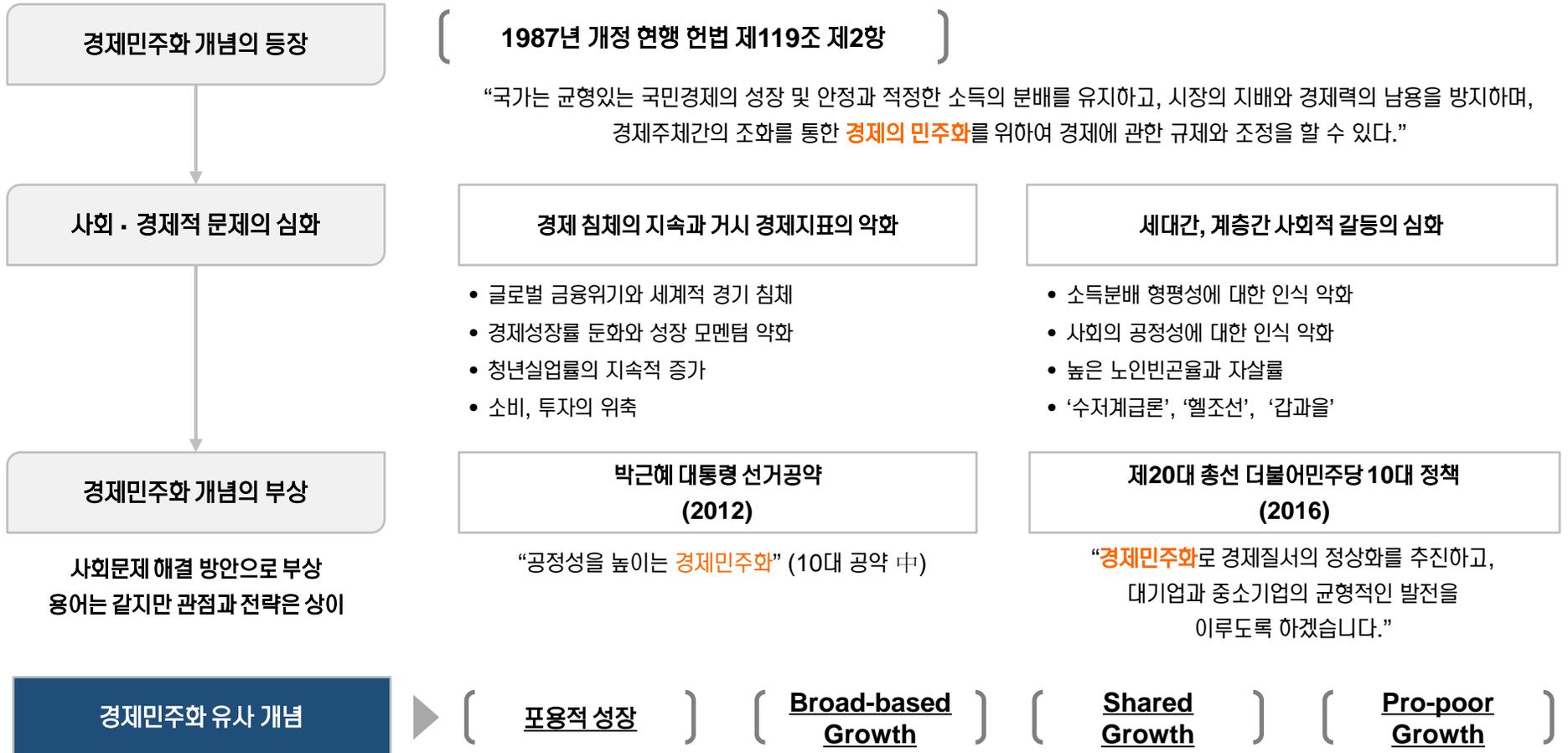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I-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경제민주화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명시된 개념이지만, 경제 침체의 지속과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중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근 부상.

경제민주화 논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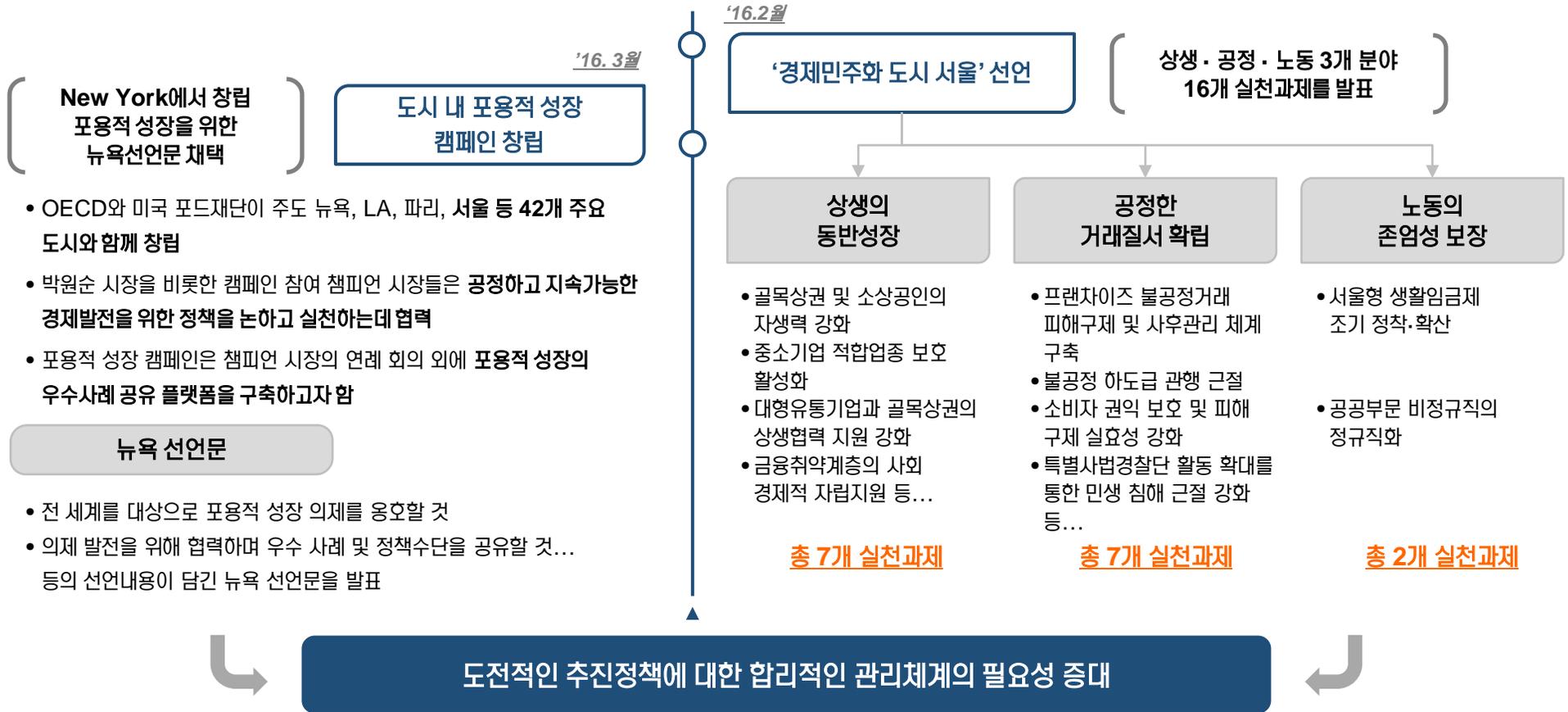


I. 연구 개요

I-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16년 2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과 함께 상생·공정·노동 3개 분야 16개의 실천과제를 발표. 3월에는 포용적 성장을 옹호하는 OECD의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 창립을 함께하여 선도적인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포용적 성장 캠페인 참여



I. 연구 개요

I-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상생, 공정, 노동' 분야에 대해 16개의 기존 실천과제에 '17년에 7개의 신규 실천과제를 추가해 총 23개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개.

서울시 경제민주화 23개 실천과제

'상생'	'공정'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책임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서울형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촉진 → 사회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 중기적합업종 지정확대 및 지정단체 육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 가맹사업자 협상력 강화, 공정·대응 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회 도입 → 경영 투명성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원 →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및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 → 문화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공정거래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소비자 권익보호위한 시장정보 제공 및 소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추진 → 노동자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상생협력 경제환경 조성 및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경 활동 확대로 민생침해 근절 → 건전한 시장형성 유도 및 경제적 약자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 임금체불 문제 적극 대응으로 청년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 임대·차 분쟁 사전 방지, 사후 분쟁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 품질 및 공사 안전 담보위한 근로자 확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금융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 합리·공정 상가임대제도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 사업재기·경제활동 의지자 체납조세 조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임차상인 지원 관리방안 → 임차상인 이주 문제 지원, 도시재생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리 상품,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 중금리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I. 연구 개요

I-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방향·역할에 대립적 시각이 존재하나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환류방안 마련이 요구.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과정상의 이슈와 대응방향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 인식에의 동질성)

- 경제침체의 지속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당연한 사회 문제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단, 공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의 대립 (해결 방안에의 대립성)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도에 대해서는 대립적 관점이 존재
-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계, 학계 내 효과적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대립中

정책-효과의 검증된 로직 모델의 부재 (효과에의 모호성)

- 불평등의 완화가 성장을 강화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검증된 정책 프레임이나 정책 지표들은 부재
- 이는 사회적 가치창출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논리인 정교한 로직 모델의 부재를 의미

정책의 효과 평가와 명확한 정책 논리 도출을 통한 정책 환류방안 마련 필요

정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판단

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를 창출하는지 판단이 필요

시민 대표기관이 결정한 정책의 효과 평가

세계적 정책 선도자적 지위에서 선도적 정책의 효과 평가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의 로직 구축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실제 효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 논리의 검증으로 정책프레임 마련

I. 연구 개요

I-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목적

서울시는 '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과 함께 상생·공정·노동 3개 분야의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포용적 성장을 옹호하는 OECD의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 창립을 함께하여 선도적인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본 프로젝트는 이에 대응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명확한 방향제시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

프로젝트 목적 및 수행 범위

프로젝트 목적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제시 및 평가기준 마련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 및
성과 측정도구의 기준 정립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모형 설계 및 측정 실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경제민주화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

수행 범위

경제민주화 개념 정립

- 경제민주화 관련 현황·이슈 탐색
-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 명확화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범위 정의

경제민주화지수 사례조사

- 국내외 유사 지수에 대한 연구 사례조사
- 유사 연구 사례조사를 통한 적용에의 시사점 도출

성과지수 모형 설계

- 경제민주화정책 분야 설정 및 지표 설정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표 개념적 정의
- 성과지수 모형 설계(가중치, 산식 등)

성과지수 평가 및 결과도출

-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지수 종합분석
- 성과지수의 각 분야별 분석
- 포용적 성장지수 적용 및 결과도출

경제민주화정책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To-Be 방향성 도출
- 신규 경제민주화 정책 도출 및 로드맵 제시

RFP상
과업범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정책
선정 및 분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지표플 구성

각 분야별 지표
측정 및 집계

(분야별/종합)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도출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평가 및
개선방향, 과제제안

I. 연구 개요

I-2. 연구 추진체계 >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4단계로 과업을 재구조화하여 6개월간 수행을 목표.

프로젝트 수행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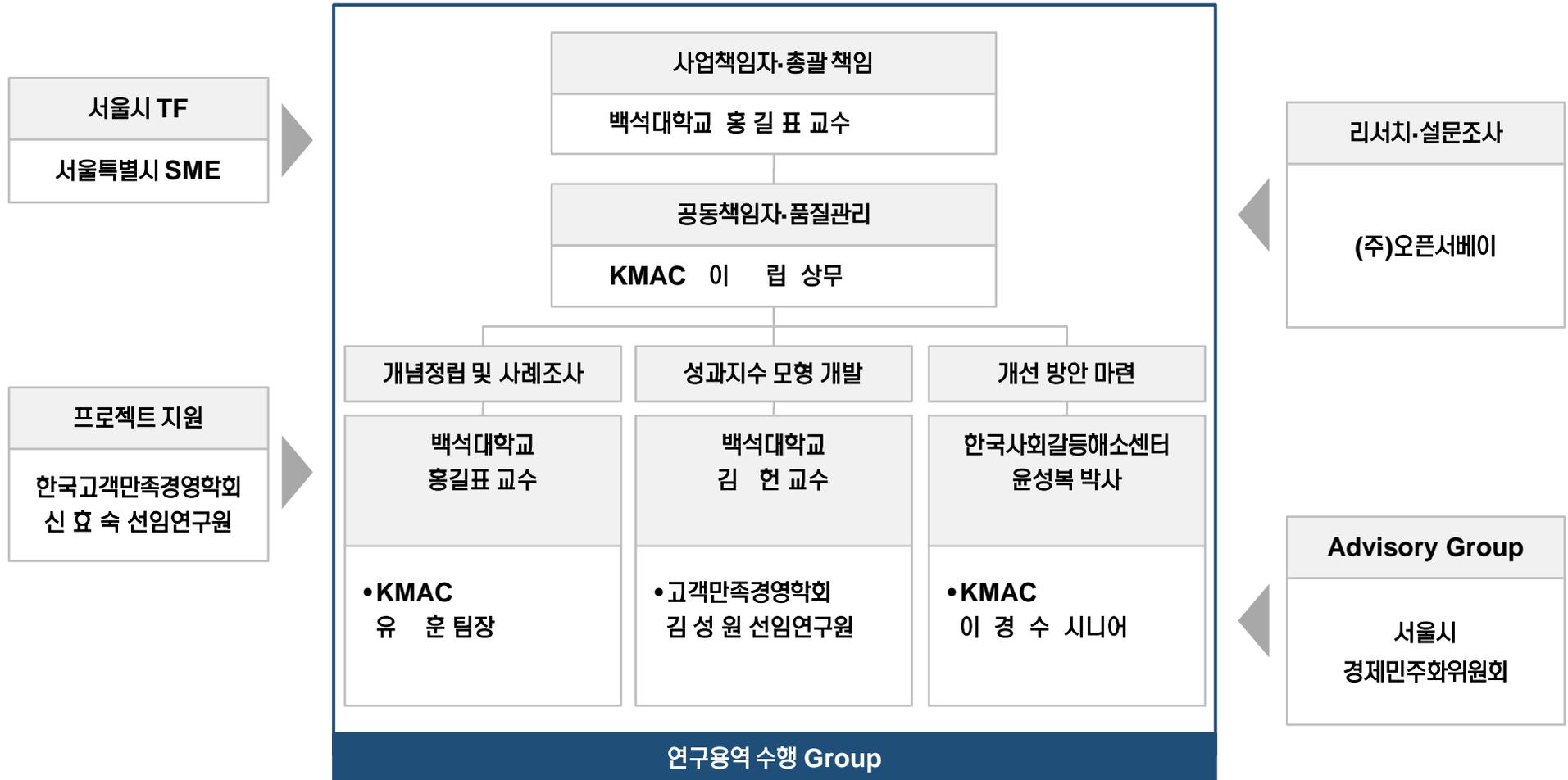


1. 연구 개요

1-2. 연구 추진체계 > 연구 조직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수행조직을 구성해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하였으며, 과업의 성격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운영.

프로젝트 추진 조직의 구성



I. 연구 개요

I-2. 연구 추진체계 > 주요 추진경과

12월 착수이후 현 시점까지 수차례 서울시 경제민주화 TF와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연구결과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2차 중간보고 이후의 검토 사항 및 보완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를 도출.

주요 추진 이벤트 시행경과 및 진행내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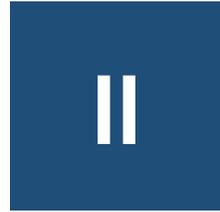
주요 이벤트	일시	주요 내용	비고
연구계획 보고회	2016년 11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PT 형태로 KCSMA 연구 방향성 제시, 추진 방법론 등 발표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본 연구 발전방안 논의 	-
착수보고회	2016년 12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방법론별 세부 산출물 예시 및 지수의 구성체계 보고 경제민주화 TF 상호 교류 및 연구방향 관련 의견수렴 	-
경제민주화팀 사전 검토회의	2017년 1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위원회 2차 회의에 본 연구 추진방안 보고 내용 협의 해외 유사 연구 벤치마킹을 통한 지수 구성체계 및 주요 산출물 예시 안내 	-
경제민주화위원회 2차 회의 보고회	2017년 1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추진 계획 보고 해외 유사 연구 벤치마킹을 통한 지수 구성체계 및 주요 산출물 예시 안내 연구 방향성에 대한 1차적 합의안 도출 	-
1차 전문가 워크숍	2017년 2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의 및 주요 개념에 대한 1차 결과물 공유 서울시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의 기본 구성체계에 대한 1차(案) 제시 및 기타 추진상의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실무부서 워크숍 (1차)	2017년 3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의 및 주요 개념에 대한 1차 결과물 공유 세부 측정지표 Data Gathering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및 자료 제출을 위한 기본 템플릿 활용방안 안내 	23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담당자 참석

I. 연구 개요

I-2. 연구 추진체계 > 주요 추진경과

주요 추진 이벤트 시행경과 및 진행내용(2/2)

주요 이벤트	일시	주요 내용	비고
경제민주화위원회 전문가 서면 자문(1차)	2017년 3월 24일 ~2017년 3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위원회 주요 분과별 전문가 대상 실무부서 워크숍 이후의 진행사항 및 주요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검토의견 확보 	위원회 4인 검토의견 회신
AHP 워크숍	2017년 3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관련 개념(Concept) 정의 확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워크숍 진행을 통한 구성 요소 가중치 평가 향후 추진계획 협의 	경제민주화 용역 TF·위원회 및 외부 학계전문가 참여
1차 중간보고회	2017년 4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상황 공유 및 연구 결과물 1차 검토 AHP 구성, 지수 점수화, 지수체계의 이슈 문의 및 보완 방안 수립 	경제민주화 용역 TF·위원회
2차 중간보고회	2017년 6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상황 공유 및 연구 결과물 2차 검토(시민대상 설문조사 포함) 지수체계의 간소화 요청 및 측정항목 구성방안에 대한 조정 요청 	경제민주화 용역 TF 및 관련부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전문가 서면 자문(2차)	2017년 6월 28일 ~2017년 7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체계별 측정항목 구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본 모형 중심) 	위원회 3인 검토의견 회신
기타 경제민주화팀 업무협의	상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및 이벤트 추진 협의 	-
최종보고회	2017년 8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DPI 산출결과 공유 (활동지수, 핵심성과지수, 포괄성과지수) 부문별 전략적 시사점 전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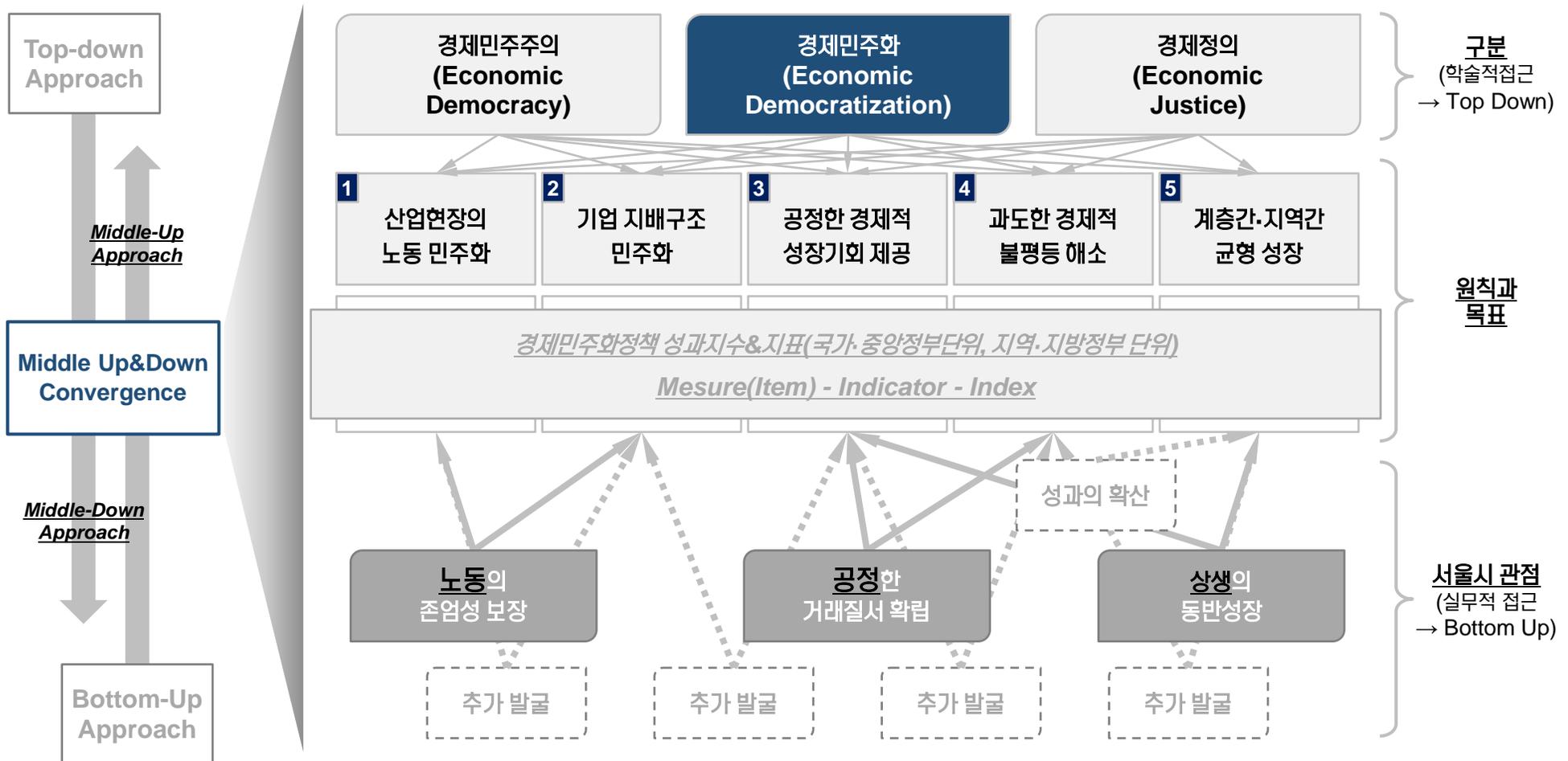
개념의 정립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3대 유사개념(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한 Top-Down 방식과 서울시 경제민주화 추진관점 및 추가 요구관점 중심의 Bottom-Up을 혼용한 Middle Up&Down 방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 5대 '원칙과 목표'를 1차적으로 도출.

Middle Up&Down 방식을 활용한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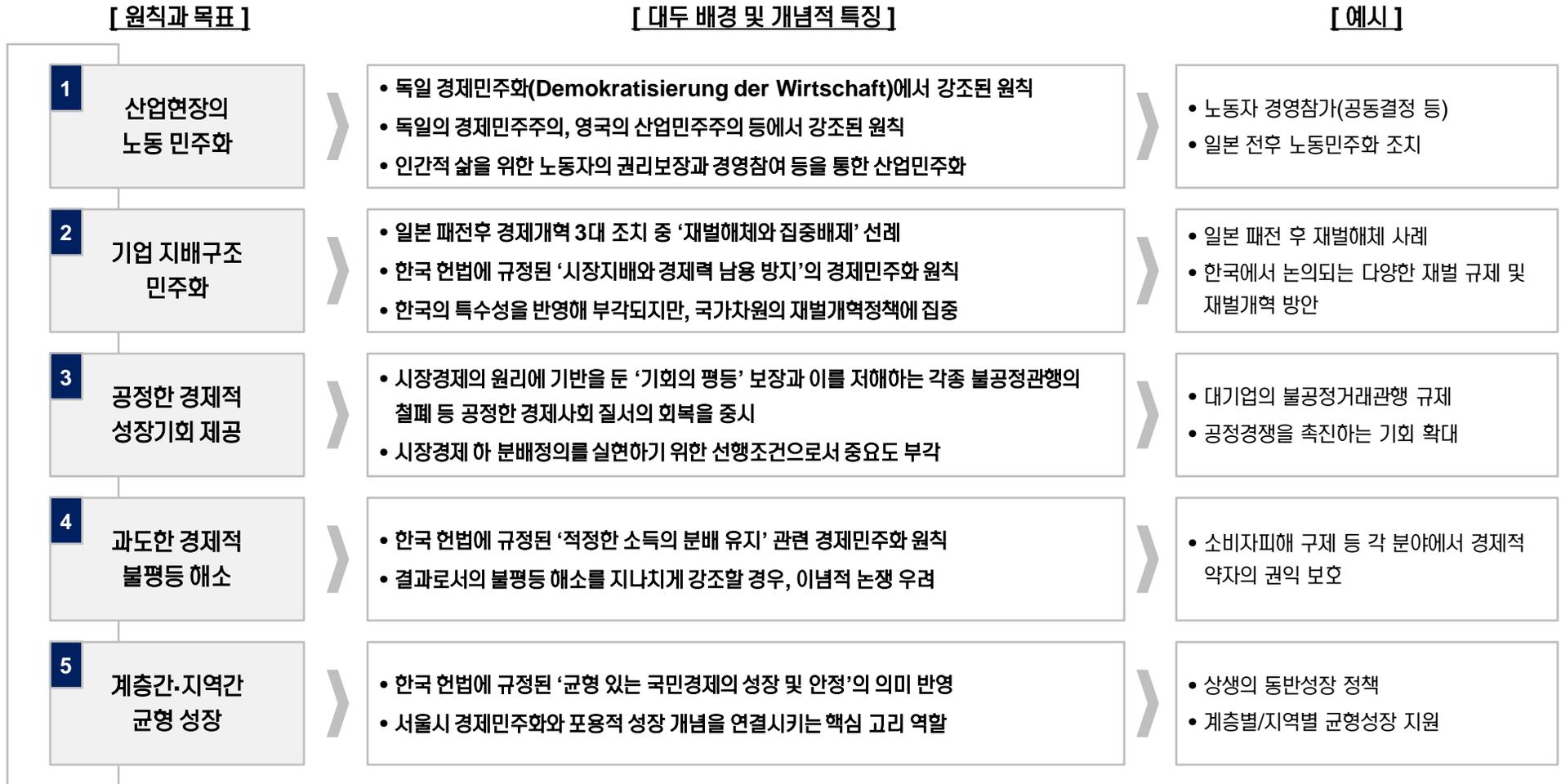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경제민주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5대 원칙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집약 가능.

일반적인 경제민주화 5대 원칙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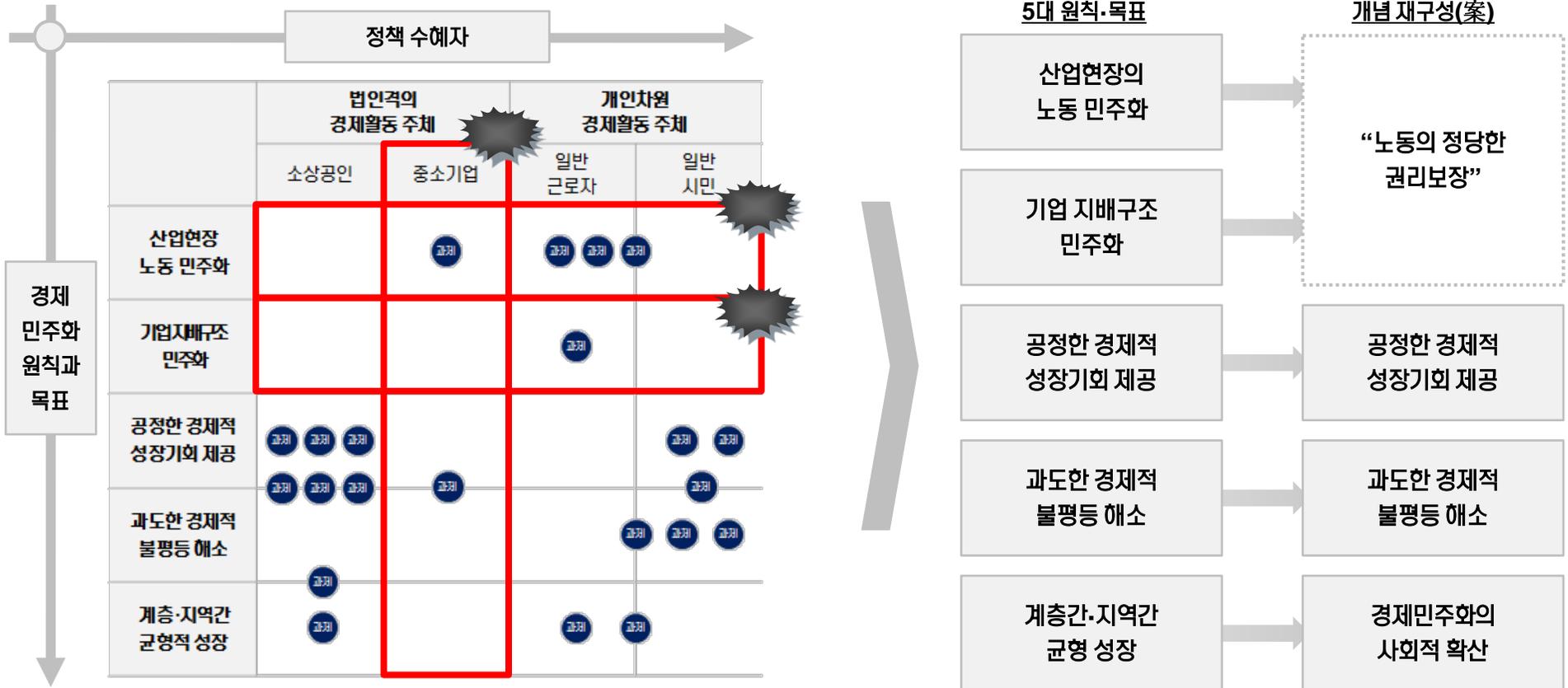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정책수혜자와 원칙·목표를 각각의 축으로 구성하여 정책범위를 탐색하였으나, 분류 기준과의 연계가 어렵거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4대 원칙과 목표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의 측정범위를 재구성.

성과지수 개발을 위한 개념 재구성(案)

[기존 5대 원칙·목표에 대응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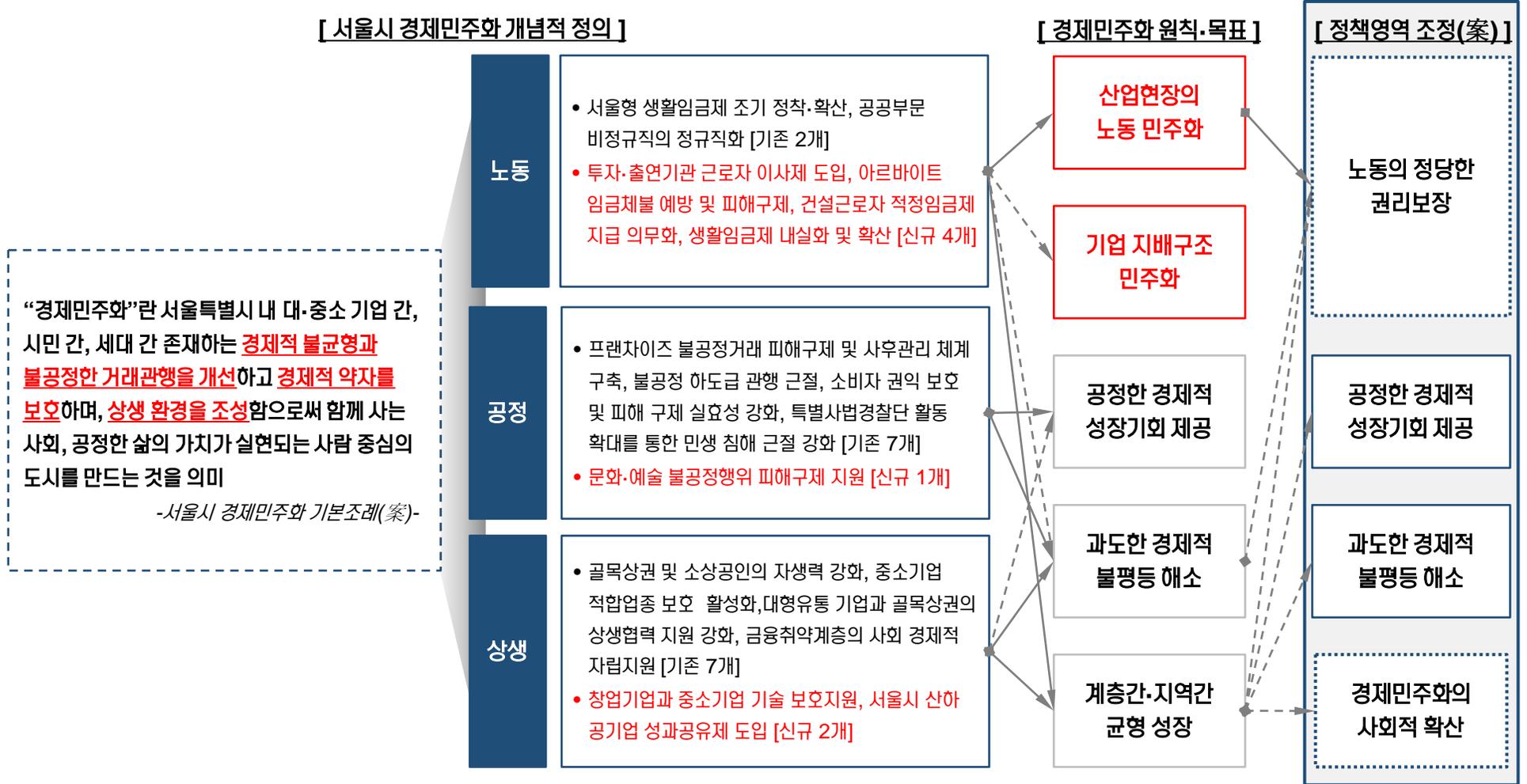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서울시에 특화된 경제민주화 3대 원칙(상생, 공정, 노동)과 23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일반적인 경제민주화 5대 원칙과 목표에 그대로 연계 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 이에 따라 일부 영역을 조정하여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지수에 적용할 4대 정책영역으로 정의.

경제민주화 5대 원칙·목표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 대응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KCSMA는 선행연구, 대한민국헌법, 서울시경제민주화 조례 등을 토대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의 측정을 위해 각 차원을 의미하는 ‘원칙과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의.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측정을 위한 원칙과 목표 정의



II. 개념의 정립

II-1.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의 검토

SEDPI 구성의 개념적 고려와 함께 각 구성요소별 하위계층을 대변하는 실제적 Data 반영, 부문별 성과에 대한 Tracking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① '16년 기존 실천과제, ② '17년 신규 실천과제, ③ 유사정책의 추진과제를 전술된 경제민주화 '원칙과 목표' 및 해당 정책의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Matrix에 매칭.



주) 16개(4×4) 매트릭스에서 배경의 색상표기 농도는 실천과제 집중 정도를 의미

II. 개념의 정립

[별첨] 측정 과제범위 정의

'17년도에 7개 신규 실천과제가 추가되며,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영역과 '과도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영역으로 정책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책 수혜자 범위도 확대.

'16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범위

경제 민주화 원칙과 목표	정책 수혜자			
	법인격의 경제활동 주체		개인차원 경제활동 주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10	18, 21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제공	1, 3, 8			6, 7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9, 15, 16, 11, 17	2		13, 1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범위

경제 민주화 원칙과 목표	정책 수혜자			
	법인격의 경제활동 주체		개인차원 경제활동 주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10	18, 21, 19, 20, 23	12, 2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제공	1, 3, 8			6, 7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9, 15, 16, 11, 17	2, 4, 5		13, 1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주) 매트릭스에서 붉은색 하이라이트 표기는 해당 실천과제 미배치 영역을 의미

II. 개념의 정립

[별첨] 측정 과제범위 정의

'15~'17년 서울시 주요 추진 정책 中 경제민주화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9개의 실천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

'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범위

경제 민주화 원칙과 목표	정책 수혜자			
	법인격의 경제활동 주체		개인차원 경제활동 주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10	18 21 19 20 23	12 2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제공	1 3 8 9 15 16			6 7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11 17	2 4 5		13 1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범위(추가과제 반영)

경제 민주화 원칙과 목표	정책 수혜자			
	법인격의 경제활동 주체		개인차원 경제활동 주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10	18 21 19 20 23	12 2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제공	1 3 8 9 15 16	2 I		6 7 E F G D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11 17	4 5		13 1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A-1 B H	A-2	C

주) 매트릭스에서 붉은색 하이라이트 표기는 해당 실천과제 미배치 영역을 의미

II. 개념의 정립

II-2. 유사 선행연구 검토

다양한 유사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실시.

경제민주화·포용적 성장관련 유사 선행연구

연구	연구 주요 시사점	연구	연구 주요 시사점
경제민주화, 논란과 실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광식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 경제민주화의 목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형성·작용 되도록 만드는 것 	도시의지속가능성 평가제도화방안 연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연구원 • 도시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국내외 사례 참고하여 지표 풀을 만들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지표안 도출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서로 상충된 정책이 아니며, 경제구조를 민주화하고 그 위에서 경제성장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상호보완성 • 지속적 규제개혁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병행 필요: 대기업 시장지배력에 의한 여러 불공정 거래관행들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호 	지방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점출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 선행연구와 관련지표 포괄 검토 후 지표부문, 세부예비지표 도출 → 1차 전문가 검증 → 2차 전문가 확정 • 표준점수 환산 지수화와 AHP에 의한 가중치 산정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4대 부문 16대 세부분야 • 각 세부분야는 개별 세부지표의 평균값
도시지속성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귀곤, 김훈희 (국토계획 제32권 제3호) • 지속 가능한 지표의 조건: 중요성, 시민과의 관련성, 지방상황 반영, 정보수집 용이성, 경향성, 다른 지표와의 관련성, 종합적 의미 보유, 이해용이성, 정책 등 변화 유발 등 	지자체행정의 지속가능발전성과 평가모델개발을위한 기초연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영한 (지속가능연구 제3권 제1호) •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의 통합이 필요하며, 빈곤퇴치,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 보호와 관리가 필수 요건
		매일경제 민선 4기 2년 지자체 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 매경리서치 지자체 성과평가지표의 문제점: 정책평가에 얽매어 지자체 성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 다중적 해석 가능 지표 포함

II. 개념의 정립

II-2. 유사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內 주요 성과지표(1/3)

美 Santa Monica
「지속가능 성장 가이드라인」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9개 목표 설정
- 각목표의 전반적 상태와 각정책의 성과와 효과성 측정
- 보고서는 매년 시의회에 보고되어지며, 이를 토대로 시정부 정책의 선택과 실행의 평가자료로 활용됨

美 Seattle
「지속가능 시애틀」

- 지표작성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표 조사
-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시민패널로 참여하게 함
-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정책결정자의 인식수준 교양에 기여했으며, 시 개발에 일정정도 반영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차원	지표	비고
자원 보전	• 온실가스 배출 외 7개 지표	-
환경과 보건	• 대기질 외 11개 지표	-
교통	• 버스이용자 외 9개 지표	-
경제 개발	• 경제적 다양성 • 소득격차 • 생활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 4개 지표	-
오픈 스페이스와 토지 이용	• 공원 접근가능성 외 4개 지표	-
주택	• 적절한 주택배분 외 4개 지표	-
교육과 시민참여	• 투표참여 외 7개 지표	-
인간 존엄성	• 기초수요(경제적 기회) 외 9개 지표	-

총 8개 부문 66개 지표로 구성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차원	지표	비고
환경	• 대기질 • 보행자 친화적 거리 외 5개 지표	-
인구 및 자원	• 인구 외 6개 지표	-
경제	• 소득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 상위 10위권 업체에 집중된 고용비율 • 실업 • 개인소득의 배분 • 빈곤 아동 • 기초생활에 필요한 노동시간 • 지역 재투자 외 3개 지표	-
청소년 및 교육	• 고등학교 졸업률 • 문맹률 외 6개 지표	-
건강 및 지역	•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외 7개 지표	-

총 5개 부문 40개 지표로 구성

II. 개념의 정립

II-2. 유사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內 주요 성과지표(2/3)

지속가능경제 복지지수 (ISEW)

- 소득수준, 분배 형평성,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정도를 기반으로 계산
- 경제복지의 증진요소와 감소요소를 합하여 산출

UN 산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UNCSD)

- 1996년 Agenda21 포괄 132개 지표 초안 제시
- 시범실시를 통한 검증 후 2001년 회원국 적용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 선정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자원	성과지표	비고
소득분배 고려 소비	• 개인소비에 대한 가중치 값	-
서비스 양 (+)	• 가사노동 가치 • 내구성소비재 서비스 • 교육과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 외 1개 지표	-
개인서비스內 과대평가 부분 (-)	• 내구성소비재에 대한 지출 • 출근비용 • 대기오염 비용 외 6개 지표	-
지속가능 파괴활동(-)	• 비재생자원 고갈비용 • 장기적 환경오염 피해비용 외 2개 지표	-
자본구성(+)	• 순자본의 증식 • 자본투자의 국내외적 구성변화	-

총 5개 부문 20개 성과지표로 구성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자원	성과지표	비고
사회	• 빈곤인구비율 • 지니계수 • 실업률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중등학교 순졸업률 외 13개 지표	-
경제	• 1인당 GDP • 부채/GDP • 에너지이용도 외 11개 지표	-
환경	• 온실가스 배출 • BOD 외 17개 지표	-
제도	• GDP 대비 R&D 지출 •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외 4개 지표	-

총 4개 부문 57개 성과지표로 구성

II. 개념의 정립

II-2. 유사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內 주요 성과지표(3/3)

2002 건설교통부 2002 지속가능 도시평가

- 지역공동체 구성원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표는 가급적 일반인 이해가 쉽도록 개발
- 학회, 시민단체, 언론 참여 50여명 평가단 구성 브레인 스토밍 후 전문가·공무원 300여명 참가 공청회를 거침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차원	평가지표	비고
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인당 공원·녹지 면적 • 지방의제21 추진실적 외 8개 지표 	-
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정보공개청구 • 주민청안 유도 외 7개 지표 	-
도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업 고용비율 향상도 • 사회복지비용 향상도 외 16개 지표 	-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확보수준 • 홈페이지 이용빈도 외 8개 지표 	-
녹색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시설의 정비실적 • 교통사고율 감소 외 7개 지표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정도 • 옥외문화공간 조성 건수 및 면적 외 12개 지표 	-

총 6개 부문 70개 성과지표로 구성

매일리서치 지자체 민선4기 중간평가

- 2008년 실시·발표
- 광역지자체: 5개 부문 53개 항목
- 기초지자체: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모든 항목에 계량화 자료를 사용

연구모형 구성차원 및 성과지표

차원	평가지표	비고
행정·재정 공공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효율성 • 지방채 수입 비율 외 8개 지표 	-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인구비율 • 주민정보화 교육수준 • 인구성장률 외 7개 지표 	-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면적비율 • 1000인당 사회복지 시설 수 • 주택 보급률 외 9개 지표 	-
인프라스트럭처·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포장율 • 대기업비율 • 지역고용율 • 사업체 규모 외 9개 지표 	-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하역능력 외 7개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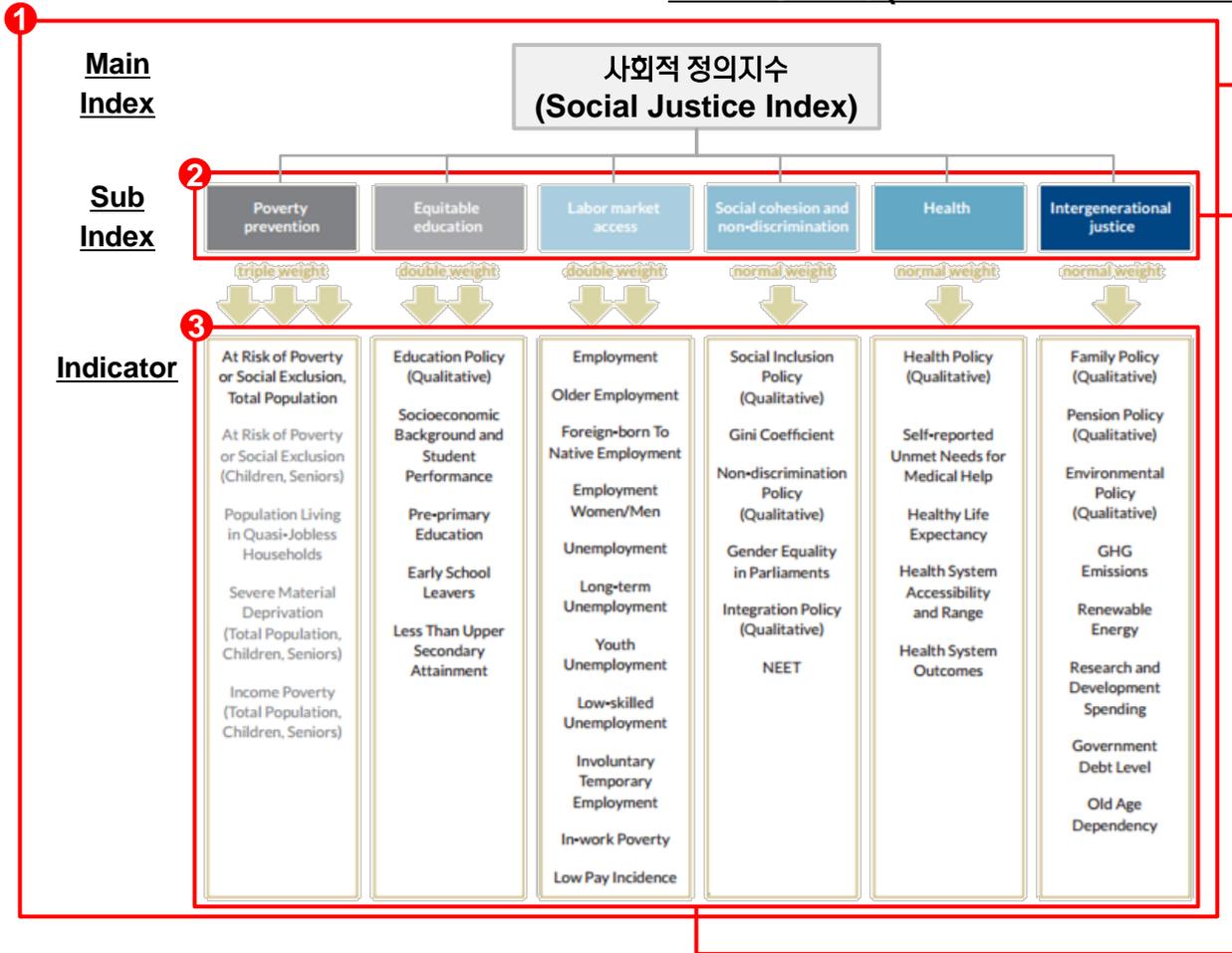
총 5개 부문 53개 성과지표로 구성

II. 개념의 정립

II-3. 유사 지수체계 벤치마킹

베델스만 연구소의 사회적 정의지수(SJI)는 사회적 정의에 영향을 받는 정책범위를 기준으로 Sub-Index가 설정되었으며, 각 Sub-Index에 대응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Indicator로 지정 및 이에 대한 측정항목(Item)으로 구성.

사회적 정의지수(Social Justice Index)



- 1 구성체계(Hierarchy)**
 - Index-Indicator-Item의 계층 구조로 설계
 - Indicator당 1개의 I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4단계 계층으로 설계되어 있음
- 2 지수의 대응범위**
 - Dimension이라는 용어로 Sub-Index와 동일한 지수의 대응범위를 설정
 - 6대 Sub-Index는 사회적 정의에 영향을 받는 정책범위를 기준으로 설정
- 3 산출방식**
 - Indicator라는 용어로 측정항목의 상위개념을 반영
 - 각 Indicator는 하나의 측정항목으로 정의되나 SJI의 Indicator는 특정정책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개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차이 (측정항목의 다수가 Output 관점으로 구성)

II. 개념의 정립

II-3. 유사 지수체계 벤치마킹

베델스만 연구소의 지속가능 정부지수(SGI)는 SJI의 구성요소와 유사하게 3단계 계층 구조로 설계. 세부적으로는 행정영역을 기준으로 Sub-Index가 구성. 종합 Index는 산출이 가능하나 특화된 3대 분야별 지수값을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 정부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1 구성체계(Hierarchy)

- Index-Indicator-Item의 계층 구조로 설계 (Category-Criterion-Indicator라는 용어로 표현)
- ① 국가정책의 성과, ② 민주주의의 수준, ③ 가버넌스 우수성의 3대 분야별 Index로 구성(국가정책의 성과 및 가버넌스는 Sub-Index를 포함)
- 종합 Index는 제시하지 않고 특화된 3대 분야별 지수값을 제시

2 지수의 대응범위

- Category라는 용어로 Sub-Index와 동일한 지수의 대응범위를 설정
- 6개의 Sub-Index는 행정영역에 대응되는 요소가 혼재되어 설계
- 지수의 특성상 구성체계는 Output&Outcome 성격의 지표로 구성

3 산출방식

- Criterion이라는 측정항목의 상위개념을 반영 SGI의 Indicator라는 용어로 Item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의 측정항목으로 정의
- 단일 측정항목의 값이 사용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측정항목은 복수개의 관측치를 표준화·정규화 하여 혼용

II. 개념의 정립

II-3. 유사 지수체계 벤치마킹

뉴욕市的 CPR은 전반적인 시정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지수 체계로의 의의는 갖기 어려움. 직접적인 CPR의 벤치마킹 적용은 어려우나 지표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세부 Dataset의 축적 이후에는 CPR 이상의 Tracking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ew York City CPR(Citywide Performance Re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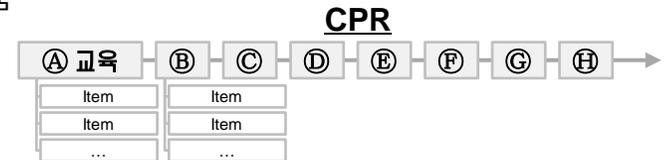


1 지수 개발목적

- 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전반적인 시정영역에 대한 성과관리 목적(평가보다는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 차원)
- 뉴욕시 산하 40여개 기관의 중점관리지표를 집약한 시정의 Dashboard 역할

2 구성체계(Hierarchy)

- 8개(교육, 인프라, 공공안전 등)의 영역으로 관리지표 카테고리 설정
- 전반 시정 상의 관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성과지수 체계로서의 의의는 갖기 어려움



3 지표 특성

- 대다수의 관리지표는 월 단위 통계수치로 연 단위 통계수치와 병행해서 사용되며, 구단위로도 Drill-Down된 세부 정보를 나타냄
- 관리목적상 Output&Outcome 성격의 지표로 구성

4 정보제공

- 전년비, 전년동월비 실적증감, 지표별 데이터 집계시점, 데이터 분산 등을 제시
- 해당 지표의 증감이 유의미한 증감 혹은 오차범위인지 분석결과를 색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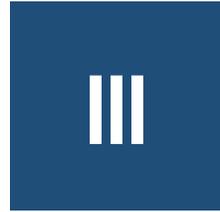
II. 개념의 정립

II-3. 유사 지수체계 벤치마킹

지수의 점수화와 관련해서는 ①개념의 완성 수준, ②지수체계의 연속성, ③성과해석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이에 대응해 해외 글로벌 인덱스 참조, 유연한 구조의 지수체계 및 평정값 의미해설을 위한 ‘단계모형’ 방식의 지수체계를 기획.

벤치마킹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구성형태 설계 방향

구분	사전 고려 Risk	해결방안	성과지수 구조에 연계성
1 미정립된 개념의 단계적 완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방향(노동, 공정, 상생)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향후 정부·시 정책 정교화 및 고도화를 사전 고려 필요 대외 홍보대비 이론적인 근거 명확화 필요 	해외 우수 글로벌 인덱스 벤치마킹 및 이론근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의 유사 개념 대상의 지수, 도시 관련 지수, 성과분석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문헌검토 실시 해외 글로벌 인덱스의 구성체계, 점수환산 방식, 포함된 측정항목 등 연구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요소들을 활용
2 지수체계의 연속성 및 관리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정책의 본격 확산 및 목표달성에 따라 실천과제의 추가, 교체 등 변경발생 예상 실천과제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수체계 연속성 확보로 지속 관리 필요 측정항목 폐지, 개선 상황에 대안 필요 	구성요소의 유연한 반영이 가능한 체계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으로 검증된 층위체계 채택 및 활용 다각적 문헌연구, 전문가 델파이, AHP 워크숍 등을 통해 Indicator에 대한 정의 도출 및 수정보완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지수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확보
3 성과 해석에 대한 우려사항 사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항목이 부서 성과지표化 혹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실무부서 부담 발생 단순 증감 수준으로 해석 시, 과대/과소평가 발생 우려 및 부문별 정책성과의 양호/미흡 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평정값 의미해설을 위한 ‘단계모형’ 방식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등급 측정척도에 기반한 단계모형 방식을 차용 (수준에 대한 인지 용이성은 일반 수치증감보다 우수) 개별 측정항목에 대한 사전/사후 처리를 통해 현재 서울시의 정책성과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유도



모형의 설계

III. 모형의 설계

III-1. 모형의 기본 구조

지수와 지표의 계층수준을 고려해 체계적인 접근을 추진함. 경제민주화 4대 원칙·목표(Direction)는 복수의 지표(Indicator)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지표는 측정가능한 항목(Item, Measure)으로 구성.

지수, 지표의 계층수준에 대응한 차별적 접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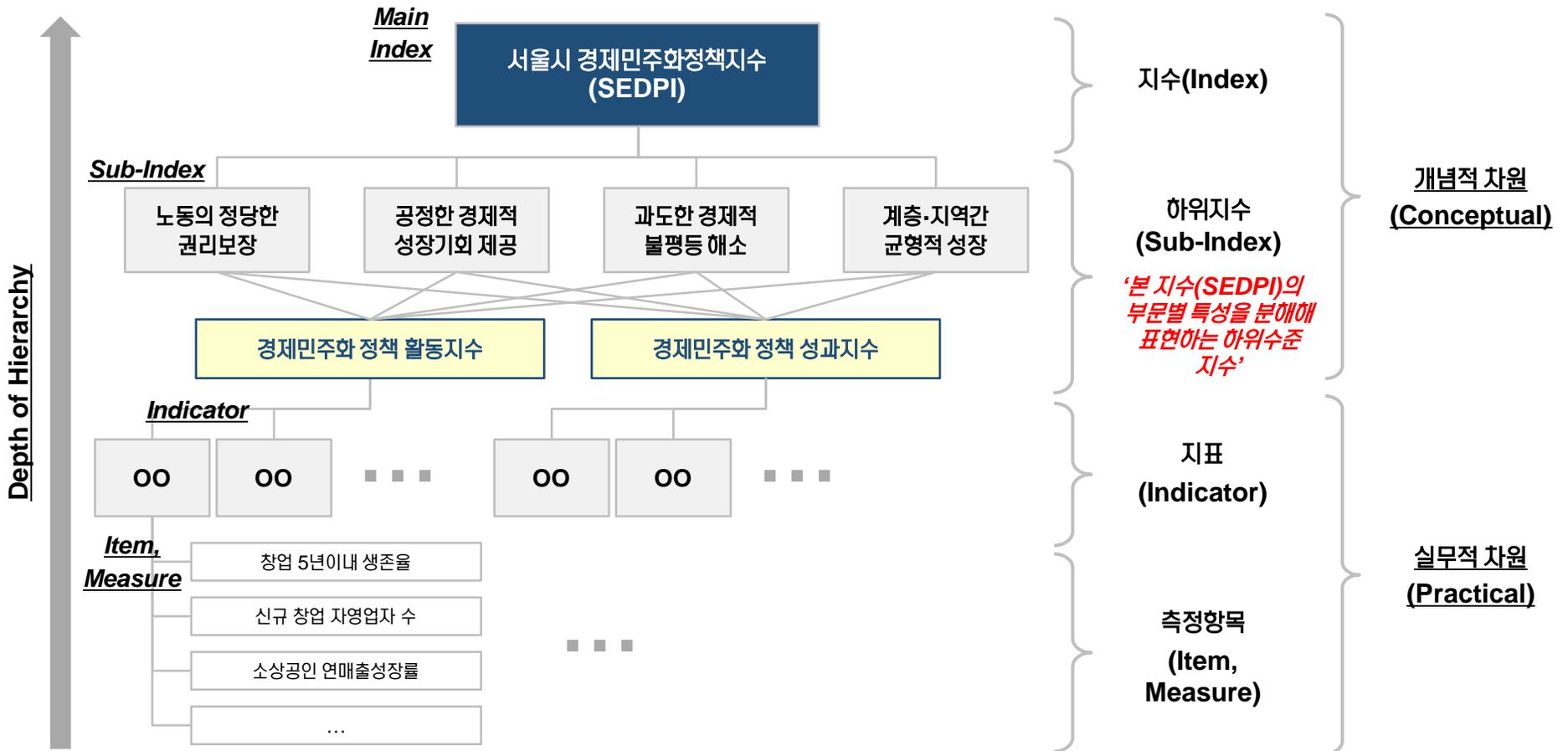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1. 모형의 기본 구조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지수(Seoul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y Index : SEDPI)는 하위지수(Sub-Index)로 4대 방향성과 함께 활동지수(AI, Activity Index)와 성과지수(PI, Performance Index)라는 하위지수로 구분.

하위지수(Sub-Index)의 추가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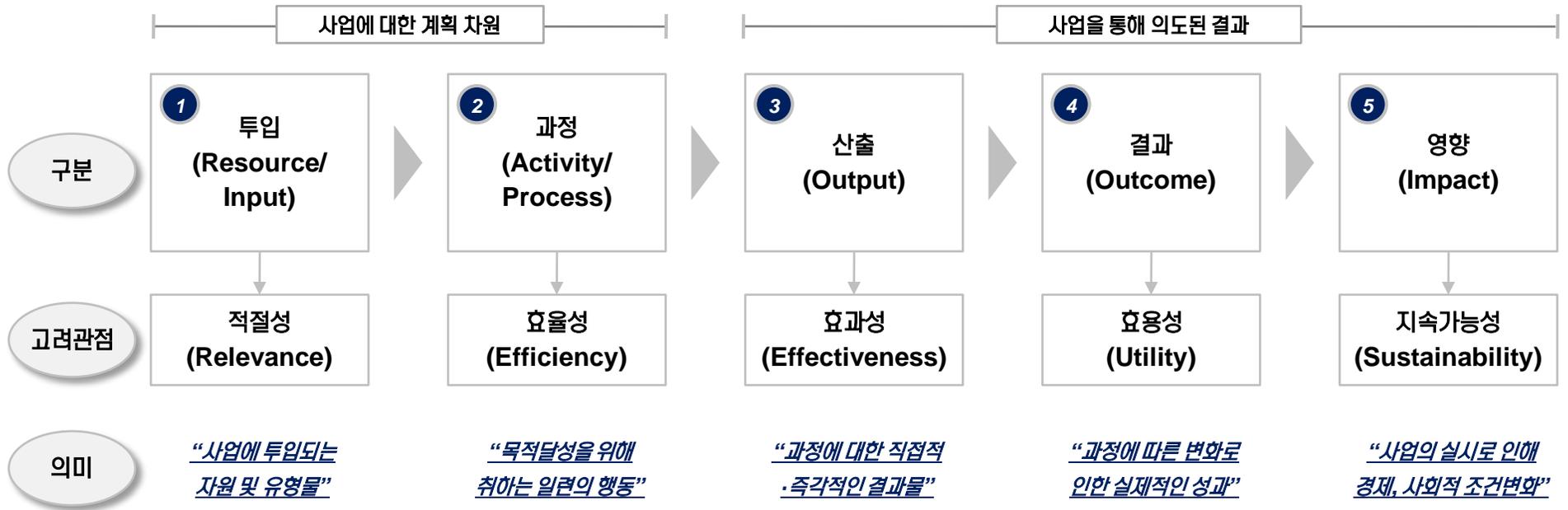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1. 모형의 기본 구조

측정항목의 선별과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논리모형(Logic Model)을 채택하였으며, 논리모형은 사업의 구성요소, 주변여건 및 각 요소·상황에 대한 연관관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으로 구성.

일반적인 Logic Model의 기본 구성체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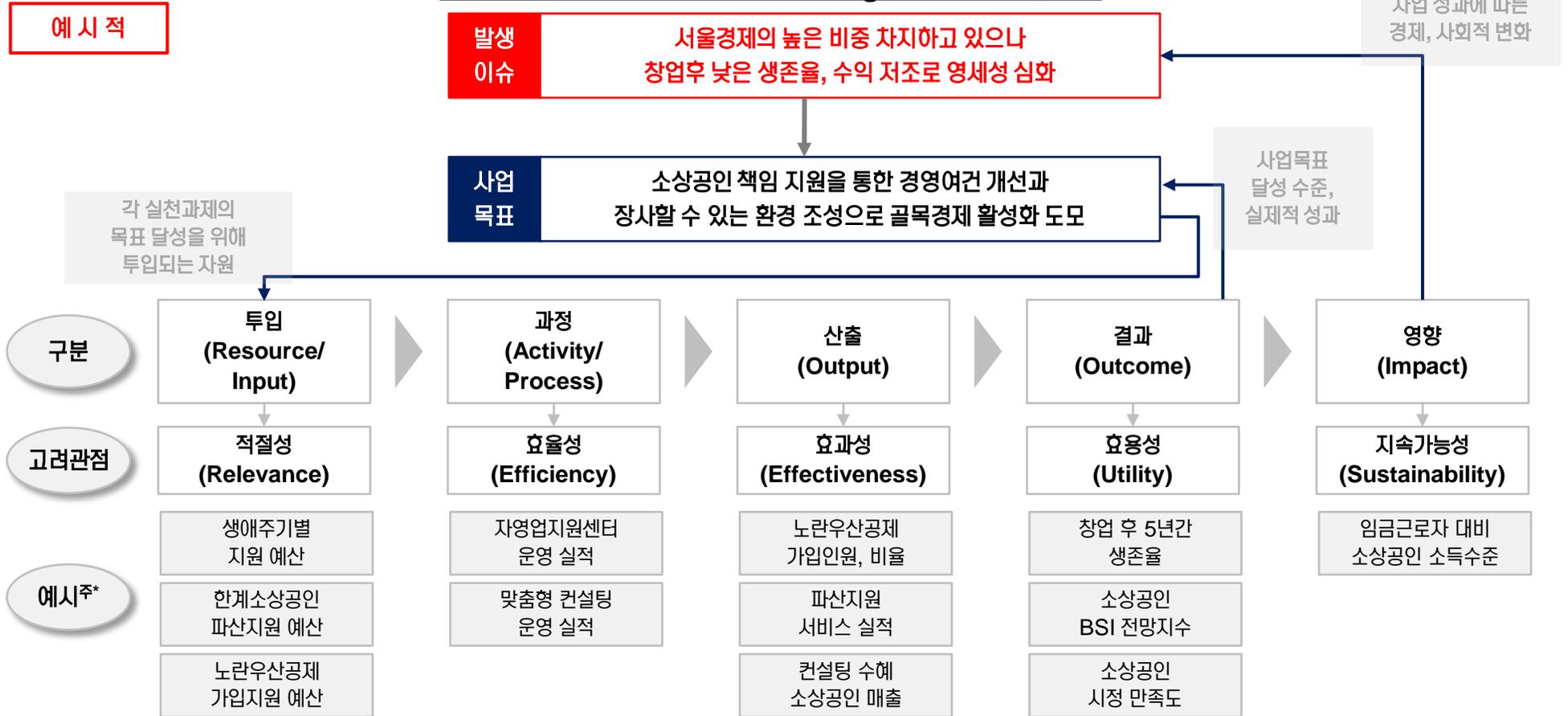
- 논리모형(Logic Model)은 사업의 구조, 내용, 방향 등의 시각화를 통해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쉽게 설정하도록 지원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지표 개발에 논리모형을 활용해서 세부 사업단위로 구성요소들을 도해하고자 함

III. 모형의 설계

III-1. 모형의 기본 구조

사업의 구조, 내용, 방향 등의 시각화를 통해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쉽게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도해. 도해결과를 토대로 성과지수의 개념적 구조와 각 구성요소를 대변할 수 있는 잠재적 측정지표들을 도출.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에 대한 Logic Model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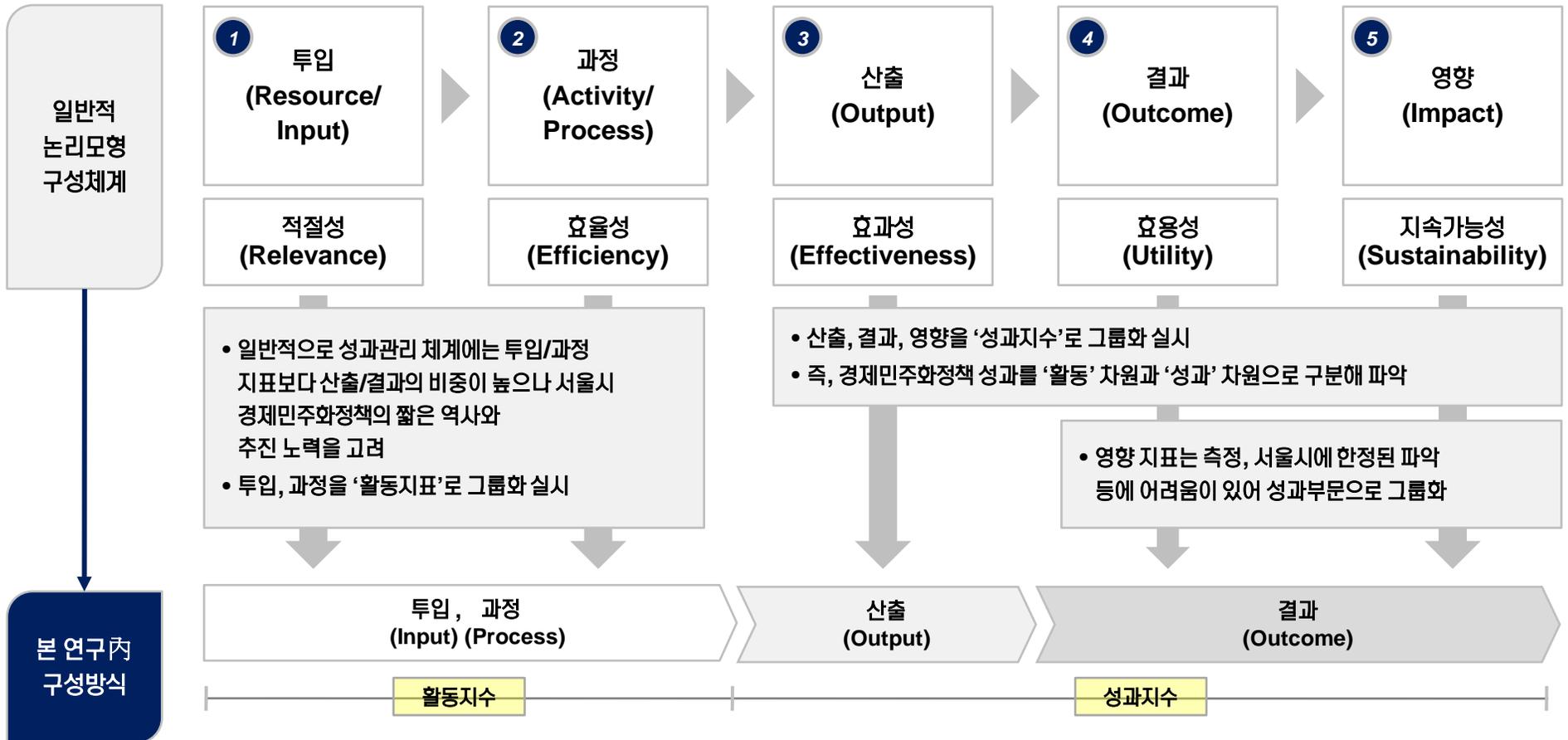
주) 실천과제①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기준으로 한 예시임

III. 모형의 설계

III-1. 모형의 기본 구조

논리모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의 도해과정은 다음과 같은 연구 특수성과 제약요인을 감안해 ‘활동’ 차원과 ‘성과’ 차원으로 구분해 파악. 추가로 성과지표 도출 작업 및 결과해석의 용이성 확보차원에서 ①투입·과정, ②결과, ③성과 부문으로 단순화하여 실천과제들을 도해.

Logic Model 적용방식의 재구성 방안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차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실천과제는 부재상황으로 향후 정책범위 확대 및 이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	■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원칙목표1)에 대응되는 소상공인 대상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서울시 추진 정책이 부재 상황으로 분석범위에서 1차적으로 제외
- 향후, 본 영역에 대한 정책범위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대응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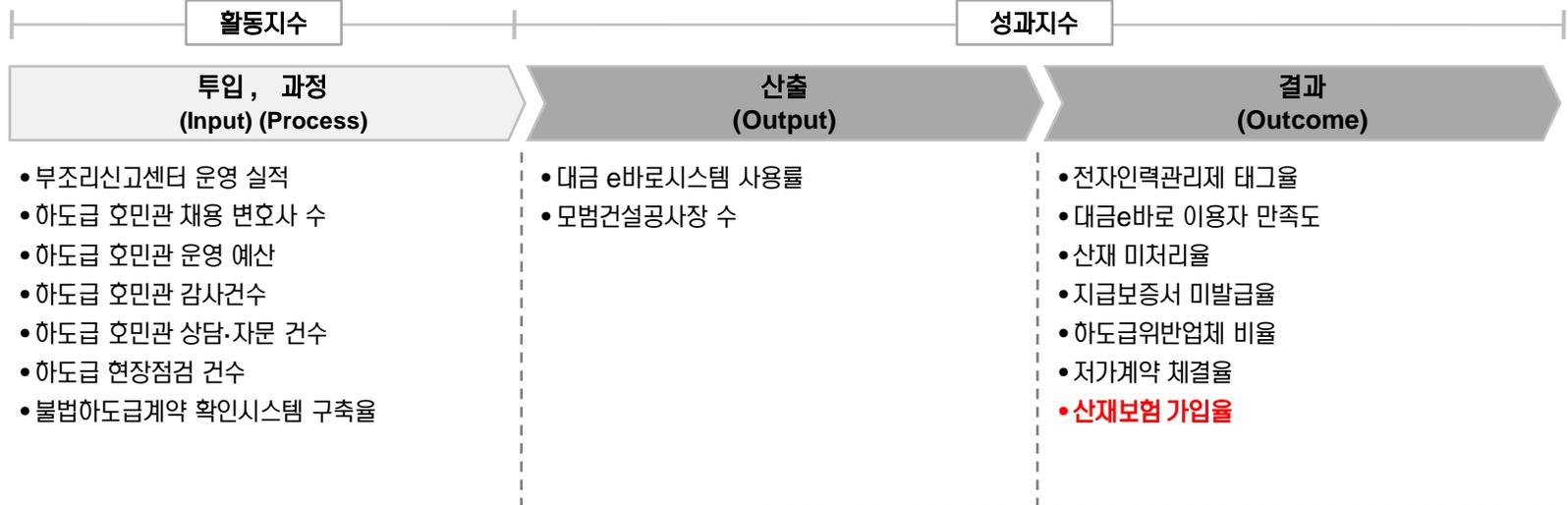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실천과제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양극
노동의 정당관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편도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적 확산				

노동의 권리보장 부문 중소기업 수혜 대상 지표 검토

10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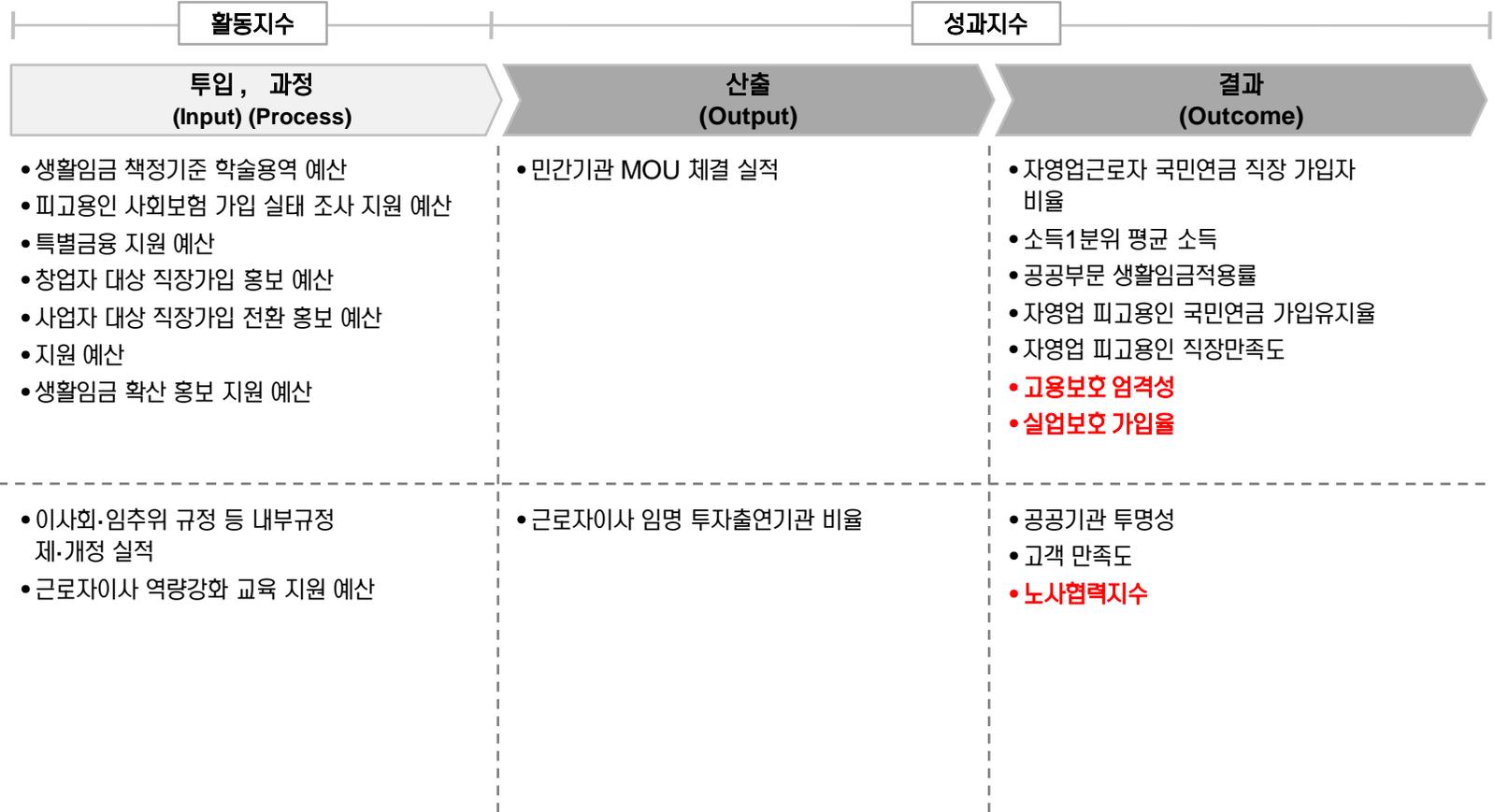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차원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실천과제로는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자영업근로자 4대보험 가입 촉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등이 해당되며,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노동 권리보장 부문 일반 근로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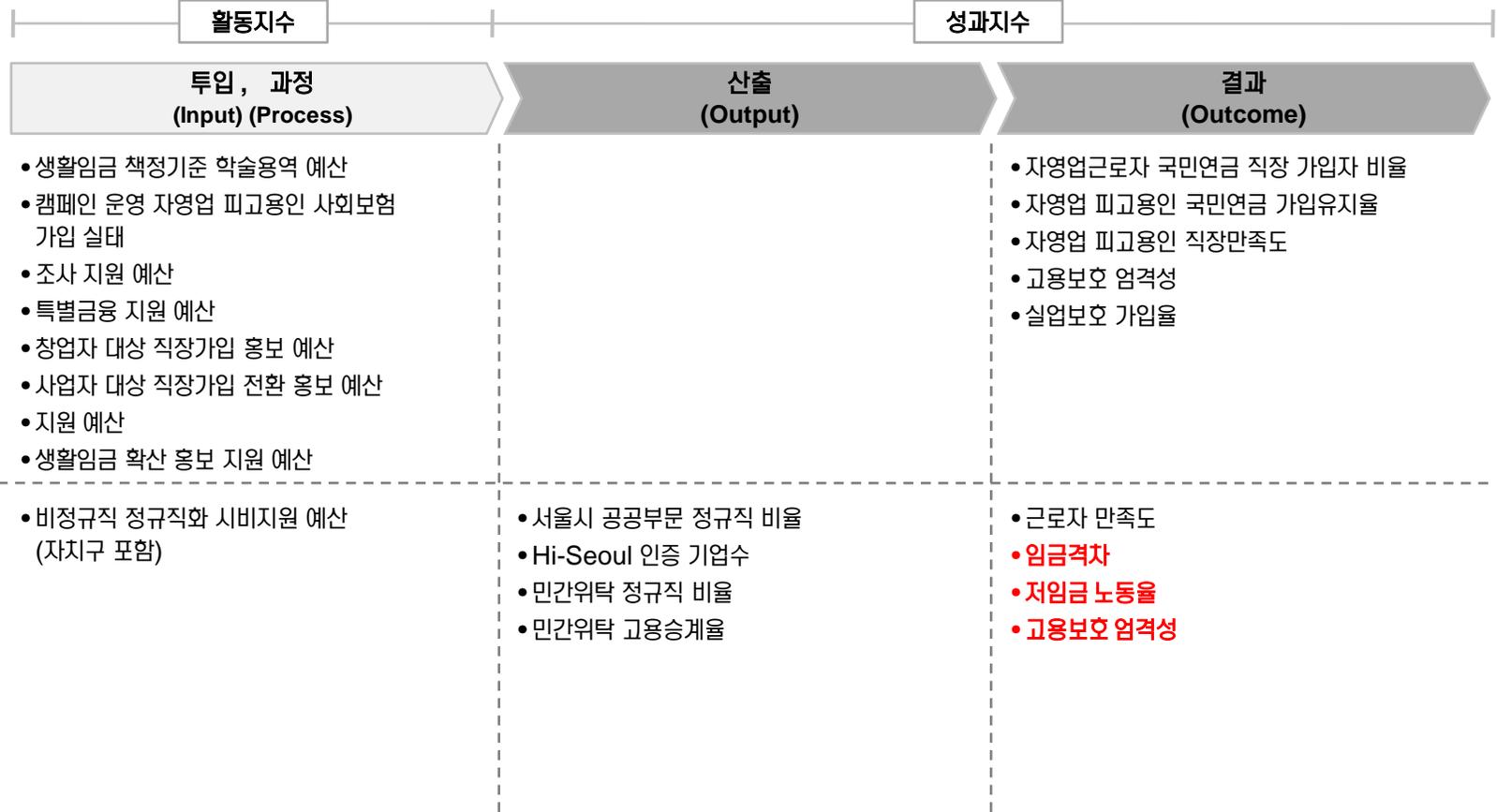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차원

노동 권리보장 부문 일반 근로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정당권리				
공정한성장기회				
불평등해소				
경제민주화사회의확산				



주) 노사협력지수,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율, 고용보호 엄격성은 Global Index에 포함

III. 모형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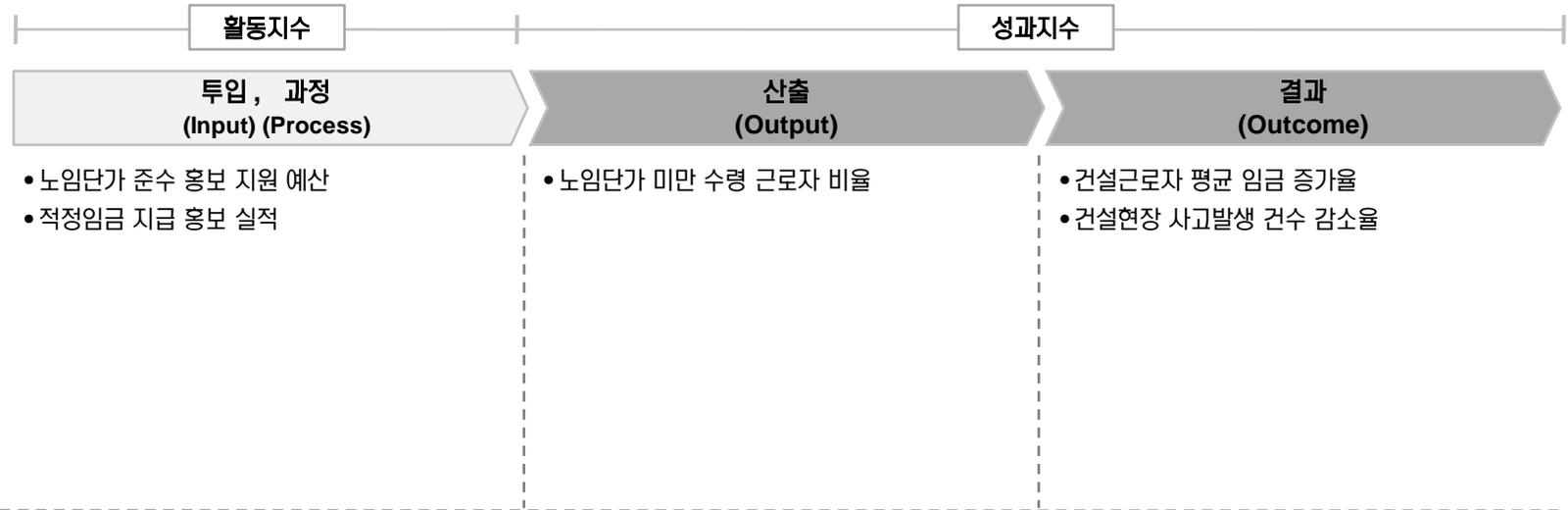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차원

노동 권리보장 부문 일반 근로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소외계층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 정당한 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23

**불공정
하도급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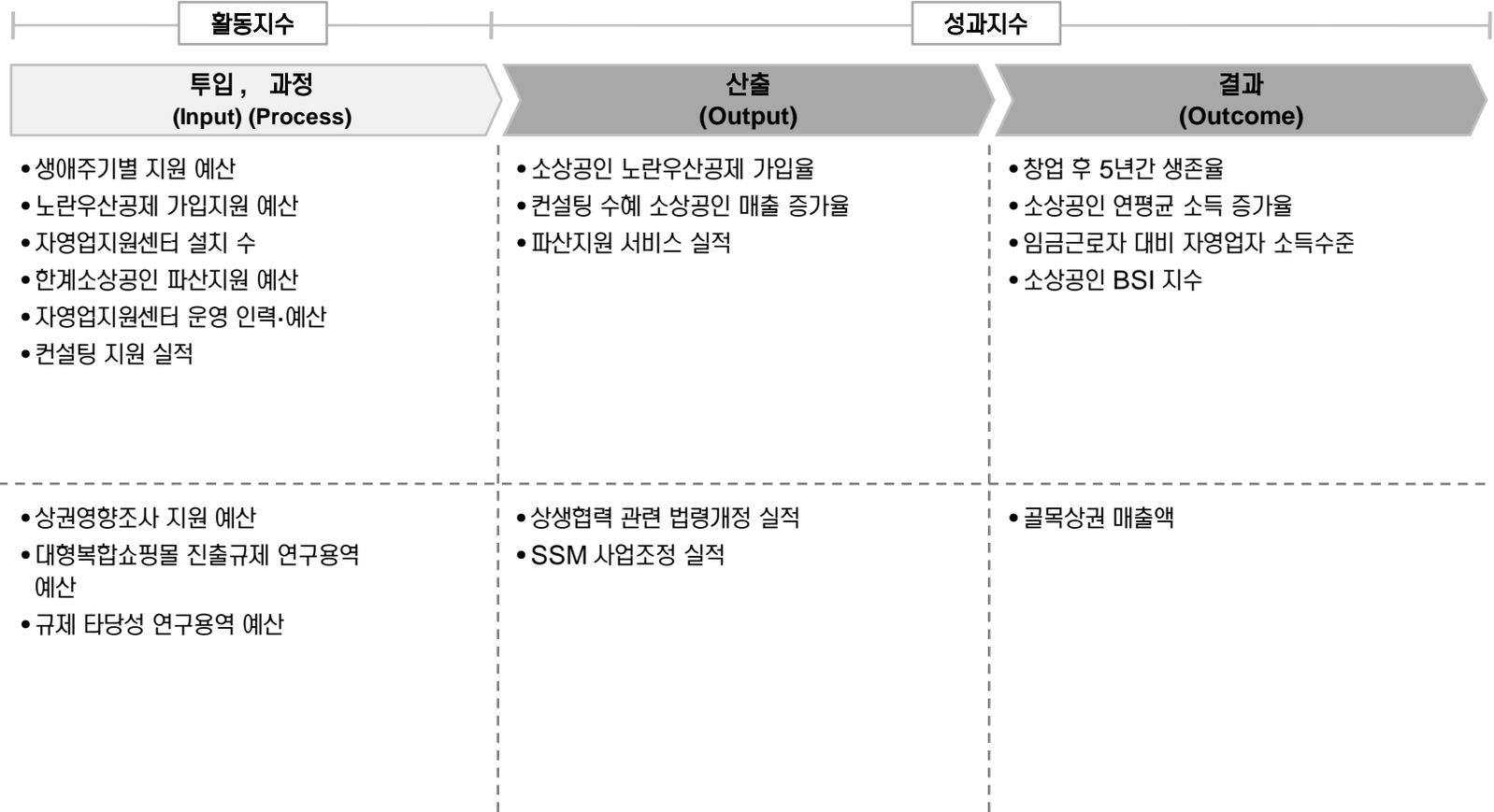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실천과제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소상공인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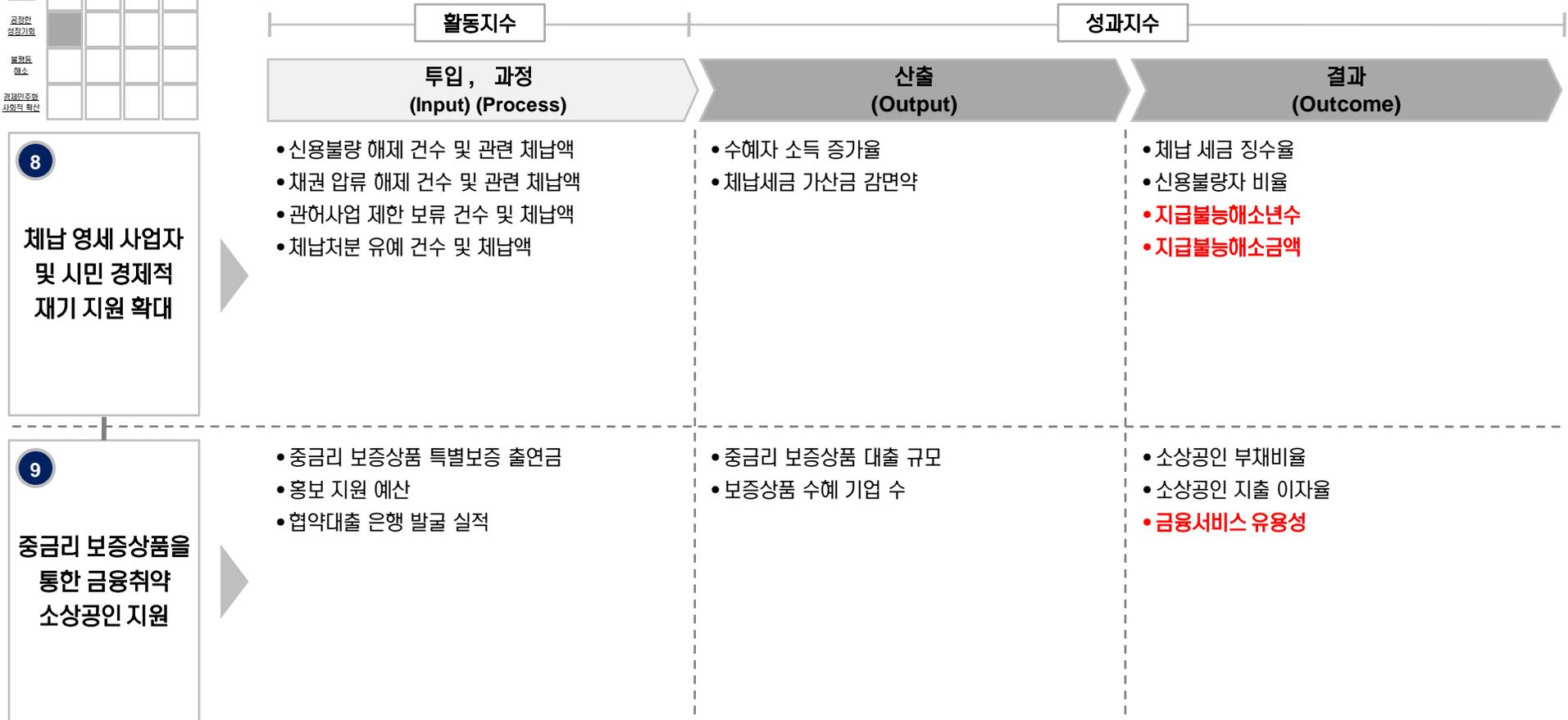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소상공인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소상공인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정당권리				
공정한성장기회	■			
분쟁도해소				
경제민주화실현의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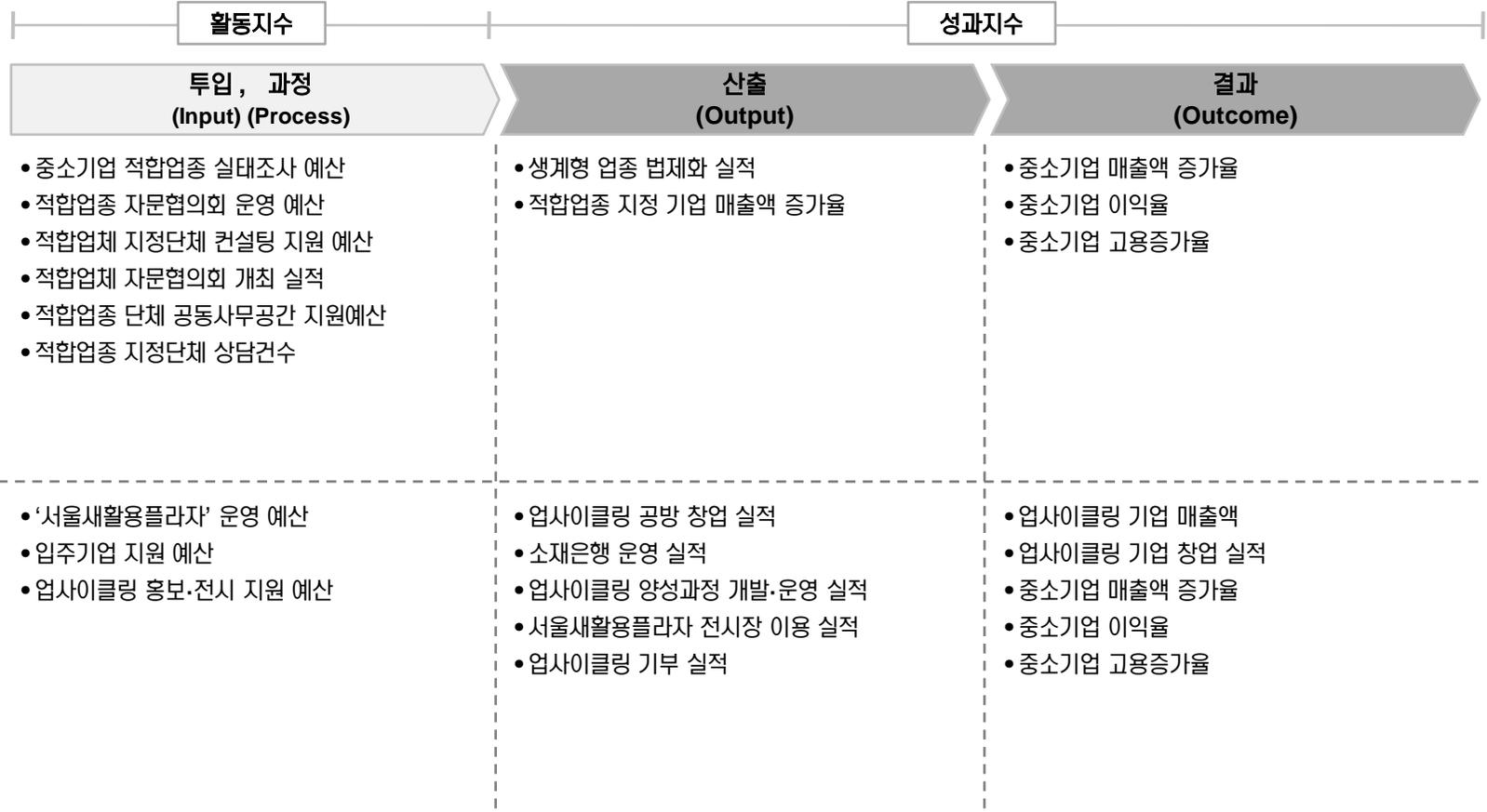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공’ 등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중소기업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실천과제는 부재상황으로 향후 정책범위 확대 및 이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사회의 확산				

-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의 제공(원칙목표2)에 대응되는 일반 근로자 대상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서울시 추진정책이 부재 상황으로 분석범위에서 1차적으로 제외함
- 향후, 본 영역에 대한 정책범위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대응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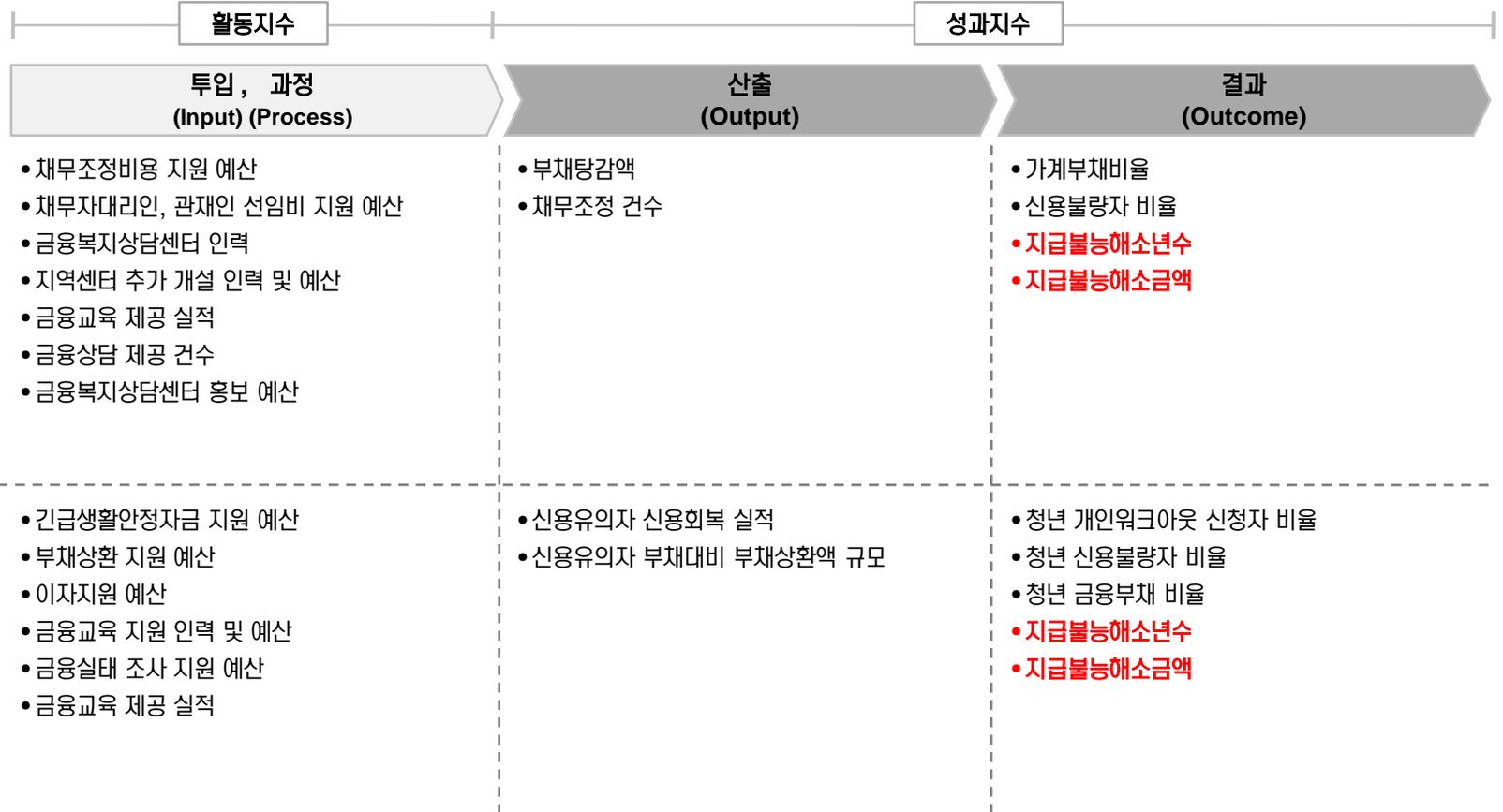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실천과제로 ‘금융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등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경제적 약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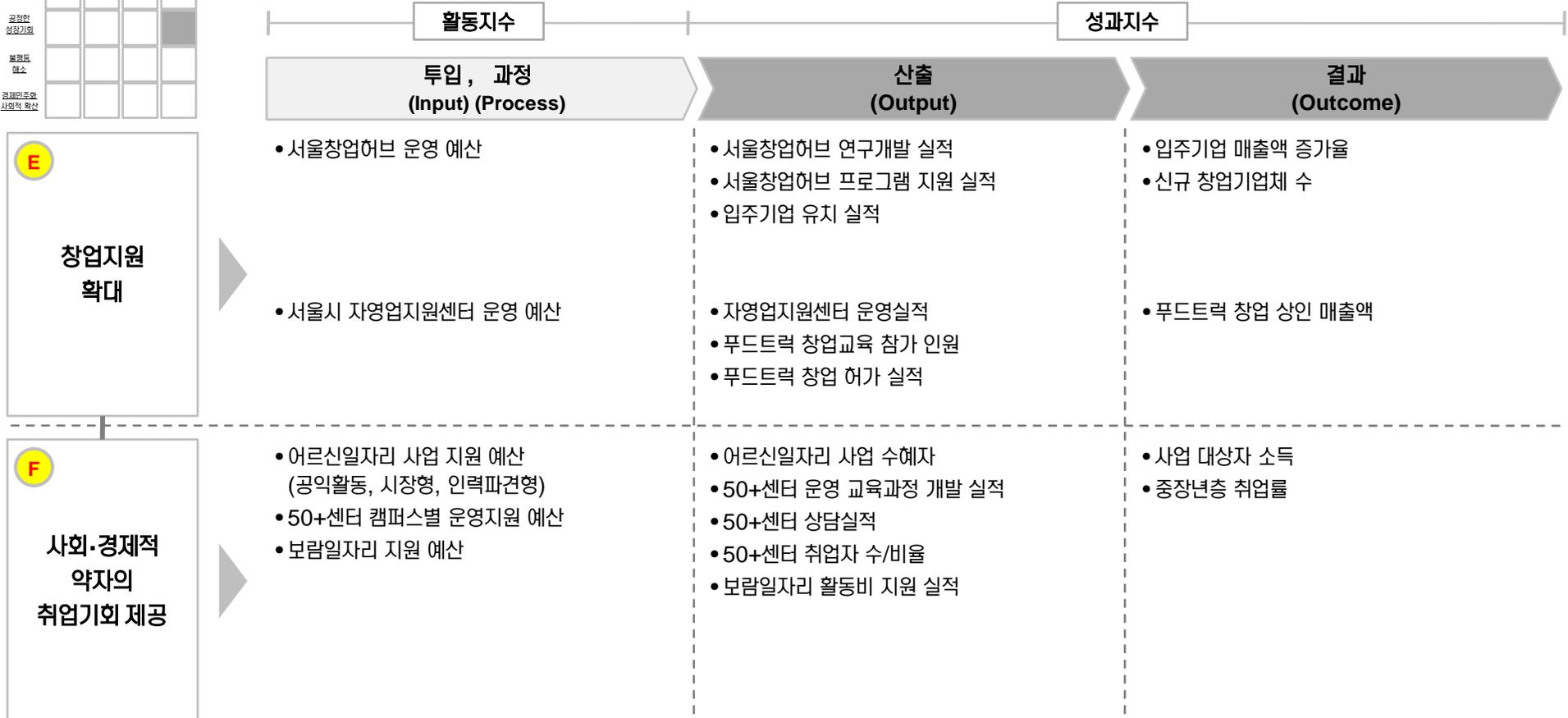
주) 지급불능해소년수, 지급불능해소금액은 Global Index에 포함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경제적 약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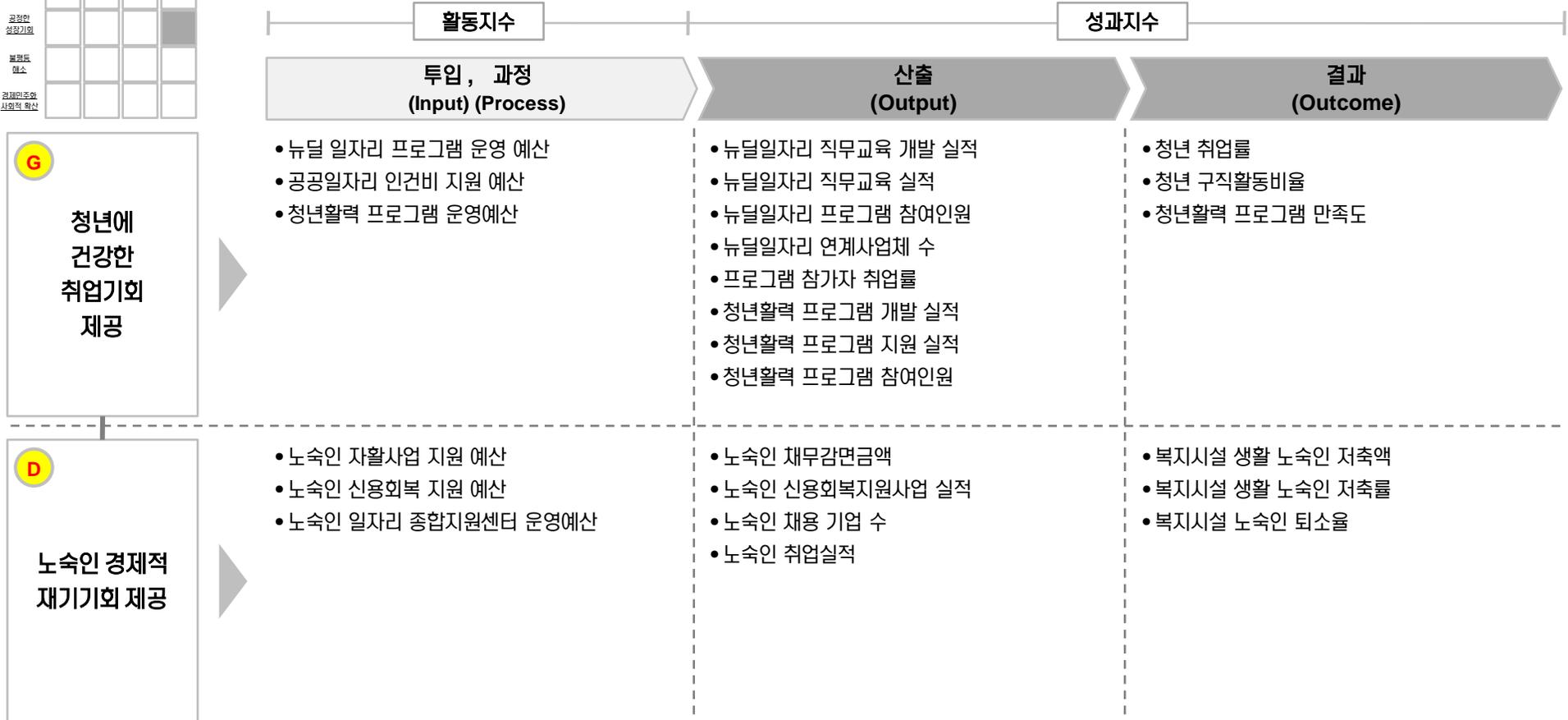
주) 지급불능해노년수, 지급불능해소금액은 Global Index에 포함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차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부문 경제적 약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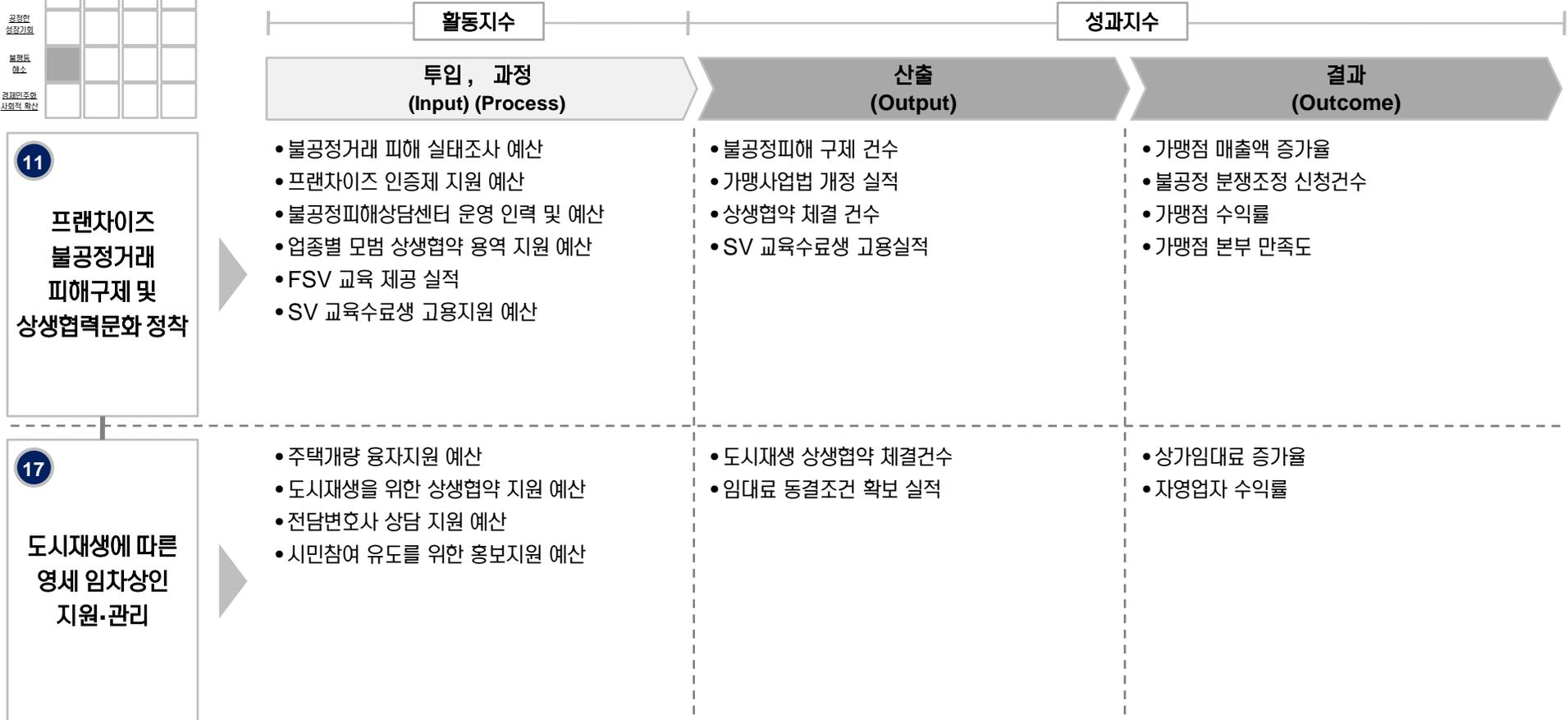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

소상공인 대상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실천과제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관리’ 등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관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 소상공인 수혜 대상 지표 검토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실천과제는 부재상황으로 향후 정책범위 확대 및 이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 중소기업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적 확산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실천과제는 부재상황으로 향후 정책범위 확대 및 이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정당권리				
공정한성장기회				
불평등해소				
경제민주화사회의확산				

-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원칙목표3)에 대응되는 일반근로자 대상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서울시 추진 정책이 부재 상황으로 분석범위에서 1차적으로 제외
- 향후, 본 영역에 대한 정책범위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대응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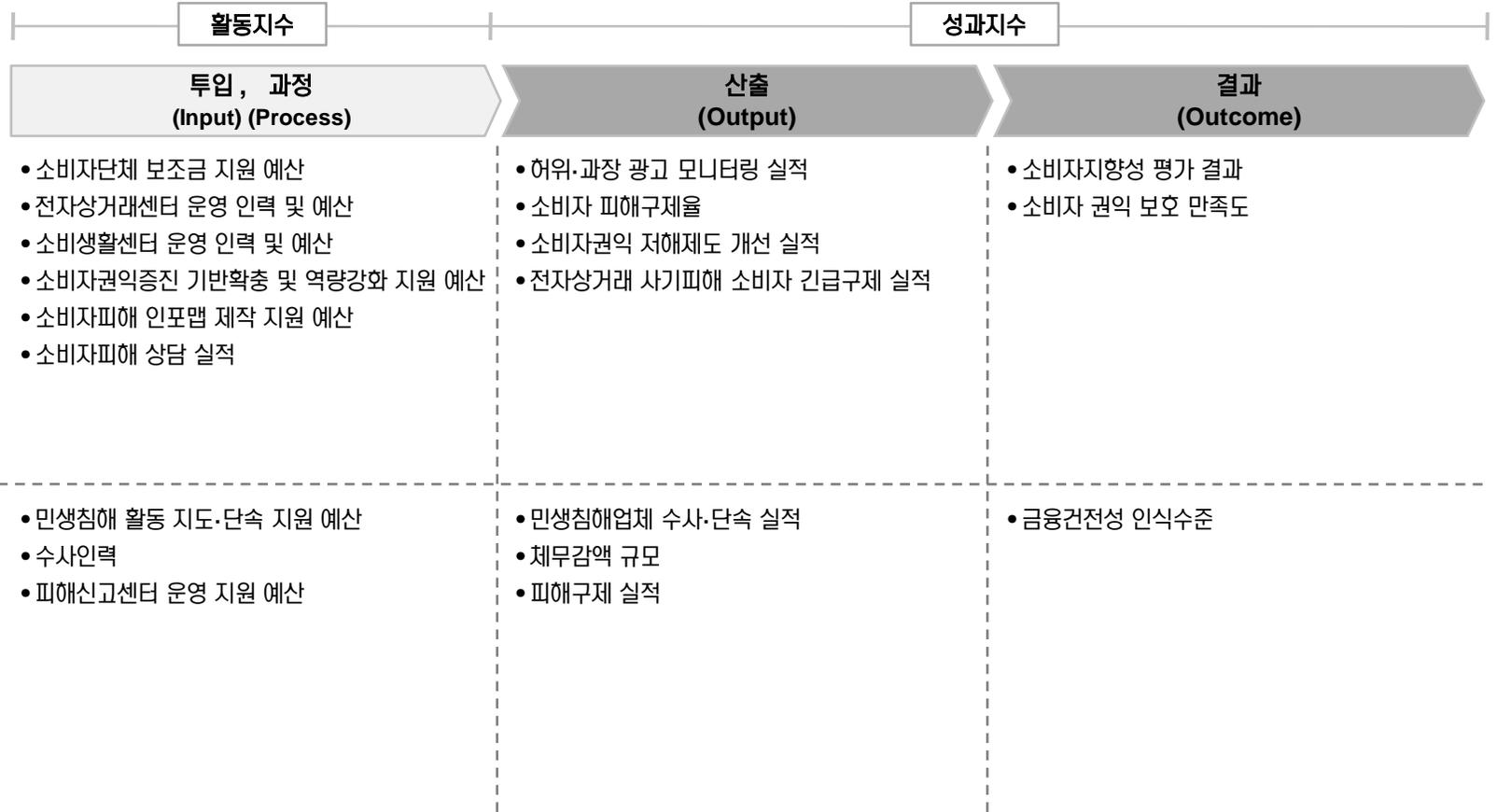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

경제적 약자 대상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실천과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등이 해당,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 경제적 약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실천과제는 부재상황으로 향후 정책범위 확대 및 이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사회적 확산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원칙목표4)에 대응되는 소상공인 대상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서울시 추진정책이 부재 상황으로 분석범위에서 1차적으로 제외
- 향후, 본 영역에 대한 정책범위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대응한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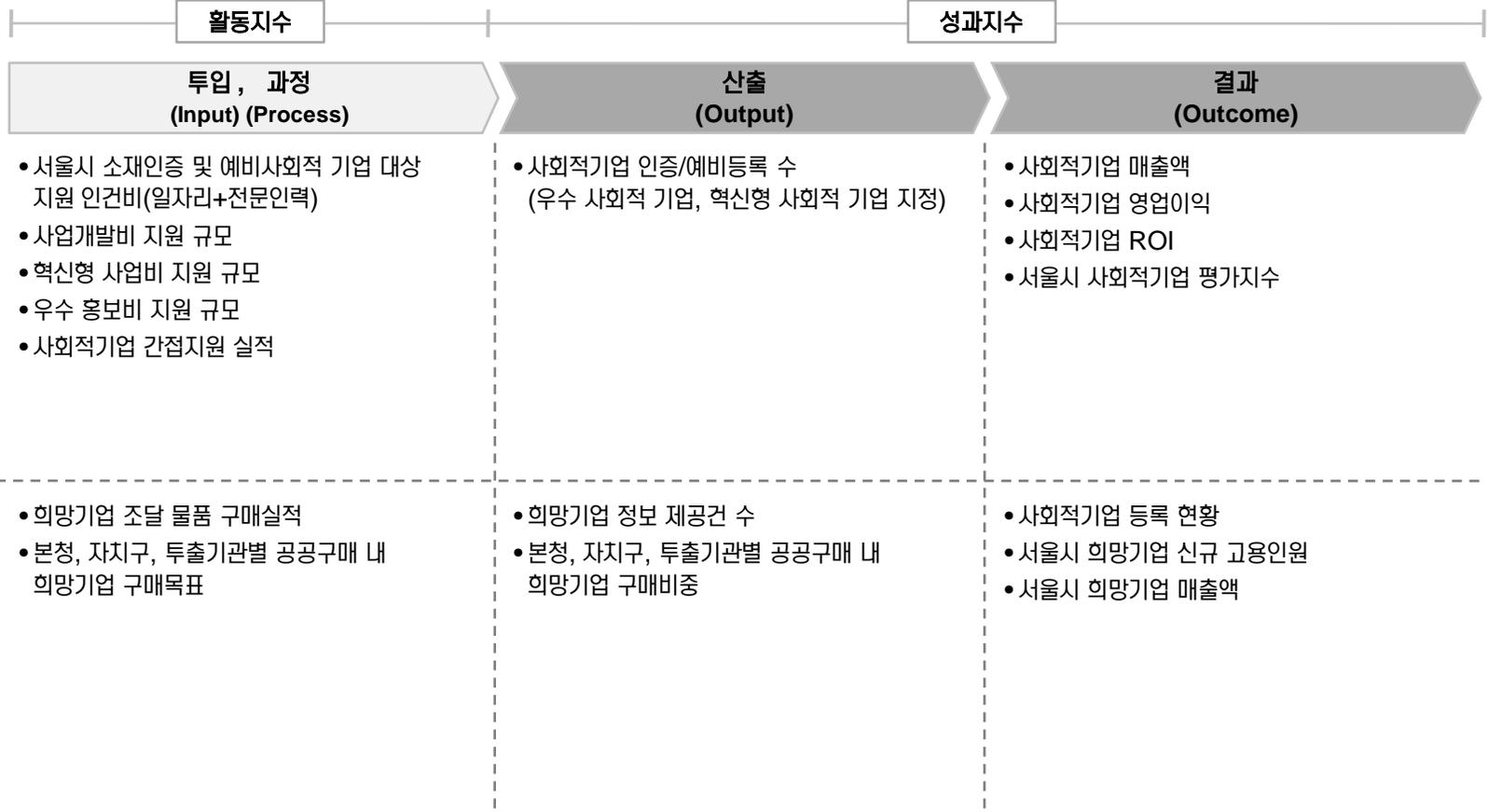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실천과제로 ‘사회적 경제 확산지원’, ‘장애인 기업의 균형성장 기회 제공’ 등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부문 중소기업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사회적 확산				



III. 모형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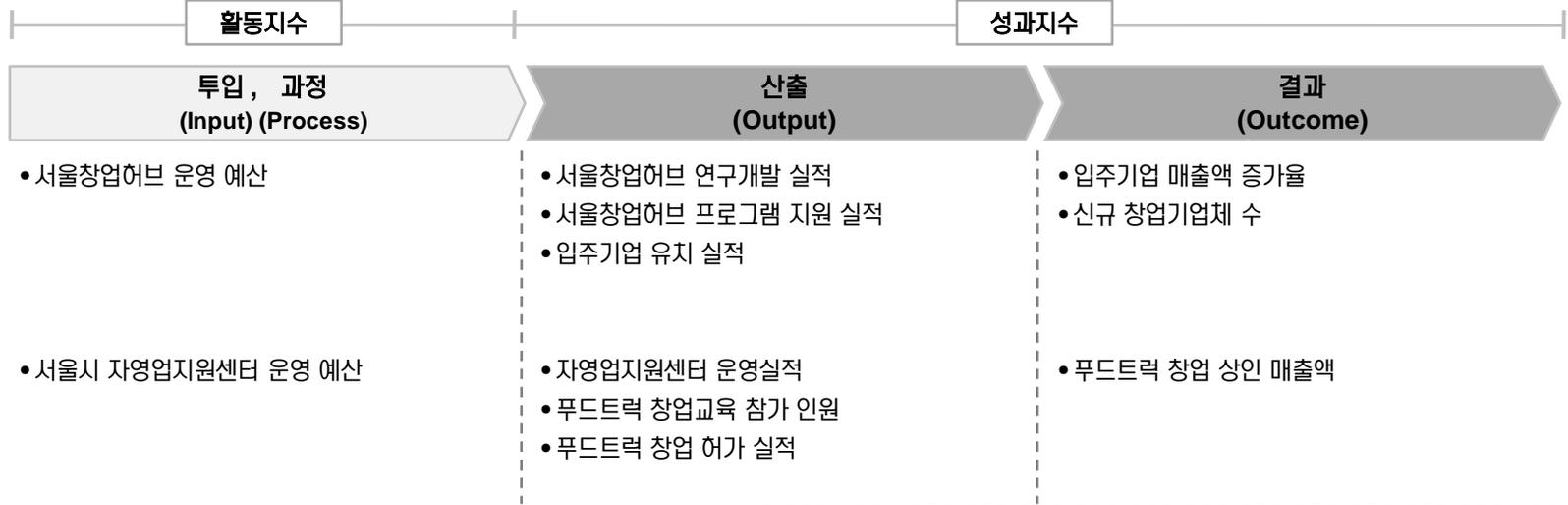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부문 중소기업 수혜 대상 지표 검토(계속)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경제적약자
노동의정당권리				
공정한성장기회				
불평등해소				
경제민주화사회적확산				

H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원**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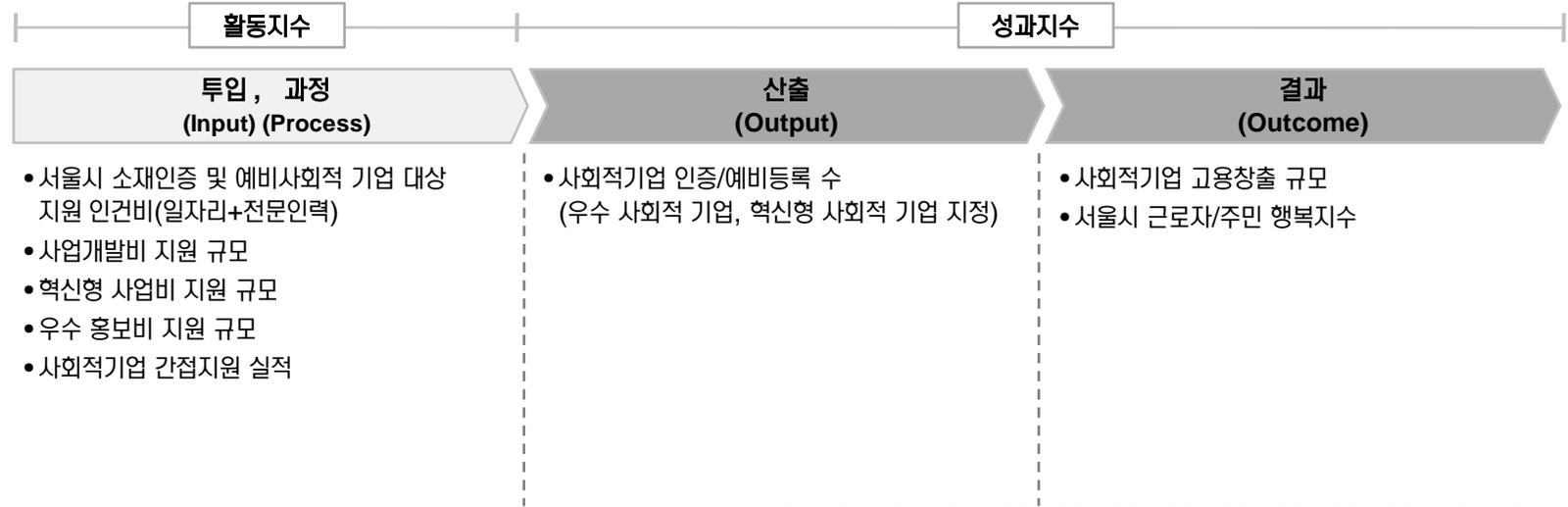
일반 근로자 대상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실천과제로 '사회적 경제 확산 지원'이 해당되며,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계층·지역간 균형 성장 부문 일반 근로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사회적 확산				

A-2

사회적경제
확산 지원



III. 모형의 설계

III-2. 논리모형을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도해 >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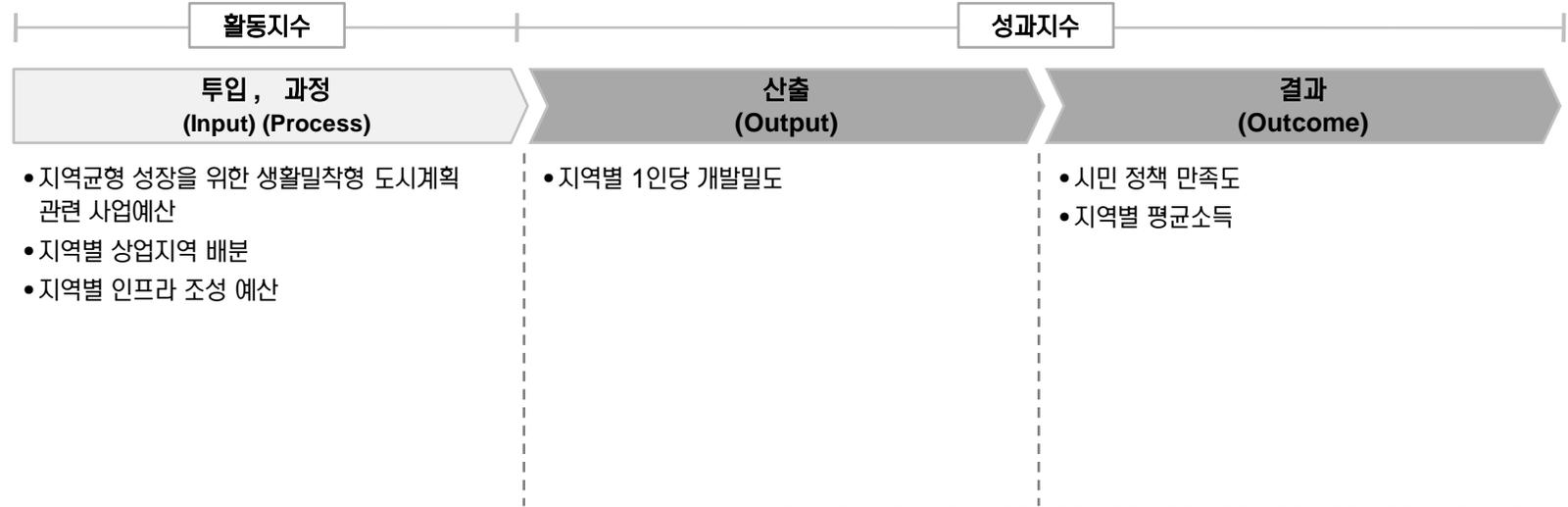
경제적 약자 대상 경제민주화의 확산 실천과제로 '지역간 격차 해소 지원'이 해당되며, 부문별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계층·지역간 균형 성장 부문 경제적 약자 수혜 대상 지표 검토

	소상공인	중소 기업	일반 근로자	경제적 약자
노동의 정당권리				
공정한 성장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의 확산				

C

지역간 격차
해소 지원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논리모형을 활동한 주요 실천과제의 도해결과를 토대로 유사성을 갖는 요소끼리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기본 구조가 도출^{주)}되었으며, 전문가 AHP 워크숍을 통해서 각 하위지수(Sub-Index)부터 지표(Indicator) 단위까지의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가중치 조정을 통해 지수 및 지표체계의 유연한 통·폐합을 위한 판단준거 마련이 가능.

SEDPI의 기본 구성체계



주) 1차 그룹핑은 KCSMA 연구원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이뤄졌으며, 경제민주화 위원회 대상 델파이 및 전문가 워크숍의 과정을 거쳐 기본 구조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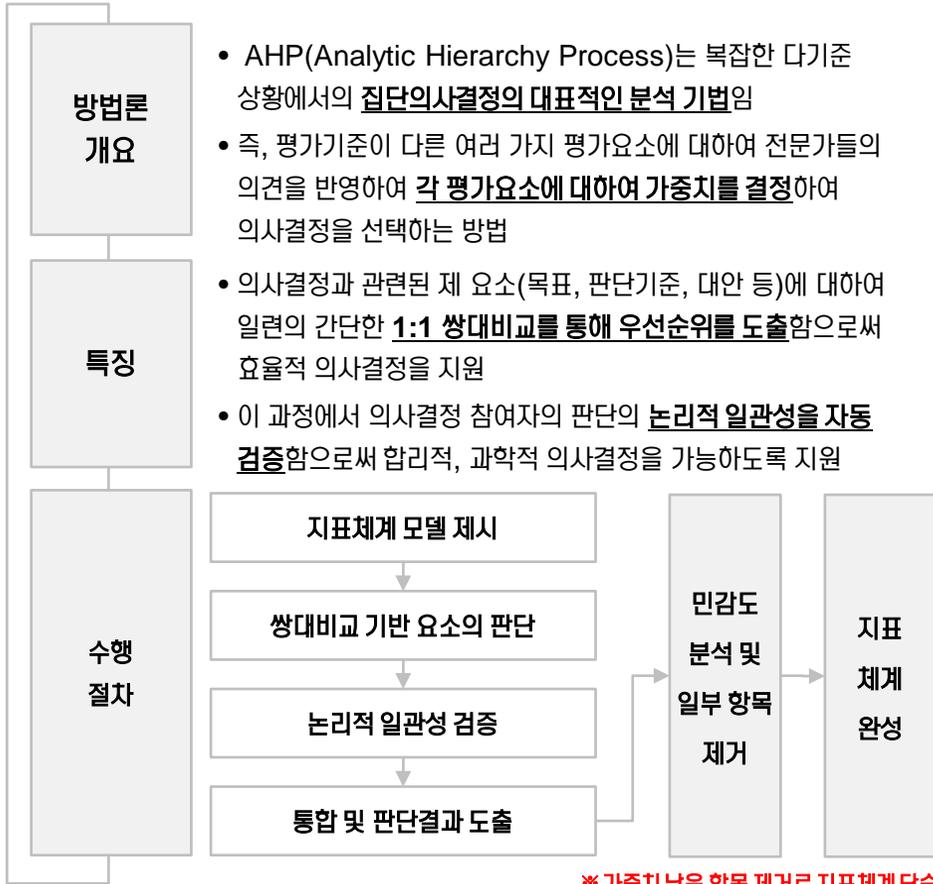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AHP 분석을 통한 지수체계 정교화

SEDPI 구체화에 앞서, 연구 초기단계로 관련된 구성요소들에 대한 준거기준, 정량적 분석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AHP 방법론을 적용해 SEDPI의 구성요소를 확정하는 것이 최적의 기법으로 판단.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법론

[SEDPI 구성을 위한 AHP 방법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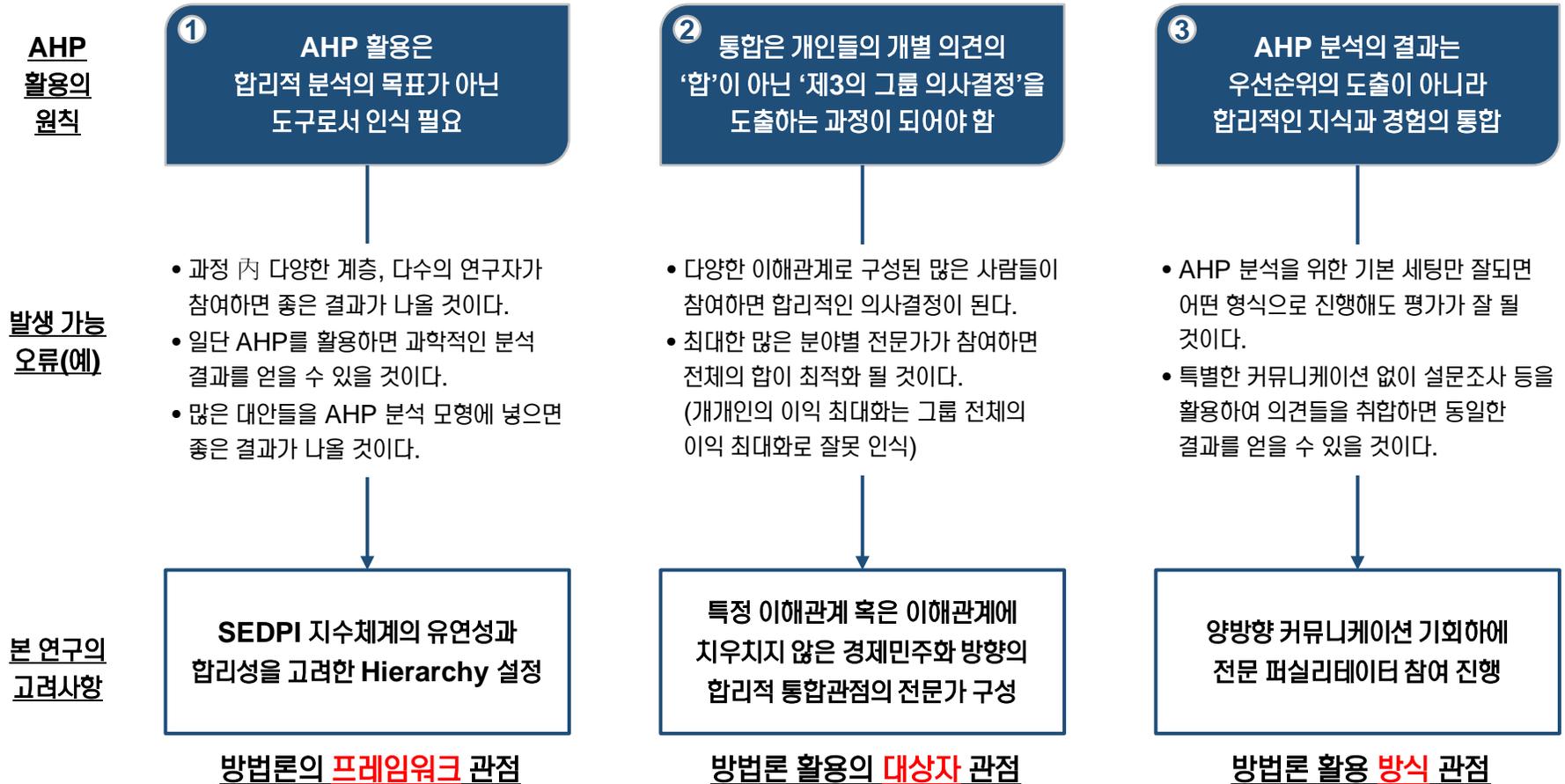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AHP 분석을 통한 지수체계 정교화

구성체계의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방법론을 추진 시, 다음과 같은 AHP 활용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적·합리적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① 방법론의 프레임워크, ② 방법론 활용의 대상자, ③ 방법론 활용 방식을 사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

AHP 방법론 추진시의 중점 고려사항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AHP 분석을 통한 지수체계 정교화

3/29(수)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서 AHP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문 분석업체와 함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균형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서울시 실무진, 경제민주화 위원회, 외부 전문가 그룹, 본 프로젝트 연구진으로 구성.

SEDPI 개발을 위한 AHP 워크숍 실시 개요

[AHP 워크숍 평가 참여자 리스트]



- 일시 : 2017년 3월 29일(수),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여의도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대회의실
- AHP 프로그램 : 디시전사이언스(주), I-Makeit
- 진행 : 연구책임자 홍길표 교수, 디시전사이언스 공동 진행
- 방식 :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젝트 서버 동시접속 의사결정

구분	성명	직급	소속
서울시 실무진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서울특별시청
	김유진	경제민주화 팀장	서울특별시청
	박경민	경제민주화팀 사무관	서울특별시청
경제민주화 위원회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위민
	김택환	경제민주화 위원	미디어전략연구소
외부 전문가 그룹	유승경	박사	대안경제연구소
	최재한	대표	균형사회연구센터
	김은석	박사	KMAC
본 프로젝트 연구진	유훈	팀장	KMAC
	이경수	시니어 컨설턴트	KMAC
	김성원	선임연구원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III. 모형의 설계

[별첨] AHP 분석을 통한 종합 중요도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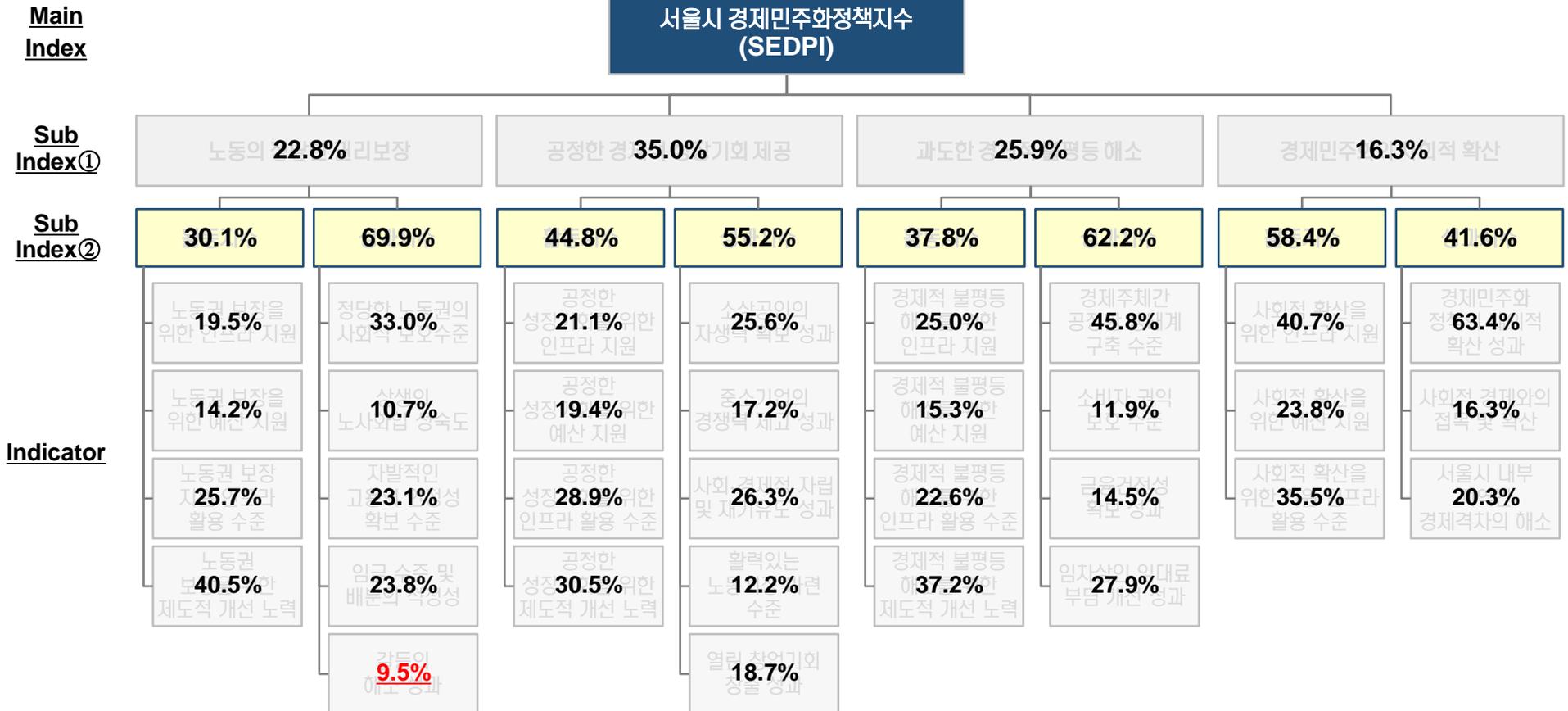
1차 기준(Sub-Index①)		2차 기준(Sub-Index②)			3차 기준(Indicator)		
이름	가중치	이름	가중치		이름	가중치	
	계층 내		계층 내	종합		계층 내	종합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22.8%	활동지수	30.1%	6.9%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19.5%	1.3%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14.2%	1.0%
					노동권 보장 지원 인프라 활용 수준	25.7%	1.8%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40.5%	2.8%
		성과지수	69.9%	15.9%	정당한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수준	33.0%	5.2%
					상생의 노사화합 성숙도	10.7%	1.7%
					자발적인 고용의 안정성 확보 수준	23.1%	3.7%
					임금 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23.8%	3.8%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35.0%	활동지수	44.8%	15.7%	갈등의 해소 성과	9.5%	1.5%
					공정한 성장기회를 위한 인프라 지원	21.1%	3.3%
					공정한 성장기회를 위한 예산 지원	19.4%	3.0%
					공정한 성장기회를 위한 인프라 활용 수준	28.9%	4.5%
		성과지수	55.2%	19.3%	공정한 성장기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30.5%	4.8%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성과	25.6%	4.9%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	17.2%	3.3%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유도 성과	26.3%	5.1%
					활력있는 노동시장 마련 수준	12.2%	2.4%
					열린 창업기회 창출 성과	18.7%	3.6%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25.9%	활동지수	37.8%	9.8%	공정한 성장기회를 위한 인프라 지원	21.1%	3.3%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	15.3%	1.5%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활용 수준	22.6%	2.2%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37.2%	3.6%
		성과지수	62.2%	16.1%	경제주체간(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45.8%	7.4%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	11.9%	1.9%
					금융건전성 확보 성과	14.5%	2.3%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개선 성과	27.9%	4.5%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확산	16.3%	활동지수	58.4%	9.5%	사회적 확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40.7%	3.9%
					사회적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	23.8%	2.3%
					사회적 확산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활용 수준	35.5%	3.4%
		성과지수	41.6%	6.8%	경제민주주의와 정책의 대외적 확산 성과	63.4%	4.3%
					사회적 경제와의 접목 및 확산	16.3%	1.1%
					서울시 내부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	20.3%	1.4%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AHP 분석을 통한 지수체계 정교화

AHP 워크숍 수행을 통해 각 계층별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산출. 단, 일부 참여자의 비일관성 검증이 미완료 상황으로 해당 검증·조정 완료 시, 최종적인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확정될 예정. 1차적 평가 결과 기준으로 경제민주화 원칙과 목표의 중요도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

SEDPI 구성 요소별 가중치 도출결과(계층 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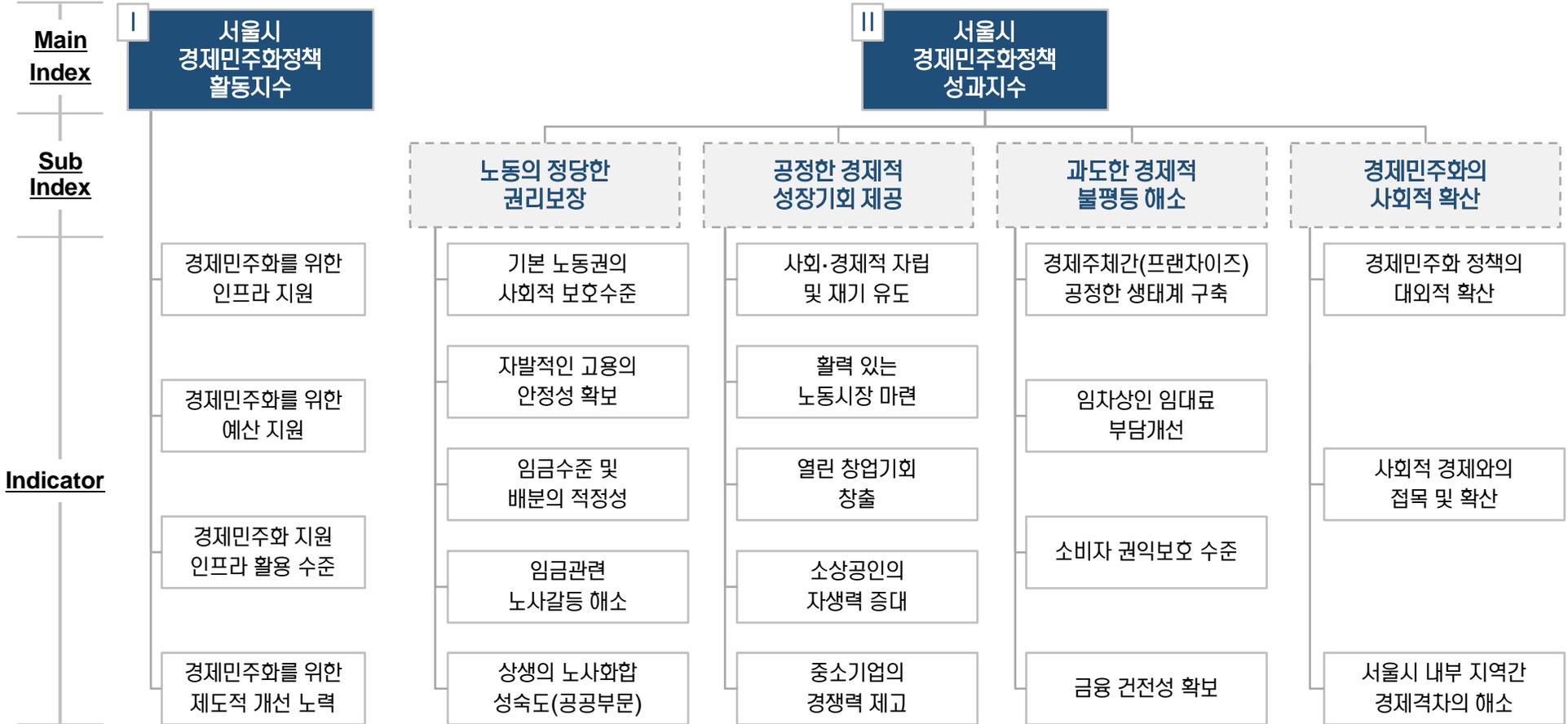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모형구조 1차 조정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초기로 실제적인 성과의 확산 상의 한계를 감안하고, 서울시의 활동 노력의 강조차원에서 **Main Index**는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①활동지수와 ②성과지수로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지수 총점은 제외,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활동지수와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만 공개)

SEDPI 구성형태에 대한 1차 조정(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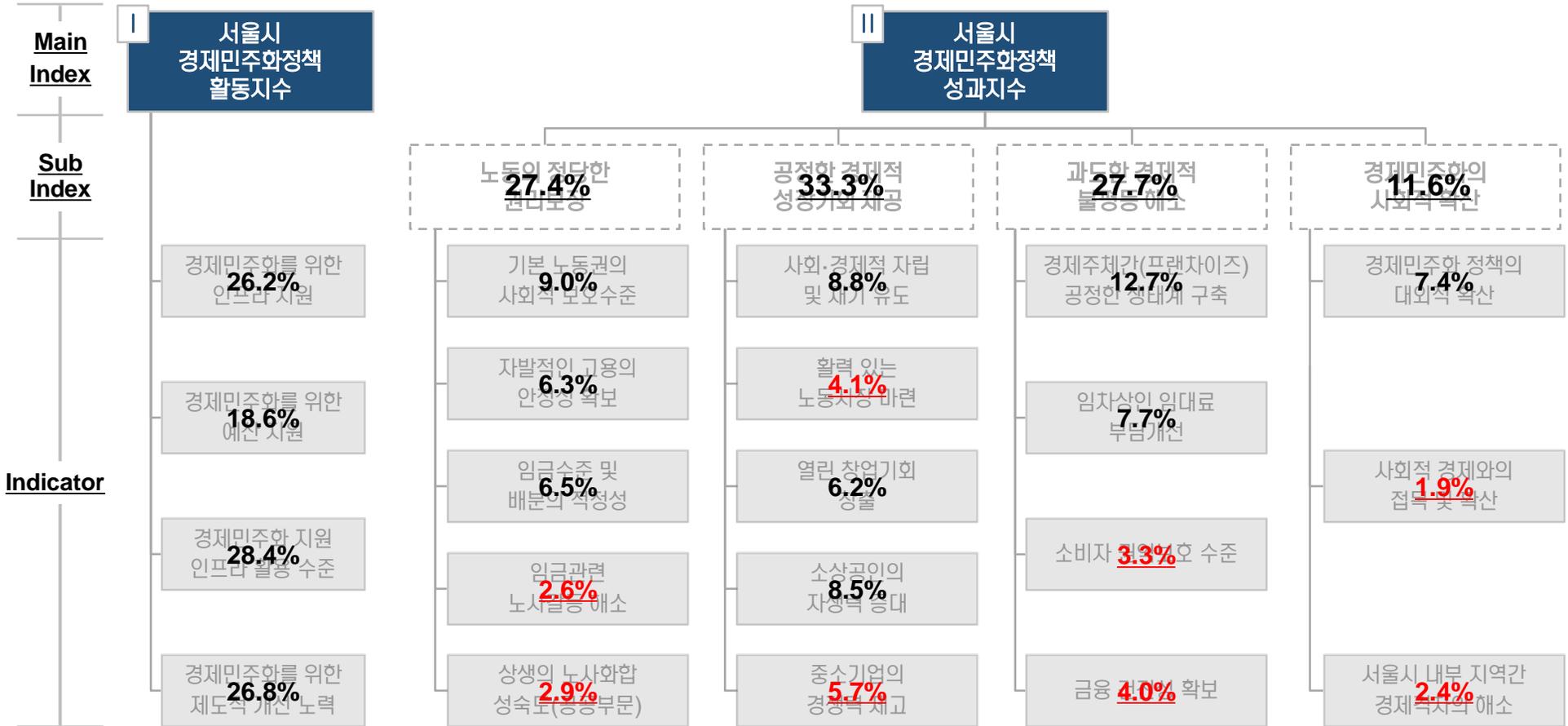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모형구조 1차 조정

조정된 SEDPI 구성형태에 맞추어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구성요소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지수체계를 완성. 일부 Indicator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 발생.

SEDPI 구성형태에 대한 1차 조정(案) – 가중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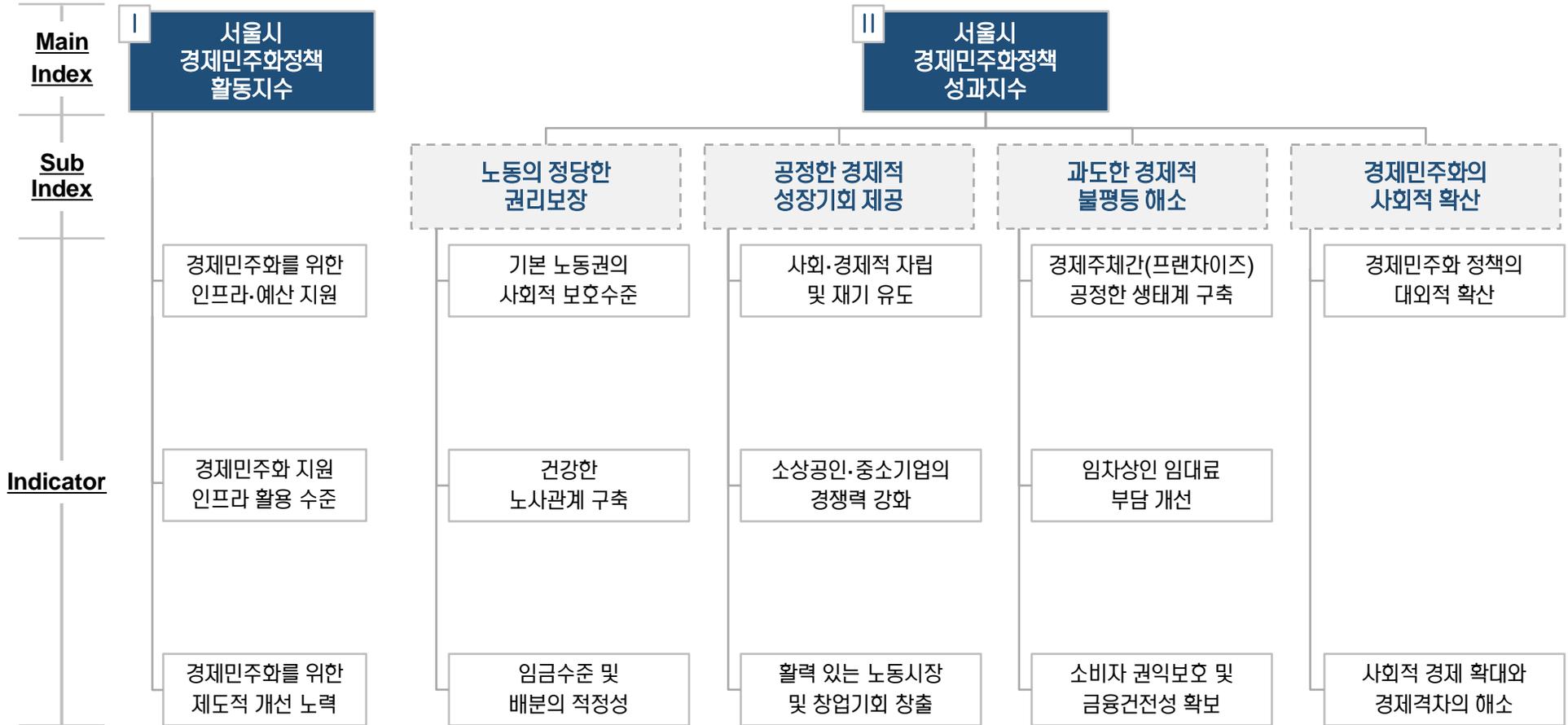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모형구조 2차 조정

성과지수는 가중치 전체평균 5.9%를 하회하는 Indicator들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활동지수와 성과지수 모두 3개의 Indicator로 구성(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부분 제외)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이 SEDPI 최종 구조를 도출.

SEDPI 구성형태에 대한 최종 조정(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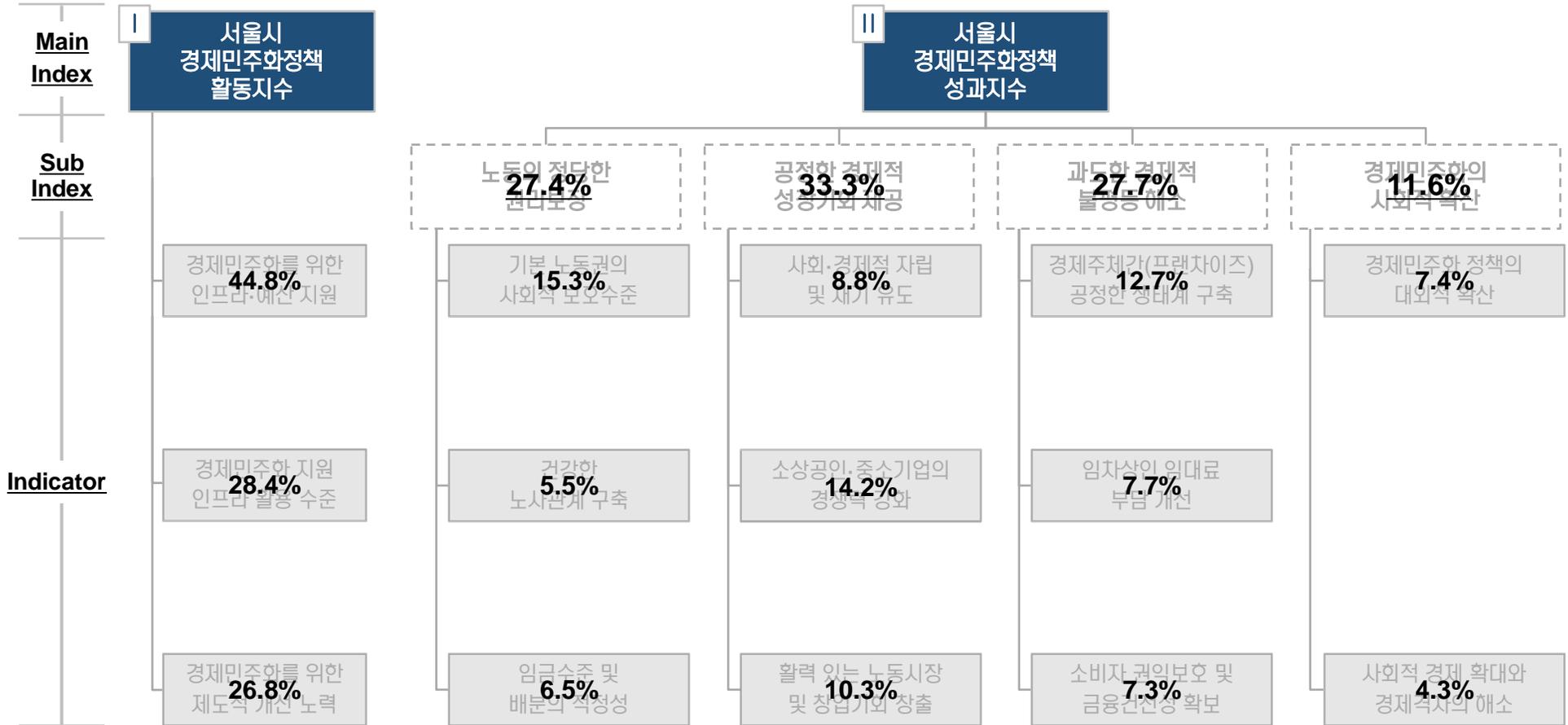


III. 모형의 설계

III-3. SEDPI 구체화 > 모형구조 2차 조정

재조정된 SEDPI 구성형태에 맞추어 개별 구성요소 가중치를 재환산하여 적용해 활동지수 및 성과지수의 점수화를 위한 기본 구성체계를 완성.

SEDPI 구성형태에 대한 최종 조정(案) - 가중치 반영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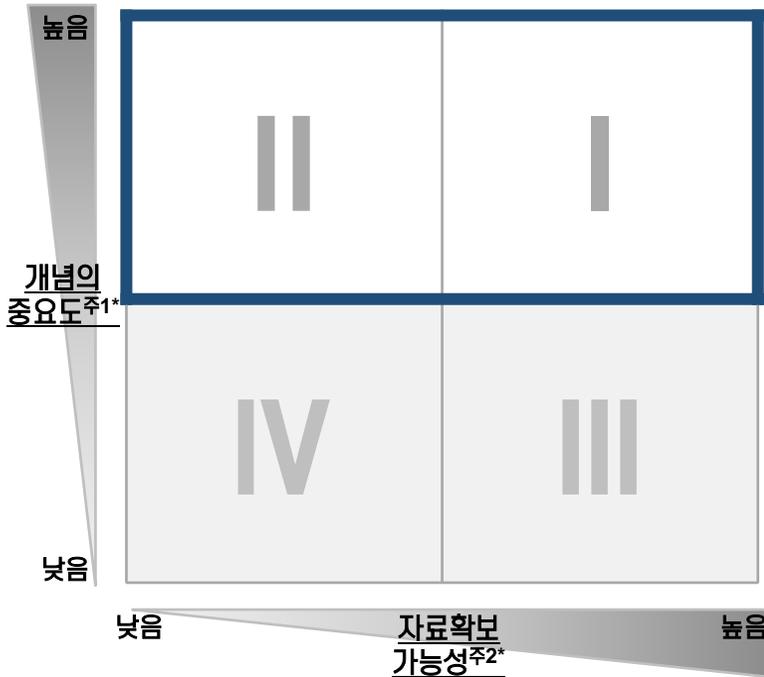
SEDPI 산출결과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 측정항목 선별 프로세스

지표(Indicator) 재조정이 완료된 이후 실제적 결과물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측정항목(Measure/Item)을 선별이 필요. 다음과 같이 ①개념의 중요도, ②자료확보 가능성을 축으로 현재까지 수집된 모든 측정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

지표(Indicator)의 정량화를 위한 측정항목 선별방안



- I (최우선 반영)**
 - 개념의 중요도와 자료확보 가능성이 모두 높은 영역
 - 지표값 산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측정항목으로 통계처리를 통해서 Indicator의 구성요소로 필수 반영
- II (자순위 반영)**
 - 개념의 중요도는 높지만 자료확보가 어려운 영역
 - 대체 측정항목 개발,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활용해서 Indicator의 구성요소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전개
- III (선택적 반영)**
 - 개념의 중요도는 낮으나 자료확보 가능성은 높은 영역
 - 타 영역의 측정항목 확보수준에 따라서 반영 여부의 검토가 가능. 다만, 낮은 중요도로 개념 포함가능성 낮음
- IV (무의미 영역)**
 - 개념의 중요도와 자료확보 가능성이 모두 낮은 영역
 - Indicator의 실제적 구성요소에서 제외하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나 조정 등의 업무범위에서도 제외

주1) 개념의 중요도 : 해당 측정항목의 상위 Indicator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등급구간 산정
 상(3.8% 이상), 中(2.3~3.7%), 下(2.2% 이하)
 단, 모든 Indicator에는 최소 2개 이상의 Measure가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 고려함
 주2) 자료확보 가능성 : 上(2개년도 이상 통계작성된 경우), 中(1개년 단일 시점만 통계작성된 경우),
 下(통계작성 전무) -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경우 中으로 평가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 측정항목 선별 프로세스

KCSMA 연구진 자체 조사 및 서울특별시 유관부서 1차 제출결과를 토대로 중복을 제외한 360여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차 선별(Screening)을 통해서 170여개의 측정항목 선정. 이후 170여개의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2차 판별(Filtering) 작업을 실시. 최종적으로 50여개의 측정항목이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의 구성요소 후보로 선정.

측정항목에 대한 선정의 고려사항

정책목표 커버리지	subindex	Indicator	지표	중요도	Data	설문지표	채택여부	설문실시	13	14	15	16	비고
소상공인 일반	활동	예산	소상공인 교육 지원 예산(원)	상	가		o					280,793,000	예산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예산	자영업클리닉 지원 예산(원)	상	가		o				871,000,000	640,000,000	예산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예산	자영업협업의 지원 예산(원)	상	가		o	256,450,000	258,400,000	340,000,000	424,700,000		예산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예산	한계소상공인 지원 예산(원)	상	가		o				70,000,000	94,000,000	예산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자영업지원센터 인력(전담)(명)	상	가		o		27	35	35	40	인력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업종닥터 Pool(의부 전문기)(명)	상	가		o				157	211	인력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자영업지원센터 개소(개)	하	가							1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개)	하	가				17	17	17	17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활용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 수(명)	중	가							12,847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활용	창업컨설팅 건수(건)	상	가		o	6,686	6,924	5,454	5,358		컨설팅 교육 지원(건)으로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활용	자영업클리닉 지원 업체수(개)	상	가		o				1,016	1,376	컨설팅 교육 지원(건)으로 합산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활용	자영업협업의 지원 업체수(개)	중	가			7	10	14	15		
소상공인 일반	활동	인프라 활용	한계소상공인 지원 업체수(개)	중	가						51	116	
소상공인 일반	공정성장	소상공인	서울지역 창업 후 5년 기업 생존율(%)	상	가		o	30	28			0	
소상공인 일반	공정성장	소상공인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	중상	가		o	62	62	81	71		
소상공인 일반	공정성장	소상공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점)	상	가		o			84	88	90	
소상공인 일반	공정성장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수준	중	부								
소상공인 일반	공정성장	소상공인	소상공인 연평균 소득 증가율	중	부								
특정업종	활동	예산	직업업종 신청지원 실태조사(원)	상	가		o					75,665,000	

1 측정항목별 중요도 평가

- 해당 측정항목의 상위 Indicator의 AHP 가중치를 기준으로 등급구간 산정
- 上(가중치 3.8% 이상), 中(2.3~3.7%) 下(2.2% 이하)

2 측정항목 자료 확보 가능성 평가

- KCSMA 연구진 및 서울시 실무부처 제공 Data 기준 보유기간 기준 평가
- Indicator별로 최소 2개의 측정항목이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 고려

3 채택 여부 검토 및 커버리지 확인

- 중요도 × 확보가능성 기준으로 채택의 우선순위 선별
- 설문을 통한 보완 가능성 반영
- 측정항목의 대상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Data 반영시 별도 통계조치 적용 예정

...
(전체 측정항목에 대한 평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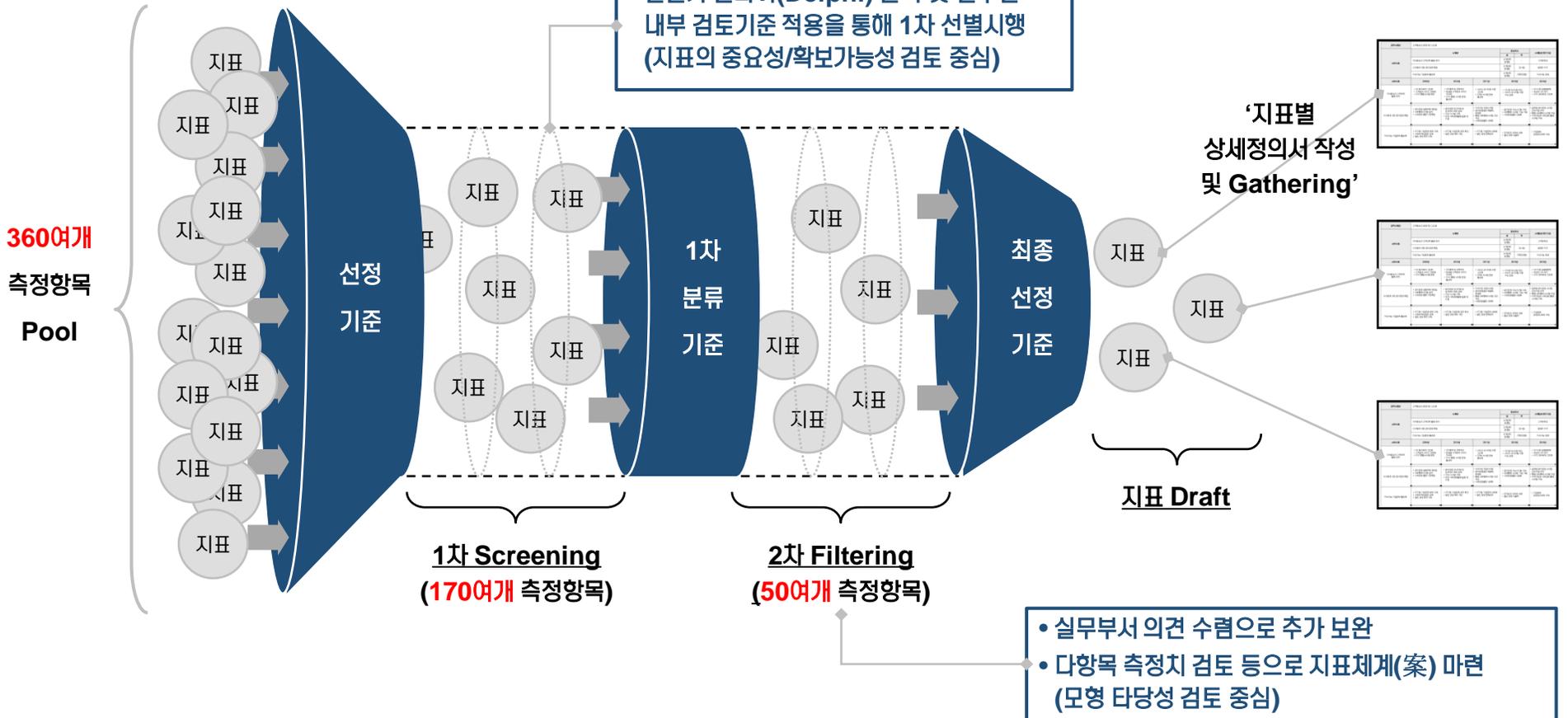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 측정항목 선별 프로세스

2차 판별작업을 통해 확보된 측정항목 Pool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면검증을 통한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해당 의견수렴을 통한 조율이 완료된 후에는 부서별 검증작업으로 지수산출을 위한 Dataset 확정.

측정항목 최종 선별을 위한 프레임워크

• 전문가 델파이(Delphi) 분석 및 연구진 내부 검토기준 적용을 통해 1차 선별시행 (지표의 중요성/확보가능성 검토 중심)



IV. 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Dataset 도출 후 실시한 2차례의 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수체계에 대한 조정 요청에 따른 이슈(정책 커버리지 관리 한계, 성과관리 어려움 등)를 고려하여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측정항목의 구성방안을 중심으로 ①핵심 성과지수와 ②포괄 성과지수를 구성하여 결과를 도출.

측정항목 반영관련 이슈발생에 따른 조정사항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개요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1차적 산출성과지표 중심의 성과지수
- 직접적인 성과로서의 의미가 강해 개별 실천과제의 성과관리에 활용

- 직접적인 정책 성과 외에 파생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차원의 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성과지수
- 경제민주화정책의 기획 및 설계 등 도시정책 기획 차원에서 활용

특장점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에 대응되는 직접적인 실적지표로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데 용이
- 개별 실천과제의 목표수준과 커버리지의 설정이 용이해 정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관리 용이성이 높고 즉각적 확인 가능

- 측정항목의 타 도시(국내도시) 자료 확보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일부 지표는 국가단위의 간접적 비교가능 (당초 연구목표 및 범위)
- 단일정책의 영향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활동에 따른 거시지표 개선효과의 Tracking이 가능
- 측정항목 Data의 Quality 저하에 따른 타당성 보완이 가능

한계점

- 측정항목 Data의 시계열적 축적기간이 3년 내외로 단계모형 적용에 따른 타당성 저하
- 타 도시와의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서울 지역내 심층 분석이 불가능
- Output 혹은 Outcome 관점의 성과지표가 아닌 Process 관점의 성과지표가 다수 배치되어 있어 성과지표 자체의 취약성 보유

- 거시·도시지표 성격이 강해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과 커버리지에 Gap이 상대적으로 크며, 정책활동에 따른 체감효과 판단에 한계
- 또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요소로 정책 성과관리에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 발생

조정 사항

- 서울시의 활용 및 관리용이성을 적극 고려, 내부 관리지표 중심의 성과지수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핵심 성과지수로 명명
- KCSMA 기존 추진사항인 종합적인 측정항목 구성(案)은 포괄 성과지수로 명명하여 2개 유형으로 성과지수를 구성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 전개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이에 수반한 활동노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서울시가 ‘노동’, ‘공정’, ‘상생’ 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응된 인프라, 예산, 지원인프라의 활용수준,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한 투입-활동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활동지수의 측정항목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프라 및 예산 지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 및 제반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 투입 및 인프라 구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예산 투입도 	- (산출 불가)	0.3배 = 1.47% ÷ 4.79%	11.5배 = 70.68% ÷ 6.23%	50배 (서울시 변화추세 감안한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정책 인력 집중도 	- (산출 불가)	18.5배 = 56.3% ÷ 3.0%	30.8배 = 26.7% ÷ 0.9%	50배 (서울시 변화추세 감안한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경제민주화 지원인프라 활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된 경제민주화 관련 인프라 자원을 통해 제공된 행정 서비스, 기타 다양한 지원 활동의 제공 및 1차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교육 및 상담 제공 실적 	5.66명	8.48명	8.43명	10.0명 (서울시 변화추세 감안한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구제 관련 직접지원 집중도 	- (산출불가)	50배 초과 = 447% ÷ 1.47%	13.8배 = 977% ÷ 70.68%	20배 (경제민주화예산 추세감안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추진의 제약 및 침해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실적 	5건	9건	45건	30건 (도전적 수치를 고려한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조례)개정 건의 건 수 	4건	13건	17건	10건 (도전적 수치를 고려한 목표설정)	서울시 내부자료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활동지수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프라 및 예산 지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 및 제반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 투입 및 인프라 구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예산 투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자원(예산) 투입 규모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순 사업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 서울시 본청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정책 인력 집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집중 노력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전담 공무원 전년 대비증가율 ÷ 서울시 전체 공무원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시 내부자료
경제민주화 지원인프라 활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된 경제민주화 관련 인프라 자원을 통해 제공된 행정 서비스, 기타 다양한 지원 활동의 제공 및 1차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교육 및 상담 제공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을 위해 설치한 핵심 지원 인프라의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 행정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제공활동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핵심(상가임대, 금융복지, 눈물그만)센터 상담인원 및 핵심 교육(소상공인, 금융, 지재권)과정 수강인원의 합 ÷ 당해년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수 × 1,000명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실천과제 직접지원 집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中, 긴급 구제 성격의 직접지원 자원(예산)의 제공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관련 긴급 구제지원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 경제민주화정책 순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시 내부자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추진의 제약 및 침해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수용도 확보 등을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경제민주화정책 관련 토론회,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건 수의 총 합계 	서울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조례) 개정 건의 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제약 및 불합리 요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경제민주화정책 관련 법령(조례) 개정 건의 건 수의 총 합계 	서울시 내부자료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그 핵심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핵심 성과지수 #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의 측정항목

1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산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인력관리제 태그율 	- (미실시)	92.5%	86.7%	100% (내부정책목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건설공사장 지정 수 	0개	4개	4개	12개 (단기정책목표)	시설안전과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체불과 같은 기본권리와 관련된 노사갈등의 해소와 부당한 피해를 구제한 성과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배려하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5,614명	6,805명	8,546명	10,000명 (내부정책목표)	일자리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구제 실적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17년 신규추진 정책으로 실적無 (지표는 유보)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으로 인식되는 임금(격차)의 적정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대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서울시 생활임금 ÷ 최저임금) 	- (미실시)	1.19pt = 6,687원 ÷ 5,580원	1.18pt = 7,145원 ÷ 6,030원	1.2pt (내부정책목표)	노동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률 	- (미실시)	5.2% =1,039명 ÷ 약 2만명	12.6% =1,480명 ÷ 약 2만명	100% (내부정책목표)	

핵심 성과지수 #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산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인력관리제 태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대금e바로'와 연계되어 확인되는 서울시 발주 공사장 현장內 근로자의 출근 태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태그 인원 수 ÷ 당해년도 적용대상자 모수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 건설공사장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건설안전과 지정, 모범 건설공사장 등록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건설/시설안전과 지정, 모범 건설공사장 누계등록 수 	시설안전과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체불과 같은 기본권리와 관련된 노사갈등의 해소와 부당한 피해를 구제한 성과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배려하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차원에서 진행된 시 및 투출 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청 및 투출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中, 정규직 신분전환 대상자 누계 인원 수 	일자리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구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침해인 임금체불의 직접적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권리구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인원 中, 권리구제를 통한 민원 해소 당해년도 인원 수 	일자리정책담당관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으로 인식되는 임금(격차)의 적정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대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실 있는 생활을 위한 서울시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의 국가지정 최저임금 대비 보장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 당해년도 최저임금 	노동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의 실제적 이행 규모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생활임금 적용 인원 ÷ 생활임금 적용가능 검토 모수 	노동정책담당관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그 핵심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핵심 성과지수 #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의 측정항목

2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사회·경제적자립 및 재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를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1.62억	1.60억	1.31억	1.5억 (내부정책목표)	청년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복지상담센터 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93.5점	91.5점	93.2점	100점 (내부정책목표)	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 및 자생력을 증대하고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84.0점	88.2점	89.5점	100점 (내부정책목표)	소상공인지원과 창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협업화사업 지원 협업체 수 	10개	14개	15개	20개 (단기정책목표)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및 장년 대상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열린 창업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람일자리 수 	미확인	442명	673명	1,000명 (내부정책목표)	인생이모작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총 투자유치금액 	3.6억	6.0억	21.7억	100억 (단기정책목표)	산업진흥원 창업본부

핵심 성과지수 #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사회·경제적자립 및 재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를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회복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금융활동 애로사항 해소 직접 지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론, 위기탈출론 등을 통한 당해년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제공 규모 	청년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복지상담센터 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서비스 전달 품질 수준(전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정책수혜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 및 자생력을 증대하고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지원센터의 서비스 전달품질 수준(전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자영업 지원센터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 및 서비스 만족도 	소상공인지원과 자영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협업화사업 지원 협업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익을 위해 서울시 소재 3개 이상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협업체 지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시설, 운영, 브랜드 등 3대 대상 사업의 당해년도 사업비 지원 수혜 협업체 수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및 장년 대상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열린 창업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람일자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50+세대)을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일자리 연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신청 최종 선발되어 투입된 근무 인원 수 	인생이모작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총 투자유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창업허브 등 입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금액(누적) 	산업진흥원 창업본부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그 핵심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핵심 성과지수 #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측정항목

3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주체간(특히 프랜차이즈 중심)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계약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 피해상담건 수 대비 피해구제 지원율(상담 100건당 구제지원건) 	0.57건 = 1건 ÷ 175건 × 100건	1.94건 = 3건 ÷ 155건 × 100건	7.3건 = 15건 ÷ 205건 × 100건	10건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체결건 수 	0건	1건	1건	10개 (내부정책목표)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거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중소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성립율 (상담 100건당 분쟁조정 성립건 수) 	- (미실시)	- (미실시)	36.4건 = 16건 ÷ 44건 × 100건	50건 (내부정책목표)	재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율 	- (미실시)	14.3% = 2개소 ÷ 14개소	35.7% = 3개소 ÷ 14개소	14개소=100% (단기정책목표比 달성도 변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 대부업의 확산 방지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구제율 	38.5%	41.9%	40.3%	80% (내부정책목표)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침해 점검시행 조치율 	81.7%	90.3%	92.9%	100% (내부정책목표)	공정경제과 민생수사1반

핵심 성과지수 #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주체간(특히 프랜차이즈 중심)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계약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 피해상담건 수 대비 피해구제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 피해 상담건 수 ÷ 피해구제지원건 수 × 100건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체결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모범 상생협약 참여 유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프랜차이즈 업종 중, 생협약 체결건 수(누계실적)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거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중소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성립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분쟁조정 성립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성립건 수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 수 × 100건 	재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모범 임차관계 조성 참여 유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상생협약 체결 누계실적 ÷ '18년 정책목표값(14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 대부업의 확산 방지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구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 센터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소비자상담 대상 중, 피해구제 실적 ÷ 당해년도 소비자상담 실적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침해 점검시행 조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다단계업,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계획 대비 점검 단속실적 및 실적에 대한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10대 민생침해 점검실적 ÷ 당해년도 민생침해 분야 내 등록 사업장 수 	공정경제과 민생수사1반

IV. 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그 핵심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핵심 성과지수 #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의 측정항목

4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입법 개선성과 (발의안 본회의 통과 실적 기준) 	0건	0건	1건	1건 (상징성 고려 목표설정)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인지도 (시민설문조사 100점 단순 환산) 	- (미 실시)	- (미 실시)	46.3점	100점 (시민이 평가한 인지도 목표)	시민대상 설문조사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와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확대)와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성과(지역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기업 등록 현황 	2,264개	2,663개	3,500개	4,000개 (내부정책목표)	사회적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격차 해소 시민 만족도 (시민설문조사 100점 단순 환산) 	- (미 실시)	63.2점	68.0점	100점 (시민이 평가한 인지도 목표)	시민대상 설문조사

핵심 성과지수 #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입법 개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입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경제민주화 유관 법령 개정발의안 본회의 통과실적 	공정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서울시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전반 인지도 	시민대상 설문조사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와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확대)와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성과(지역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 등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제도 참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 기업등록 누계현황 	사회적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격차 해소 시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시민 인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지각된 개선 성과 	시민대상 설문조사

IV. 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포괄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시관점의 전반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포괄 성과지수 #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의 측정항목

1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산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 - Reverse 	29.2%	25.9%	21.4% (추정치)	12.2%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서울시 실무진 제공 (전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43.8%	42.5%	42.8%	100% (내부정책목표)	서울시 실무진 제공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체불과 같은 기본권리와 관련된 노사갈등의 해소와 부당한 피해를 구제한 성과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배려하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노사분규 건 수 - Reverse 	29건	16건	27건	23건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자 해소 체불액 	39.0억	34.4억	52.4억	44.5억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서울시 실무진 제공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으로 인식되는 임금(격차)의 적정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니계수 - Reverse 	0.28p	0.27p	0.26p (추정치)	0.25p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통계청 (전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 빈곤율 - Reverse 	10.80%	10.40%	9.95% (추정치)	8.72% (최근 10개년추세 기반 목표설정)	통계청 (전국기준)

주) Reverse 표기 측정항목은 낮을수록 양호함을 의미하는 측정항목임

포괄 성과지수 #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산한 성과	•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 - Reverse	•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침해하는 위반업체 발생 현황 (특히, 임금체불 및 대금체불 위반)	• 당해년도 하도급법 위반업체 수 ÷ 하도급법 적용 대상기관 모수 (전국평균수치 우선 반영)	서울시 실무진 제공 (전국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 마련 수준	• 당해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인원 ÷ 당해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모수	서울시 실무진 제공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 임금체불과 같은 기본권리와 관련된 노사갈등의 해소와 부당한 피해를 구제한 성과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배려하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성과	• 공공부문 노사분규 건 수 - Reverse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분규 발생일	• 당해년도 노사분규 발생 건 수 中, 서울시 공공부문 해당 발생 건 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자 해소 체불액	• 임금체불 등으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노동자의 민원해소 성과	• 당해년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금액 총 합	서울시 실무진 제공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 사회·경제적으로 인식되는 임금(격차)의 적정성을 개선한 성과	• 지니계수 - Reverse	•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 (완전 평등 : 0, 완전불평등 : 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당해년도 상대적 빈곤율 (전국수치 우선 반영)	통계청 (전국기준)
		• 상대적 빈곤율 - Reverse	•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당해년도 상대적 빈곤율 (전국수치 우선 반영)	통계청 (전국기준)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포괄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시관점의 전반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포괄 성과지수 #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의 측정항목

2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사회·경제적자립 및 재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를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 Reverse 	6.7천명	8.0천명	9.1천명	1만명 (상징성 고려 목표설정)	서울시 실무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불량 해제건 수 	- (미 실시)	- (미 실시)	1,589명	2,000명 (상징성 고려 목표설정)	서울시 실무진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 및 자생력을 증대하고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후 5년간 생존율 	29.0%	28.2% (중앙값 추정)	27.3%	50% (도전적 수치감안 목표설정)	통계청 (산업전체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연평균 매출액 	미확인	125억원	131억원 (추정)	150억 (중소기업 매출성장률 적용)	SBA 보도자료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및 장년 대상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열린 창업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수료자 취업률 	54.3%	52.9%	53.7%	100% (내부정책목표)	서울시 실무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49.3%	47.8%	51.0%	100% (도전적 수치감안 목표설정)	통계청 (전국기준)

주) Reverse 표기 측정항목은 낮을수록 양호함을 의미하는 측정항목임

포괄 성과지수 #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사회·경제적자립 및 재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를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 Reve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어려움, 실업 등에 따라 과다 채무해소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청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20대 청년의 워크아웃 신청인원의 총 합 	서울시 실무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불량 해제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신용안전망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증진, 학자금, 생활지원 등을 통해 신용불량 등급을 회복한 당해년도 청년 신용불량 해제 인원 	서울시 실무진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 및 자생력을 증대하고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후 5년간 생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 창업 이후 생존을 통해 확인되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중인 소상공인 등록 현황 ÷ 소상공인 등록 모수(5년전) 	통계청 (산업전체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연평균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서울브랜드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획득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총 합 	SBA 보도자료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및 장년 대상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열린 창업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수료자 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5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50+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업률 (= 취업인원 ÷ 수료자 총 합) 	서울시 실무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위한 청년의 경제활동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의 경제활동 청년 수 ÷ 당해년도 청년 인구 수 	통계청 (전국기준)

IV.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포괄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시관점의 전반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포괄 성과지수 #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측정항목

3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 경제주체간(특히 프랜차이즈 중심)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계약을 촉진한 성과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만족도	68.2점	67.5점 (중앙값 추정)	66.7점	80점 (관리 가능수준 고려 목표설정)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 (전국기준)
		• 대금e바로 이용자 만족도	미확인	64.0점	70.0점	100점 (내부정책목표)	서울시 실무진 제공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개선	•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거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중소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 성과	• 임대료 동결조건 확보실적	미확인	미확인	39건	50건 (내부정책목표)	서울시 실무진 제공
		• 소규모상가임대료 변화율 - Reverse	미확인	- (산출불가)	1.93배 =0.45% ÷0.26%	2.5배 (전국 임대료 Gap 고려 목표설정)	한국감정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 대부업의 확산 방지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개선한 성과	• 소비자 지향성	- (미설시)	- (미설시)	진행중 (추후반영)	추후설정	유관부서 진행중인 실천과제
		• 불법대부업 발생건 수 - Reverse	463건	275건	417건	317건 (연평균변화율 적용 목표설정)	검찰청

주) Reverse 표기 측정항목은 낮을수록 양호함을 의미하는 측정항목임

포괄 성과지수 #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주체간(특히 프랜차이즈 중심)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계약을 촉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본사의 서비스 전달 품질수준(전반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 측정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각된 만족수준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 (전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e바로 이용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e바로 시스템의 서비스 전달 품질수준 (전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된 만족수준 	서울시 실무진 제공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거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중소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동결조건 확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임차상인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절감을 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임대료 동결조건 협약 체결 대상 상가 수 	서울시 실무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상가 임대료 변화율 - Reve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대비 서울시 소규모상가의 임대료 증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규모상가 연평균 임대료 변화율 ÷ 전국 소규모상가 연평균 임대료 변화율 	한국감정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 대부업의 확산 방지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조례)가 소비자후생증대측면에서 소비자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소비자지향성'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소비자 지향성 지수 	유관부서 진행중인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대부업 발생건 수 - Reve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대출 등의 불법 대부업체 발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서울시 소재 불법대부업 전체 발생건 수 	검찰청

IV. SEDPI 산출결과

IV-1. 측정항목의 정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정책과 포괄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는 정책 중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각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시관점의 전반 성과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포괄 성과지수 #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의 측정항목

4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및 산식	Raw Data			목표 및 설정방식	출처
			'14년	'15년	'16년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 데이터 랭킹 	20위권외	20위권외	20위권외	20위 (상징성 고려 목표설정)	소셜 매트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분야별 시민 인지도(가중평균) 	- (미 실시)	- (미 실시)	44.2%	50% (내부정책목표)	시민대상 설문조사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와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확대)와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성과(지역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성과 최소값 	미확인	12.9배	13.5배 (추정)	15.0배 (상징성 고려 목표설정)	서울연구원 공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격차 해소 전반 개선수준 	- (미 실시)	- (미 실시)	63.8점	100점 (시민이 평가한 인지도 목표)	시민대상 설문조사

포괄 성과지수 #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의 측정항목 상세정의

Indicator (지표)	지표의 의미	측정항목(Measure)	측정항목 개념의 정의	산식	출처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 데이터 랭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에 대한 서울시의 시정 활동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확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셜 매트릭스 '경제민주화' 검색 결과 내, 서울시 관련 키워드 순위 	소셜 매트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분야별 시민 인지도(가중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분야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서울시 경제민주화 분야별 정책추진에 대한 전반 인지도(분야별 인지도 가중평균 결과) 	시민대상 설문조사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와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확대)와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성과(지역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성과 최소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비용의 사회적 가치 환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년단위 조사되는 서울연구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값 (사회적 ROI) 	서울연구원 공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격차 해소 전반 개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시민 인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성과의 전년대비 개선도 	시민대상 설문조사

IV. 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지수의 점수화와 관련해서는 ①개념의 완성 수준, ②지수체계의 연속성, ③성과해석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이에 대응해 해외 글로벌 인덱스 참조, 유연한 구조의 지수체계 및 평정값 의미해설을 위한 ‘단계모형’ 방식의 지수체계를 기획.

SEDPI 구성형태 설계에 대한 기획의도



IV. 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성과의 평정값 의미 해설을 위해 SEDPI의 성과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측정항목의 측정척도 기준(5등급)으로 하는 단계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평정값 의미해설을 위한 ‘단계모형’ 적용(구간별 의미)

[각 구간의 의미]

(90-100구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객관적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주관적 체감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

(70-90구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객관적 성과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또한 주관적인 체감수준도 높아지는 상태

(50-70구간) 경제민주화 정책성과가 유지/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관적인 체감수준도 서로 엇갈리는 상태

(30-50구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객관적 성과가 하락함은 물론 주관적인 체감수준도 부정적으로 기우는 상태

(20-30구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객관적 성과가 크게 하락함은 물론 주관적인 체감수준도 매우 부정적으로 판명된 상태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성과지수”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활동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활동지수는 '15년 70.0점에서 '16년 79.9점으로 전년比 +9.9점 상승. 지원 방식의 일시적 변화영향으로 '경제민주화 지원 인프라 활용 수준' 지표(93.9점→81.3점)만 하락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쏘 지표/측정항목은 전년比 개선.

SEDPI 활동지수 산출

활동지수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70.0점 → 79.9점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프라 및 예산 지원 (가중치 44.8%)	53.6점	67.0점	경제민주화정책 예산 투입도	↑	+12.8점	43.2점	56.0점	- (산출불가)	0.3배	11.5배	-
				경제민주화정책 인력 투입도	↑	+14.1점	64.0점	78.1점	- (산출불가)	18.5배	30.8배	-
핵심 성과지수 종합지수 58.0점 → 67.0점	경제민주화 지원 인프라 활용 수준 (가중치 28.4%)	93.9점	81.3점	주요 교육 및 상담제공실적	↑	△0.4점	87.8점	87.4점	5.66명	8.48명	8.43명	-
				간금구제관련 직접지원 집중도	↑	△24.8점	100.0점	75.2점	- (산출불가)	50배 초과	13.8배	-
포괄 성과지수 종합지수 58.3점 → 70.9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가중치 26.8%)	72.0점	100.0점	토론회,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실적	↑	+56.0점	44.0점	100.0점	5건	9건	45건	-
				관련법령(조례) 개정 건의건 수	↑	변동 無	100.0점	100.0점	4건	13건	17건	-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핵심 성과지수는 ’15년 63.2점에서 ’16년 63.6점으로 전년比 +0.4점 상승. 가중치가 높은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의 하락영향이 기타 지표의 향상 성과와 상쇄. 일부 측정항목은 ’16년까지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나 ’17년 조기 성과발생한 요소들이 많아 차년도 성과의 큰 향상 기대.(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범건설공사장 등)

SEDPI 핵심 성과지수 산출(#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63.2점
→
63.6점

포괄 성과지수

종합지수
58.3점
→
70.9점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가중치 56.0%)	69.6점	66.7점	전자인력관리제 태그올	↑	92.5점	86.7점	- (미실시)	92.5%	86.7%	-
			모범건설 공사장 수	↑	46.7점	46.7점	0개	4개	4개	'18년도 단기목표 적용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가중치 20.1%)	47.2점	54.2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	74.4점	88.4점	5,614명	6,805명	8,546명	'18년도 단기목표 적용
			A/R 임금체불 피해구제 실적	↑	20.0점	20.0점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17년 신규추진 정책으로 지표는 유보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가중치 23.8%)	61.8점	64.4점	최저임금대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99.3점	98.7점	- (미실시)	1.19배	1.18배	-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률	↑	24.2점	30.1점	- (미확인)	5.2%	12.6%	-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핵심 성과지수는 ’15년 74.9점에서 ’16년 78.6점으로 전년比 +3.7점 상승.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유도’ 지표만 전년比 소폭 하락(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 축소 영향)하였으며, 나머지 쏠 측정항목은 전년比 성과 향상.

SEDPI 핵심 성과지수 산출(#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74.9점
→
78.6점

포괄 성과지수

종합지수
58.3점
→
70.9점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 유도 (가중치 26.4%)	95.8점	91.5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	100.0점	89.9점	1.62억	1.60억	1.31억	감소주세로 보조지표 발굴 필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	91.5점	93.2점	93.5점	91.5점	93.2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가중치 42.6%)	82.1점	84.8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	88.2점	89.5점	84.0점	88.2점	89.5점	-
			자영업협업화사업 지원협업체 수	↑	76.0점	80.0점	10개	14개	15개	'18년도 단기목표 적용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가중치 30.9%)	40.1점	55.6점	보람일자리 수	↑	55.4점	73.8점	미확인	442명	673명	-
			창업기업의 총 투자유치금액	↑	24.8점	37.4점	3.6억	6.0억	21.7억	-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핵심 성과지수는 ‘15년 41.0점에서 ‘16년 61.9점으로 전년비 +20.9점 상승.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부문만 전년과 동일하며 쏠 지표에서 득점 향상. 항목별로는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성과와 소비자피해 구제율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쏠 측정항목 모두의 성과가 향상.

SEDPI 핵심 성과지수 산출(#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41.0점
→
61.9점

포괄 성과지수

총합지수
58.3점
→
70.9점

지표명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가중치 45.9%)	28.2점	49.6점	불공정 피해 상담건 수 대비 피해구제 실적	↑	+42.9점	35.5점	78.4점	0.57건	1.94건	7.30건	-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체결건 수	↑	변동 無	20.8점	20.8점	0건	1건	1건	-
임차상인 임대료부담 개선 (가중치 27.8%)	17.2점	56.9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성립율	↑	+58.2점	20.0점	78.2점	- (미실시)	- (미실시)	36.4건	-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율	↑	+21.4점	14.3점	35.7점	- (미실시)	14.3%	35.7%	-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가중치 26.4%)	88.7점	88.7점	소비자피해 구제율	↑	△2.5점	87.0점	84.5점	38.5%	41.9%	40.3%	-
			민생침해 점검시행 조치율	↑	+2.6점	90.3점	92.9점	81.7%	90.3%	92.9%	-

IV. 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핵심 성과지수는 '15년 37.7점에서 '16년 65.8점으로 전년比 +28.1점 상승. 쉰 지표와 측정항목에 개선성고가 크게 발생.

SEDPI 핵심 성과지수 산출(#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37.7점
→
65.8점

포괄 성과지수

종합지수
58.3점
→
70.9점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가중치 63.2%)	20.0점	58.2점	경제민주화 법령입법 개선성과	↑	+50.0점	20.0점	70.0점	0건	0건	1건	우수등급 최소 적용 점수
			경제민주화정책 전반 인지도	↑	+26.3점	20.0점	46.3점	(미실시)	(미실시)	46.3점	-
사회적 경제 확대와 경제 격차의 해소 (가중치 36.8%)	68.2점	79.0점	사회적경제기업 등록현황	↑	+16.7점	73.3점	90.0점	2,264개	2,633개	3,500개	-
			지역간 격차해소 시민만족도	↑	+4.8점	63.2점	68.0점	(미실시)	63.2점	68.0점	-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66.1점에서 ’16년 67.7점으로 전년比 +1.6점 상승.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지표와 해당 지표의 측정항목이 하락하였으며, 기타 지표는 전년比 상승.

SEDPI 포괄 성과지수 산출(#1.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종합지수
58.0점
→
67.0점

포괄 성과지수

66.1점
→
67.7점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가중치 56.0%)	56.8점	61.7점	하도급법 위반업체 비율	↓	+9.5점	71.0점	80.5점	29.2%	25.9%	21.4%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비율	↑	+0.3점	42.5점	42.8점	43.8%	42.5%	42.8%	-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가중치 20.1%)	88.3점	73.3점	공공부문 노사분규 건 수	↓	△53.3점	100.0점	46.7점	29건	16건	27건	-
			하도급부조리C 신고자 해소 체불액	↑	+23.4점	76.6점	100.0점	39.0억	34.4억	52.4억	실적관리 방향의 확인필요 및 표준화 적용필요
임금수준 및 배분의 적정성 (가중치 23.8%)	69.5점	77.0점	지니계수	↓	+6.9점	69.6점	76.5점	0.28p	0.27p	0.26p	-
			상대적 빈곤율	↓	+8.2점	69.3점	77.5점	10.80%	10.40%	9.95%	-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61.4점에서 '16년 71.3점으로 전년비 +9.9점 상승.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관리 및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을 제외한 **全** 측정항목의 점수 향상이 발생. 다만, 점수의 대폭상승이 직접적 성과의 개선보다는 정책 신규 추진에 따른 측정항목의 관측값 발생에 따른 영향이 크기에 해석에 유의.

SEDPI 포괄 성과지수 산출(#2.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종합지수
58.0점
→
67.0점

포괄 성과지수

61.4점
→
71.3점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 유도 (가중치 26.4%)	68.2	72.3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	76.3점	74.6점	6.7천명	8.0천명	9.1천명	실적관리 방향의 확인필요
			신용불량 해제건 수	↑	60.0점	70.0점	- (미실시)	- (미실시)	1,589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가중치 42.6%)	51.9	80.8	창업후 5년간 생존율	↑	83.9점	78.0점	29.0%	28.2%	27.3%	-
			하이서울 브랜드기업 연평균 매출액	↑	20.0점	83.6점	미확인	125억원	131억원	-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창업기회 창출 (가중치 30.9%)	60.3	61.9	50+ 수료자 취업률	↑	62.3점	63.0점	54.3%	52.9%	53.7%	-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	58.2점	60.8점	49.3%	47.8%	51.0%	목표 수준 조정 필요

IV.SEDPI 산출결과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63.2점에서 ‘16년 73.1점으로 전년比 +9.9점 상승.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지표를 제외한 전 지표가 상승.

SEDPI 포괄 성과지수 산출(#3.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종합지수
58.0점
→
67.0점

포괄 성과지수

63.2점
→
73.1점

지표명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경제주체간 (프랜차이즈) 공정한 생태계 구축 (가중치 45.9%)	65.7점	68.4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만족도	↑	67.5점	66.7점	68.2점	67.5점	66.7점	-
			대금e바로 이용자 만족도	↑	64.0점	70.0점	- (미확인)	64.0점	70.0점	-
임차상인 임대료부담 개선 (가중치 27.8%)	20.0점	78.3점	임대료 동결조건 확보실적	↑	20.0점	82.4점	- (미확인)	- (미확인)	39건	-
			소규모상가임대료 변화율	↓	20.0점	74.1점	- (미실시)	- (산출불가)	1.93배	-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 (가중치 26.4%)	100.0점	76.0점	소비자 지향성	↑	추후반영	추후반영	추후 반영	추후 반영	추후 반영	-
			불법대부업 발생건수	↓	100.0점	76.0점	463건	275건	417건	실적관리 방향의 확인필요

IV.SEDPI 산출결과

활동지수

핵심 성과지수

포괄 성과지수

IV-2. 모형값 산출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29.5점에서 '16년 60.3점으로 전년比 +30.8점 상승. 빅 데이터 랭킹을 제외한
 全 측정항목에 상승이 발생함에 기인하나 점수 상승이 직접적 성과의 개선보다는 정책 신규 추진에 따른 측정항목의 관측값 발생에 따른 영향이
 다수로 향후 지속적인 성과추적이 요구.

SEDPI 포괄 성과지수 산출(#4.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확산 부문)

활동지수

70.0점
→
79.9점

핵심 성과지수

종합지수
58.0점
→
67.0점

포괄 성과지수

29.5점
→
60.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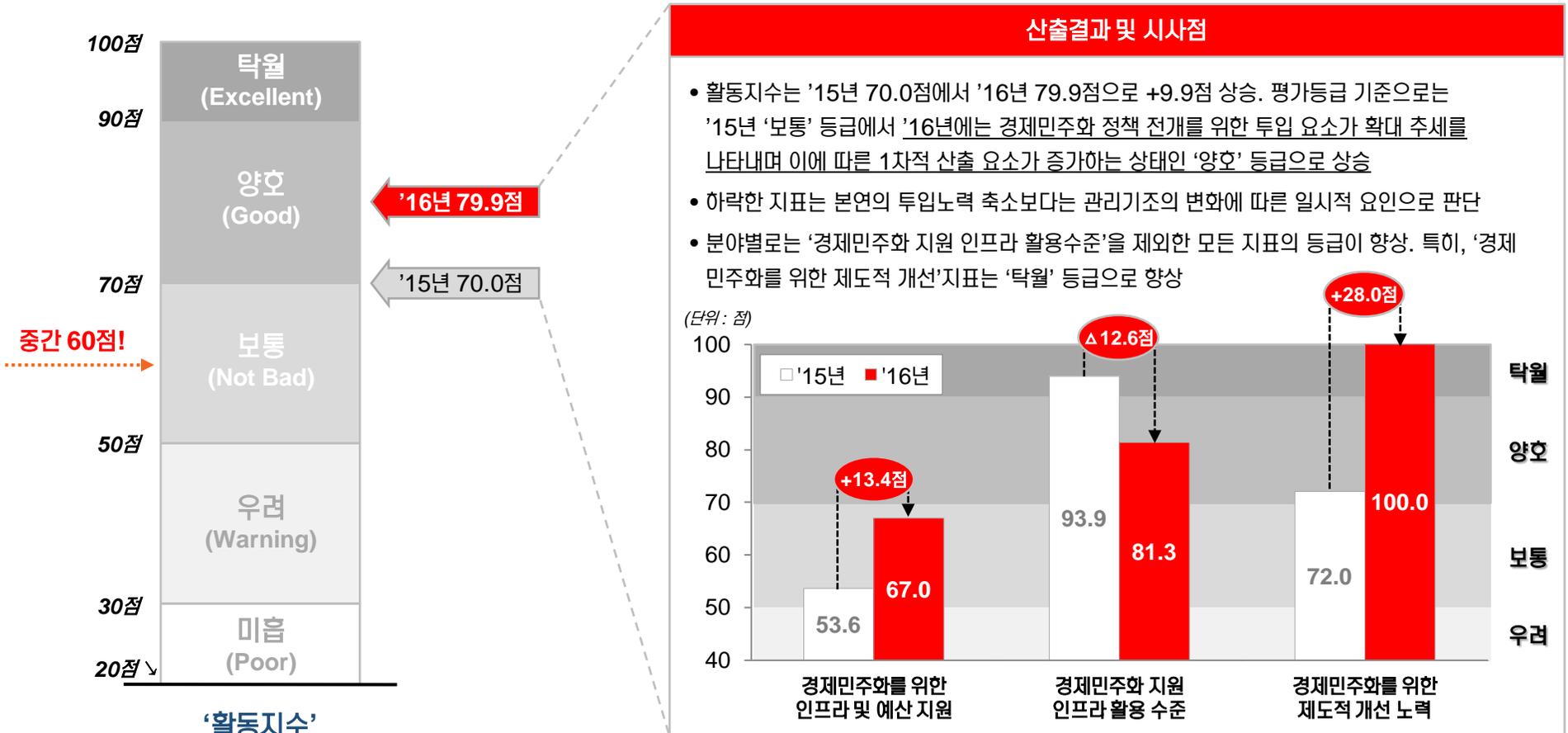
지표(Indicator)		측정항목(Measure)			원자료 값(Raw Data)			비고		
지표명	종합점수		측정항목명	방향	변환점수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외적 확산 (가중치 63.2%)	20.0점	55.4점	빅 데이터 랭킹	↑	변동 無 20.0점 → 20.0점		20위권외	20위권외	20위권외	-
			경제민주화정책 분야별 시민인지도	↑	+70.7점 20.0점 → 90.7점		- (미실시)	- (미실시)	44.2%	-
사회적 경제 확대와 경제 격차의 해소 (가중치 36.8%)	45.8점	68.9점	사회적 기업 사회적가치 효용	↑	+2.4점 71.6점 → 74.0점		미확인	12.9배	13.5배	-
			지역간 격차 해소 전반 개선수준	↑	+43.8점 20.0점 → 63.8점		- (미실시)	- (미실시)	63.8점	-

IV. 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16년에는 경제민주화 정책 전개를 위한 투입 요소가 확대 추세를 나타내며 이에 따른 1차적 산출 요소가 증가하는 상태인 '양호' 등급으로 상승. 일부 지표를 제외한 쏘 지표/측정항목의 확대 성과가 발생해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전개를 위한 투입확대 노력을 확인.

SEDPI 활동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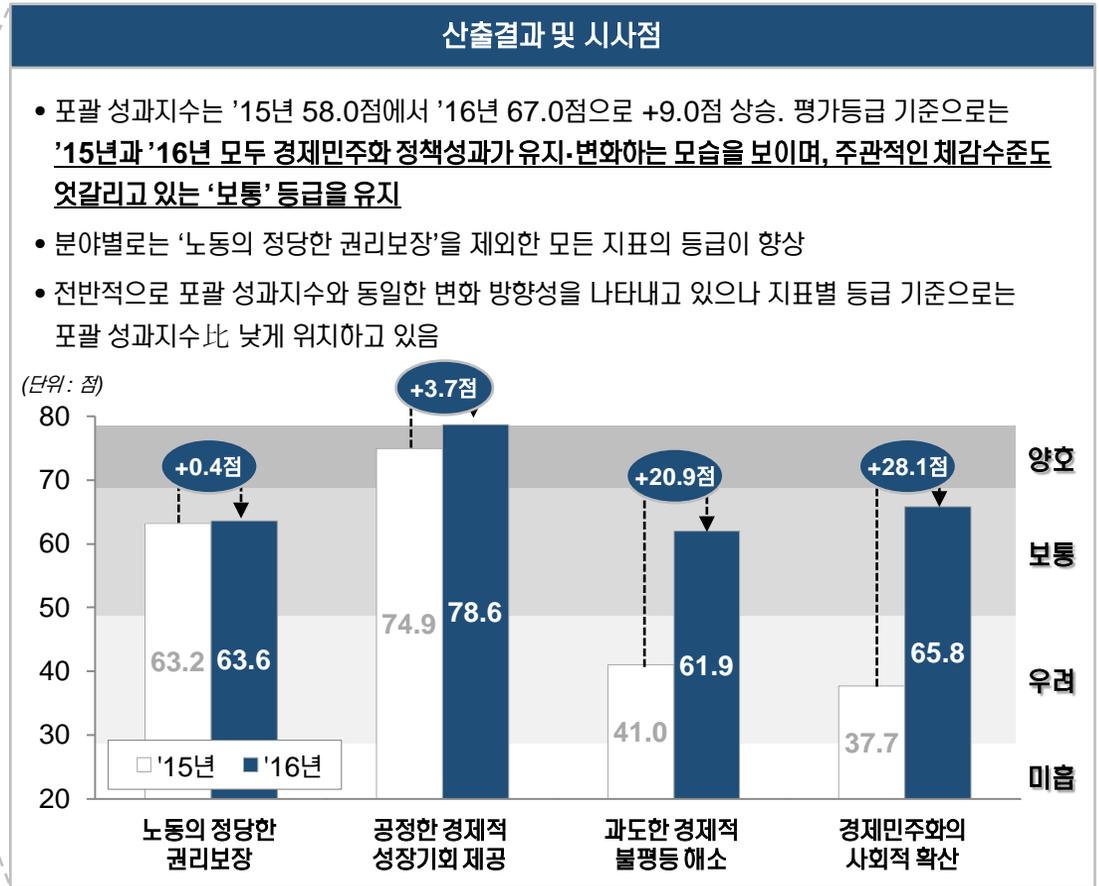


IV. 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쏠 지표의 등급이 '유지' 혹은 '향상' 되었으나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및 '16년 모두 '보통' 등급으로 확인. 향후, 점수향상 성과가 미미한 '노동' 영역의 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

SEDPI 핵심 성과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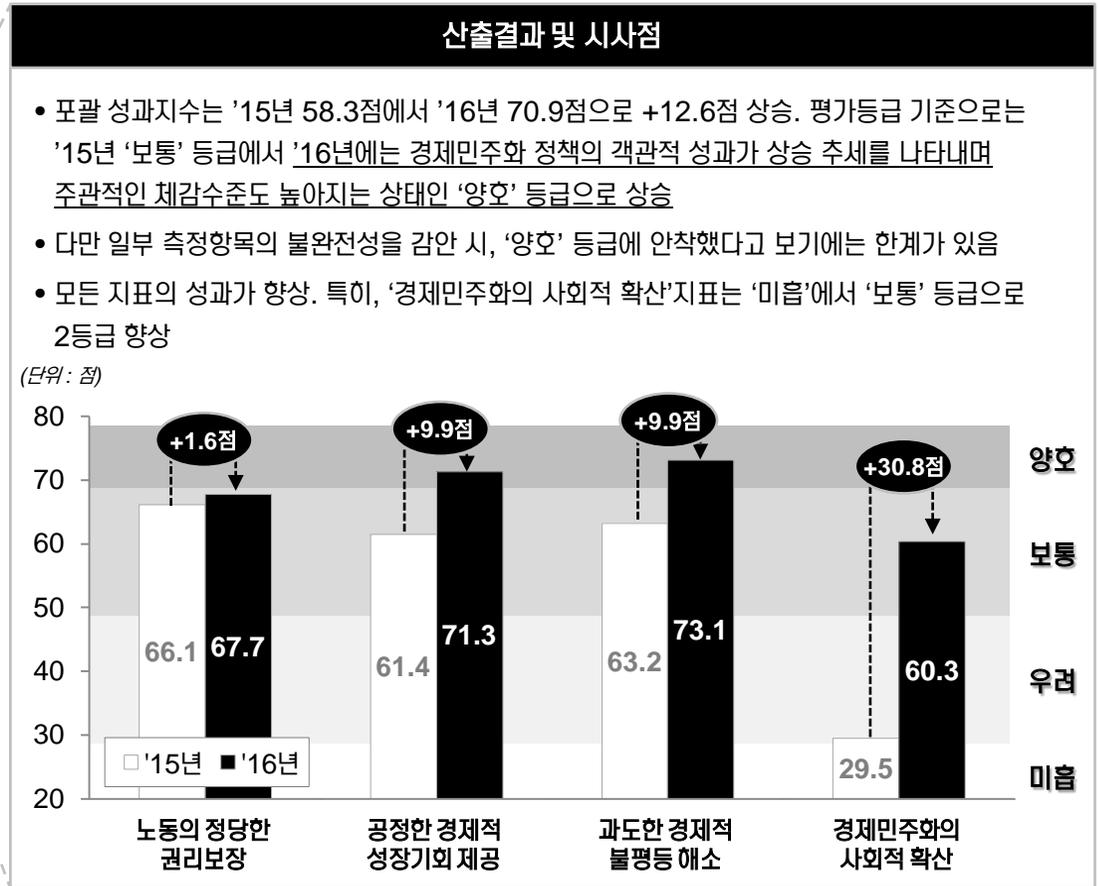


IV. 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표의 등급이 향상됨**에 따라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포괄 성과지수는 ‘15년 ‘보통’ 등급에서 ‘16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 다만, 일부 측정항목의 불완전성을 감안 시, ‘양호’ 등급에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상존. 향후, ‘노동’ 영역과 ‘경제민주화의 확산’ 영역의 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

SEDPI 포괄 성과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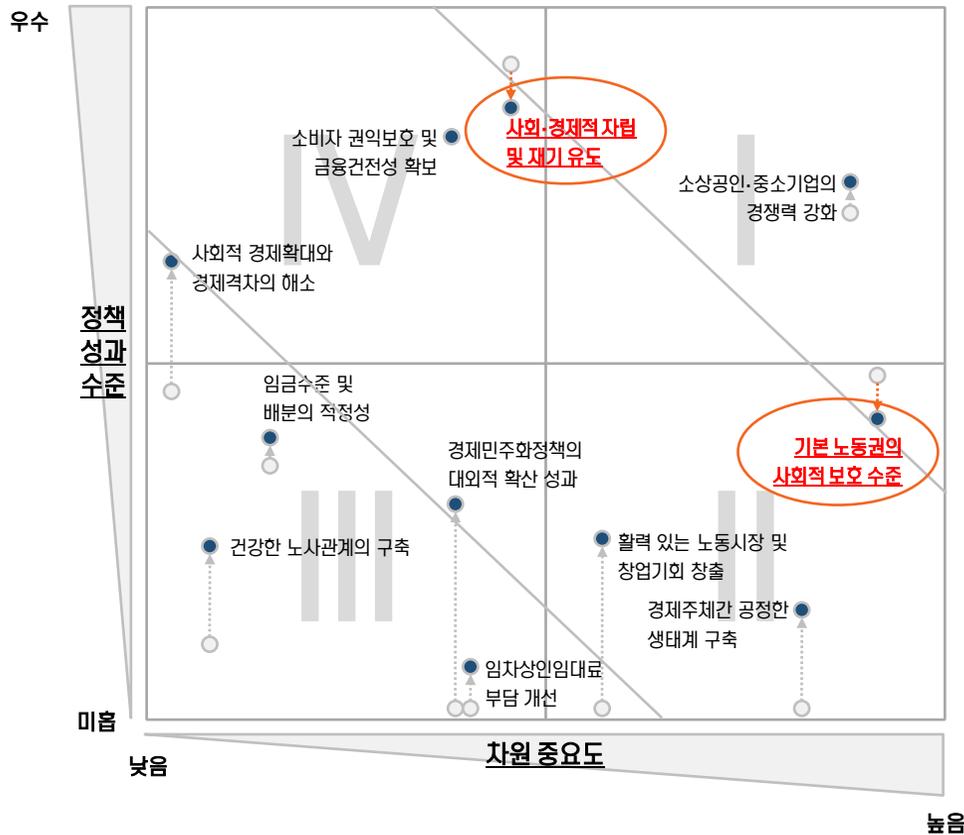


IV.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핵심 성과지수 기준, 서울시의 정책 포지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영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이며, 정책적 집중도를 확대의 최우선 영역은 ‘사회·경제적 자립 및 재기유도’와 ‘기본 노동권의 사회적 보호 수준’으로 파악.

중요도와 성과수준에 따른 개선방향성 도출 Matrix(핵심 성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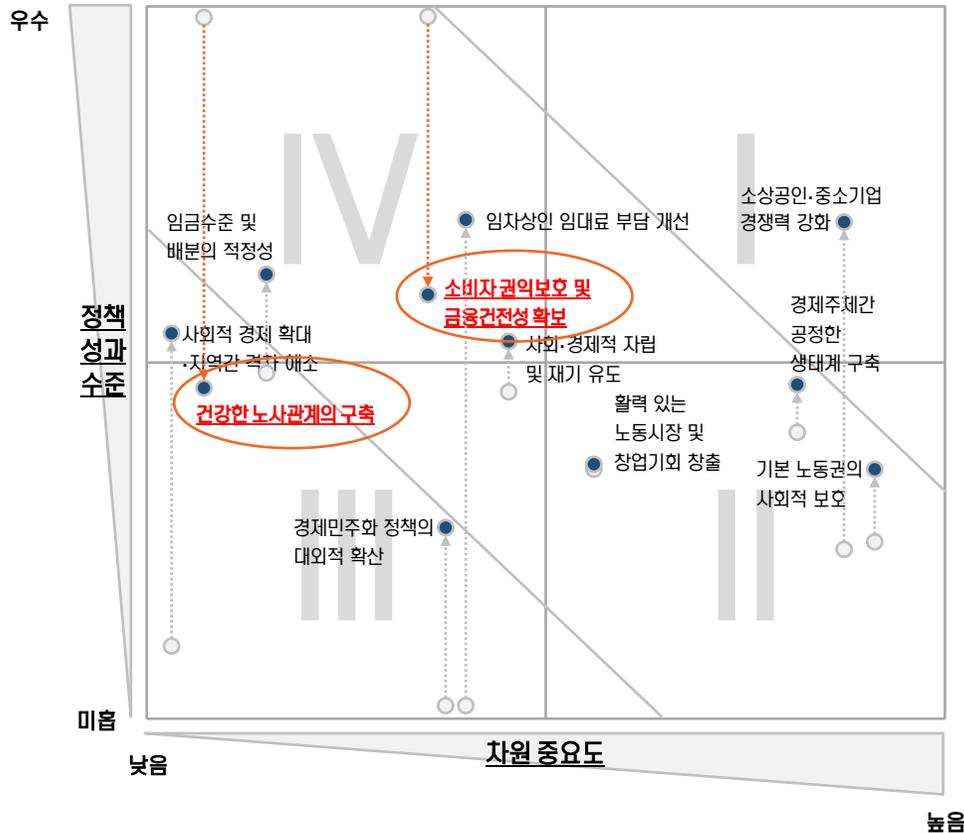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표는 차원 중요도 및 정책성과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파악
- 중요도가 높은 지표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개선성과가 낮은 II 사분면에 해당되는 정책에 대한 개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
 - 대표적인 해당 정책인 ‘금융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 및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실천과제에 대한 지원강화가 요구
- 이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I - II -IV -III 사분면’에 위치한 관련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

IV. 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포괄 성과지수 기준, 서울시의 정책 포지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영역은 핵심 성과지수와 동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이며, 정책적 집중도를 확대의 최우선 영역은 ‘건강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로 파악.

중요도와 성과수준에 따른 개선방향성 도출 Matrix(포괄 성과지수)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표는 차원 중요도 및 정책성과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핵심 성과지수와 방향이 일치 (반대의 경우로 ‘사회적 경제 확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해당)
- 핵심 성과지수 對比 중요도가 높은 지표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개선성과가 낮은 II 사분면에 해당되는 정책에 대한 개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
 - 대표적인 해당 정책인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등 실천과제에 대한 지원강화와 지표 점검이 요구
- 이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I - II -IV -III 사분면’에 위치한 관련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
- 다만, 포괄 성과지수는 핵심 성과지수比 정책효과의 시차 (Time Lag)가 존재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IV.SEDPI 산출결과

IV-3. 결과의 해석

SEDPI 지수체계 개발 및 지수 산출을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SEDPI 하위지수별 주요 시사점

[구분]	[지수 변화행태 특이사항]	[정책적 시사점]
활동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활동지수는 '15년 보통(70.0점) 등급에서 '16년 양호(79.9점)로 1등급 향상 하위 구성요소의 절대적 수준으로는 제도적 개선 노력(탁월) > 지원인프라 활용 수준(양호) > 인프라 및 예산 지원(보통) 순으로 확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부문이 1등급 향상, 기타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1등급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초기의 특성으로 인해 성과지수비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 경제민주화 지원 인프라 활용 수준 부문에 하락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영역의 감소는 직접적인 투입요소의 감소보다는 직접지원 예산 축소와 전년비 교육, 상담 실적의 일시적인 감소로 판단 예산과 인력은 향후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와 시정 방향에 맞게 부합한 방식으로 자원배분이 필요
성과 지수	핵심 성과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는 '15년과 '16년 모두 '보통' 등급을 유지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이 '양호' 등급이며, 기타 원칙과 목표 부문은 '보통' 등급으로 확인 대부분 영역에서 등급향상과 점수향상이 있었으나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부문은 개선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 성과지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양호 등급으로 향상 대다수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 이후 2년 내외로 본격적인 실적발생까지는 다소 한계가 존재하며, Data 보유 문제로 풍부한 측정항목 반영과 지수화 논리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 성과지수와 마찬가지로 지속 관리가 필요 '금융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 및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부문에 집중 시사
	포괄 성과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핵심 성과지수는 '15년 보통(58.3점) 등급에서 '16년 양호(70.9점)로 1등급 향상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과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향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등급향상이 있었으나 핵심 성과지수와 동일하게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은 개선 성과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수준은 핵심 성과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핵심 성과지수는 직접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의 시사 유의 일부 측정항목에는 서울시 Data가 아닌 전국 대상의 Data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측정항목 관리(서울시 Data 확보, 해당 부문 측정 개시 등)가 필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부문에 집중 시사



시민 조사결과

V. 시민 조사결과

V-1. 조사 설계 및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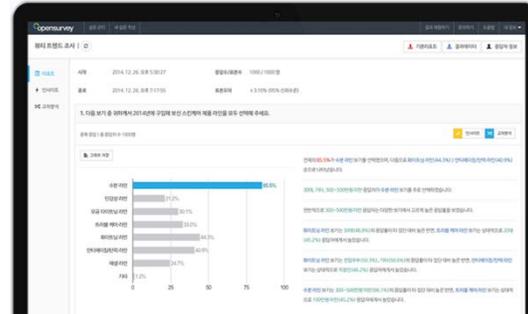
시민대상 설문조사는 1,000샘플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샘플을 구성. 신속한 응답결과의 확보 및 서울시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낮은 인지수준을 고려, 사전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완차원에서 오픈 서베이 플랫폼으로 추진.

시민대상 설문조사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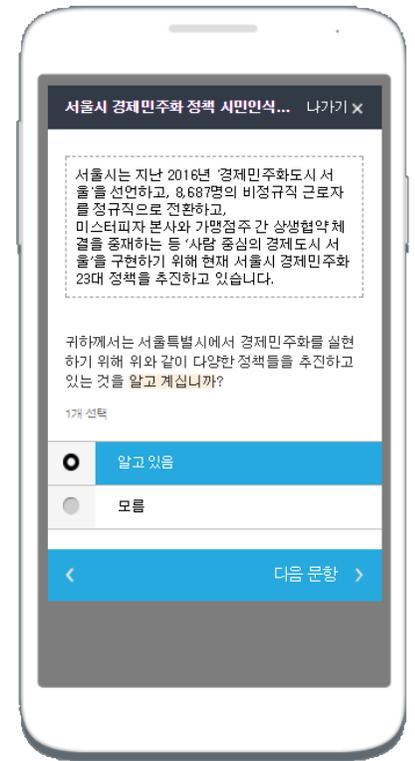


샘플 구성

- 샘플 규모 : 총 1,000샘플
(조사업체 패널 3만명 대상, 선착순 설문요청 및 응답 방식)
- 연령&성별 Quoto)
 - 연령 : 18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한정하여 주민등록인구 기준 샘플 할당
 - 성별 : 50:50 균등 배분으로 진행
- ※ 설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패널에 소액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오픈 서베이 기반, 모바일&이메일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실사기관 아이디인큐)
-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 접속 기기에 구분없이 자유로운 설문정보 제공 및 응답 확인이 가능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시민인식... 나가기 X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8,68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미스터피자 분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경제민주화 2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알고 있음
-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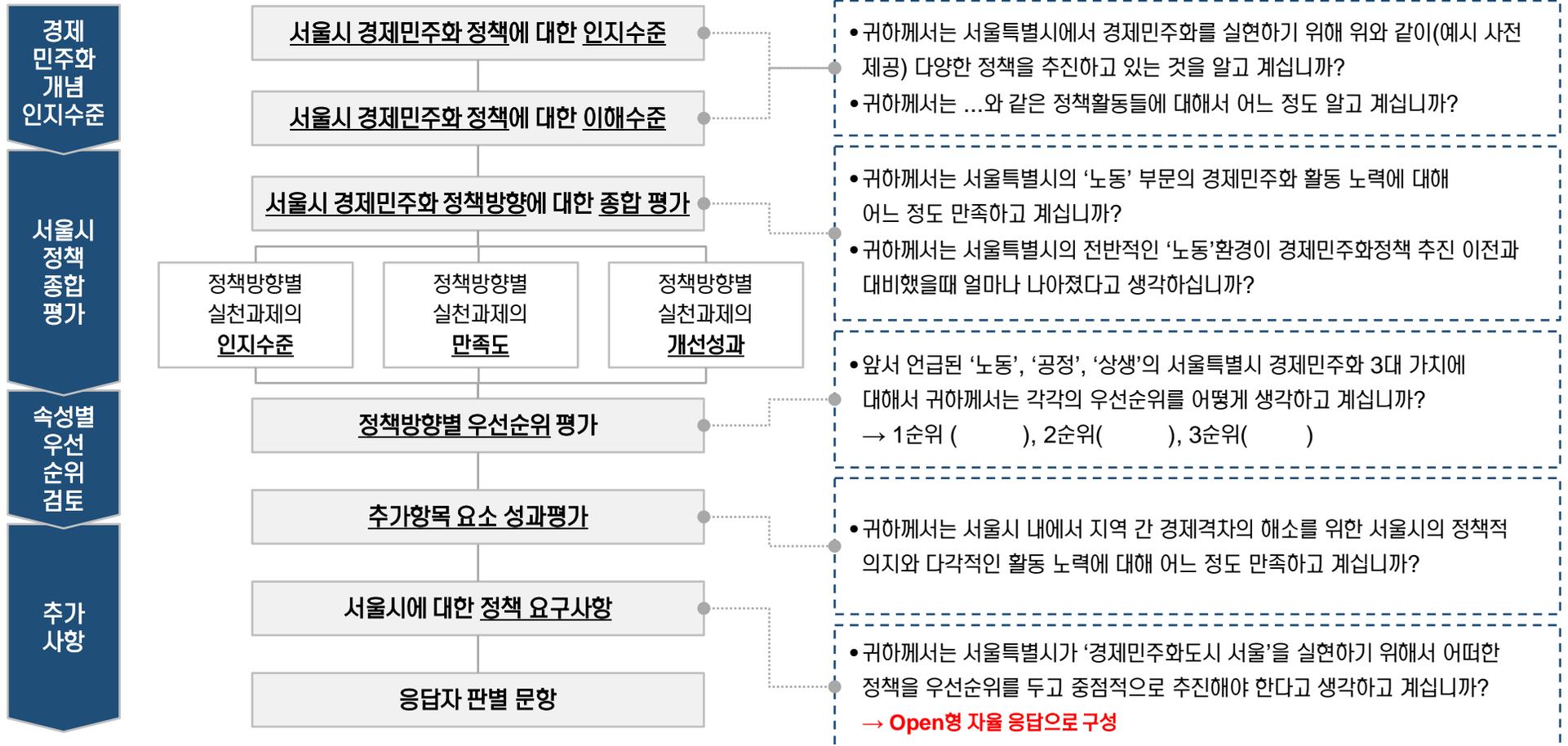
< 다음 문항 >

V. 시민 조사결과

V-1. 조사 설계 및 기획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는 ①경제민주화 개념 인지수준, ②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종합평가, ③속성별 우선순위 평가 및 ④추가사항의 4개 부문으로 구성(20문항)하여 진행.

시민대상 설문조사 구조



V. 시민 조사결과

[별첨] 시민대상 설문조사 문항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시민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고용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경제민주화 수준과 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인식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계신 바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와 회의를 이행하시어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덕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백석대학교 교수 홍길표

* 관련문의 : 고격만충경영학의 선임연구원 김성현 (chandler0720@gmail.com), 한국고용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수 (kslee@kmac.co.kr)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지 수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8,68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스티퍼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체결을 중재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 현재 23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Q1.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 Q2-1.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① 서울특별시에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만 한정적으로 알고 있다.
- ② 서울특별시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기본 사항을 알고 있다.
- ③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정책에 개략적으로 어떠한 실천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있다.
- ④ 2016년 추진한 16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⑤ 전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2017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평가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추구가치인 '노동', '공정', '상생'과 관련해 체험하고 계시는 의식수준과 평가를 묻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추구가치에 대한 부분 설명을 토대로 평소에 느끼고 계신 생각들을 종합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

노동의 존엄성 보장	기본개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여, 이를 토대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및 대가를 지급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추구	대표정책) ①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및 확산, ②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2개 실천과제 (서울형 생활임금제)	③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Q3-1. 귀하께서는 '노동'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서울형 생활임금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있음 ② 들어본 적 없음

Q3-2. 귀하께서는 '노동'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서울형 생활임금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Q3-3. 귀하께서는 '노동'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의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3-4.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 서울시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추진 이전과 대비했을 때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변화 없음	다소 변화있음	미전과 동일함	다소 개선됨	매우 개선됨
①	②	③	④	⑤

Q3-5. 귀하께서는 '노동'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2017년도 경제민주화 정책 중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습니까? () > 복수 선택 가능

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불안정을 해소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② 상시직용임무에 근로하는 서울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③ 영세자영업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유진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정책
④ 근로자가 신속하는 대표 근로자가 경영에 깊게 참여하여 노사 간 경영 성과 등을 공유하는 근로자이사회 도입
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중도입단가이상 노후비 지급 의무화

V. 시민 조사결과

[별첨] 시민대상 설문조사 문항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초개념)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며, 역할과 질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도전기회를 제공함을 추구

대표정책) ① 유망한 기업개약해지 등 불공정 표현차지도 권형 개선을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② 불공정 상가임대차 권형 문제 개선을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불공정조정위원회 운영 등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Q4-1. 귀하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표현차지도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없음 ② 들어본 적 있음

Q4-2. 귀하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표현차지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Q4-3. 귀하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의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4-4.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서울시의 의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 이전과 대비했을 때 긍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변화없음	다소 변화없음	이전과 동일함	다소 개선됨	매우 개선됨
①	②	③	④	⑤

Q4-5. 귀하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아래 서울시의 2017년도 경제민주화 정책 중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습니까? (, ,) ▶ 최대 3개까지 연속 선택 가능

① 유망한 기업개약해지 등 불공정 표현차지도 권형 개선을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② 불공정 상가임대차 권형 문제 개선을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불공정조정위원회 운영
③ 전설공사 대금체불 및 계약금의 축소 등 불공정 하도급 권형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 시스템 구축
④ 불공정계약 등 문화예술 불공정 문제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⑤ 독자별적 시장구조에 따른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⑥ 영주권, 단정권 등 주요 민생침해 업체 대상 특별사법경찰의 신속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
⑦ 임대료 상승에 따른 가계내부형 연상의 예방을 위한 임대차 상생협약 지원
⑧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존 소상공인의 이후 문제 예방 대책 마련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기초개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불균형의 극복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추구

실천과제) ① 창업, 성장유형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원스탑지원을 위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② 대형유통기업의 우분별한 금융상권 진입에 따른 금융상권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한 상권영양조사 실시 등
(자영업지원센터)



Q5-1.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대형유통기업과 금융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없음 ② 들어본 적 있음

Q5-2.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대형유통기업과 금융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Q5-3.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의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5-4.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서울시의 의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 이전과 대비했을 때 상생 구조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변화없음	다소 변화없음	이전과 동일함	다소 개선됨	매우 개선됨
①	②	③	④	⑤

Q5-5.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래 서울시의 2017년도 경제민주화 정책 중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습니까? (, ,) ▶ 최대 3개까지 연속 선택 가능

① 창업, 성장유형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원스탑지원을 위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② 대기업의 우분별한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 문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적임업종제 지원
③ 대형유통기업의 우분별한 금융상권 진입에 따른 금융상권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한 상권영양조사 실시
④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및 소송보조 지원
⑤ 서울시 공기업과 수탁기업 간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⑥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⑦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신용유치자로 전락한 청년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업안정자금 지원
⑧ 경제적 재기 의지가 있는 지방계 체납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복합 등 해체
⑨ 중간급피영역(8~10%)의 부채에 따른 금융취약 소상공인의 저조한 금융접근성 해결

V. 시민 조사결과

V-1. 조사 설계 및 기획

서울시 경제민주화 수준과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는 2017년 6월 20일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개요와 응답자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음.

시민인식 조사 개요

조사목적	서울시 경제민주화 수준과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	
조사기간	2017년 6월 20일(1일간)	
조사방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패널 자기기입식 조사	
문항 수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등 26문항	
응답인원	1000명	
표본오차	± 3.10%p (95% 신뢰수준)	
조사내용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수준
	노동부문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문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노동부문 정책만족도, 변화기여도, 지속확대 필요 정책
	공정부문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부문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공정부문 정책만족도, 변화기여도, 지속확대 필요 정책
	상생부문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부문 경제민주화 정책 인지도 상생부문 정책만족도, 변화기여도, 지속확대 필요 정책
	지역격차 정책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만족도 지역격차 해소에의 정책 변화기여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공정, 상생 가치 중 우선순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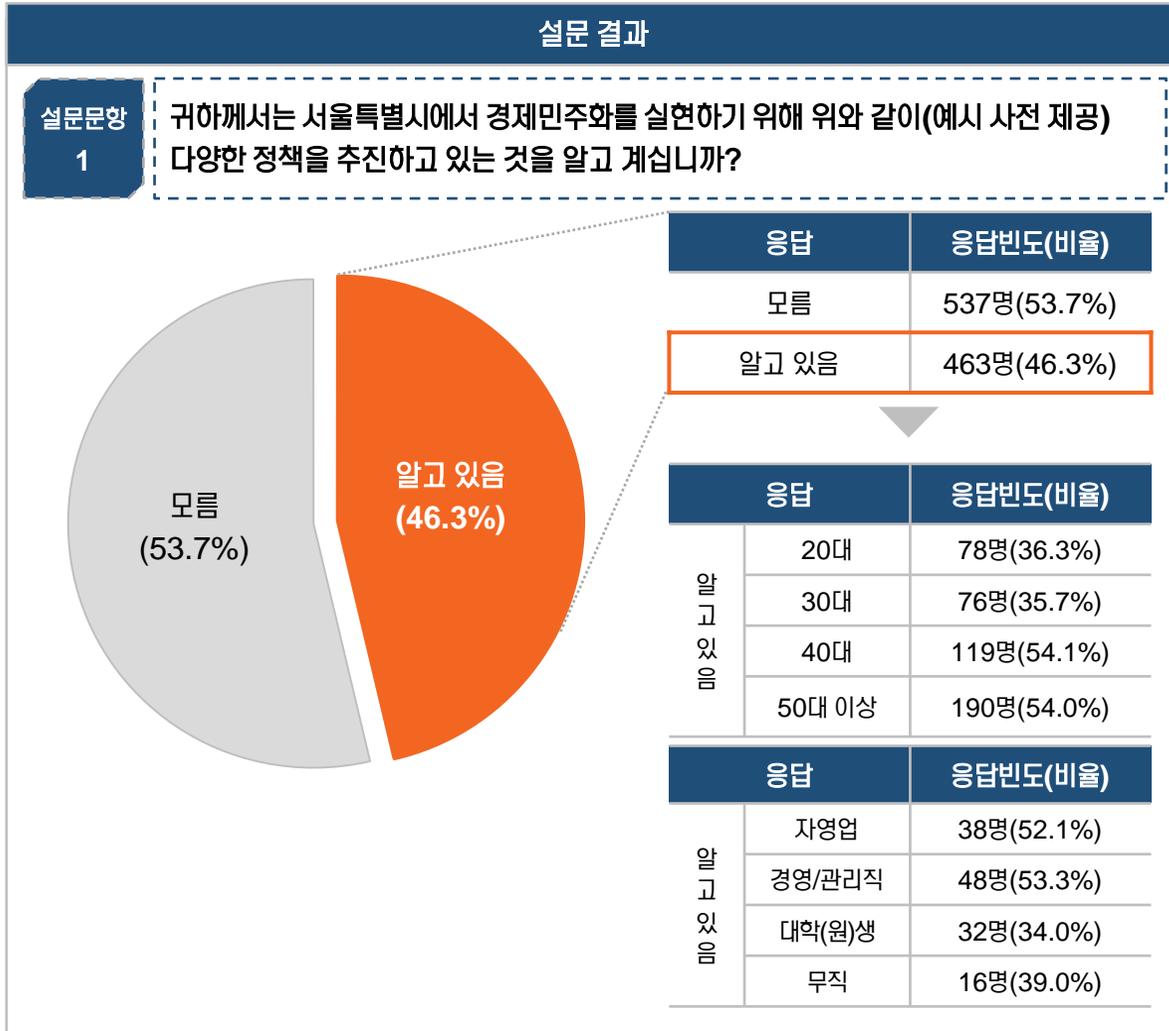
응답자 인구통계

성별	남	497명(49.7%)	
	여	503명(50.3%)	
연령	20대	215명(21.5%)	
	30대	213명(21.3%)	
	40대	220명(22.0%)	
	50대	208명(20.8%)	
	60대	144명(14.4%)	
직업	직장인	판매/영업서비스직	72명(7.2%)
		기능/작업직	30명(3.0%)
		사무/기술직	274명(27.4%)
		경영/관리직	90명(9.0%)
		자유/전문직	110명(11.0%)
	자영업	73명(7.3%)	
	대학(원)생	94명(9.4%)	
	주부	148명(14.8%)	
	무직	41명(4.1%)	
	기타	68명(6.8%)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인지도

응답 시민 중 46.3%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젊은 세대/직업이 없는 무직/학생 그룹에서의 인지도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해당 정책 대상자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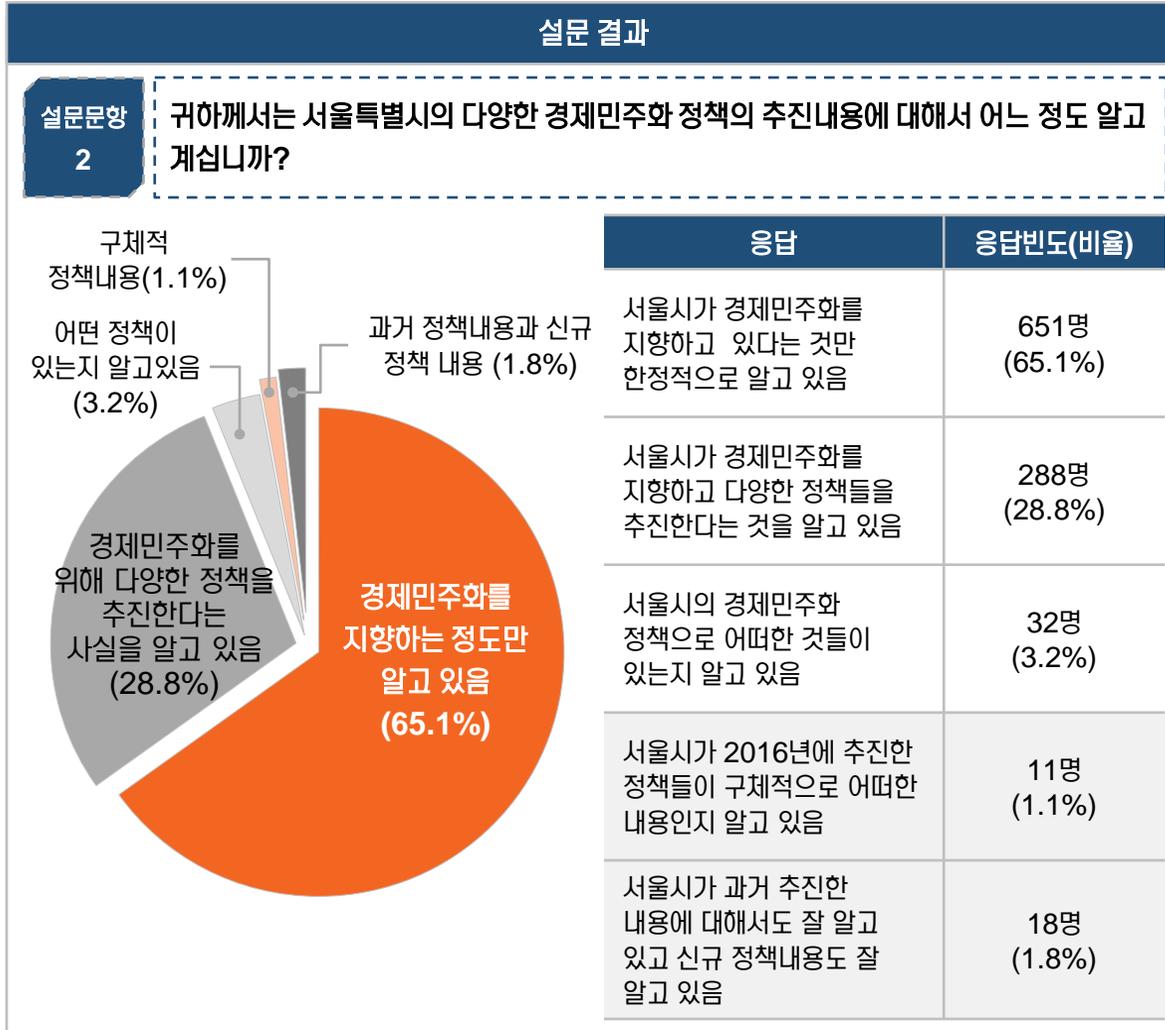


- 시사점**
- 응답자 중 46.3%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
 - 그러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 연령별로는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직업별로는 자영업, 경영/관리직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대학(원)생 및 무직은 타 직업군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측정
 - 젊은 세대, 대학(원)생, 무직자들의 경우,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상인 경제적 약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시, 일부 경제민주화 정책 대상자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고 판단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인지 수준

응답 시민 중 65.1%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으며, 28.8%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응답자 중 65.1%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도만 한정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28.8%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 인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음.
- 이를 통해, 대다수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정책을 통해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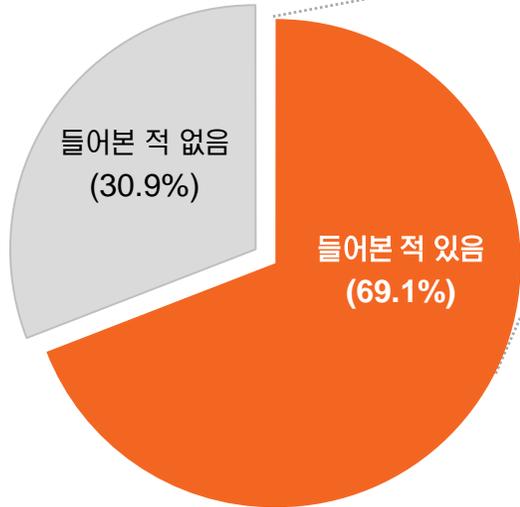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노동의 존엄성 보장 >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응답 시민 중 69.1%는 서울시의 노동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직업이 없는 무직, 학생의 인지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미래 노동 정책 수혜 대상자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3-①

귀하께서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서울형 생활 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들어본 적 없음	309명(30.9%)
들어본 적 있음	691명(69.1%)

응답	응답빈도(비율)	
들어본 적 있음	20대	126명(58.6%)
	30대	145명(68.1%)
	40대	167명(75.9%)
	50대 이상	253명(71.9%)

응답	응답빈도(비율)	
들어본 적 있음	주부	119명(80.4%)
	판매/영업 서비스직	55명(76.4%)
	대학(원)생	52명(55.3%)
	무직	23명(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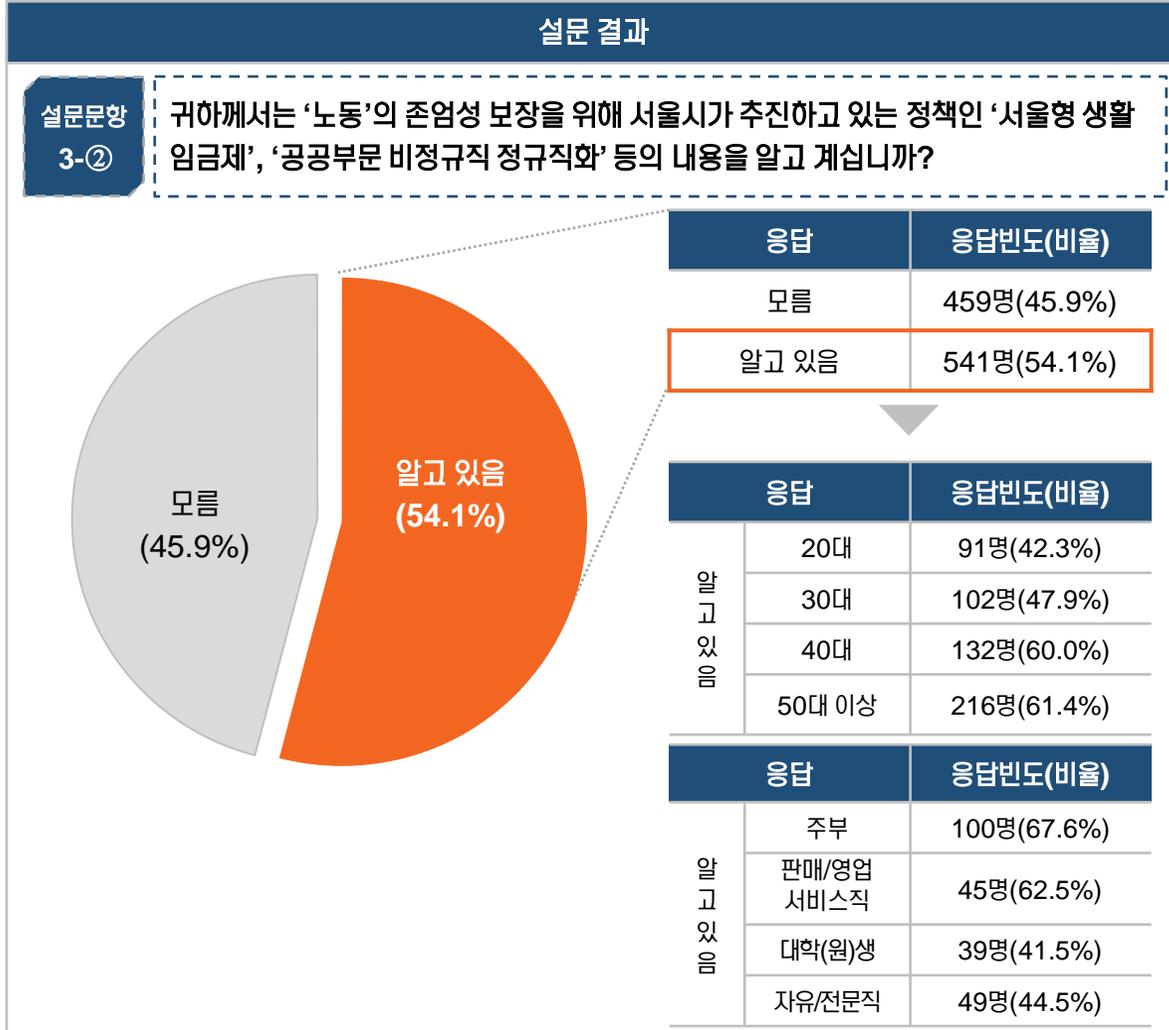
시사점

- 응답자 중 69.1%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주부 중 80.4%, 판매/영업 서비스직 종사자 중 76.4%가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55.3%, 무직인 응답자 중 56.1%가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를 통해,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와 같은 현재의 노동정책 수혜자보다 미래의 노동 정책 수혜자인 대학(원)생, 무직자들 대상의 정책 홍보가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노동의 존엄성 보장 > 정책 인지도

응답 시민 중 54.1%는 서울시의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판매/영업 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현재의 노동 정책의 수혜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응답자 중 54.1%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주부 중 67.6%, 판매/영업 서비스직 종사자 중 62.5%가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41.5%, 자유/전문직 종사자 중 44.5%가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를 통해,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와 같은 현재의 노동정책 수혜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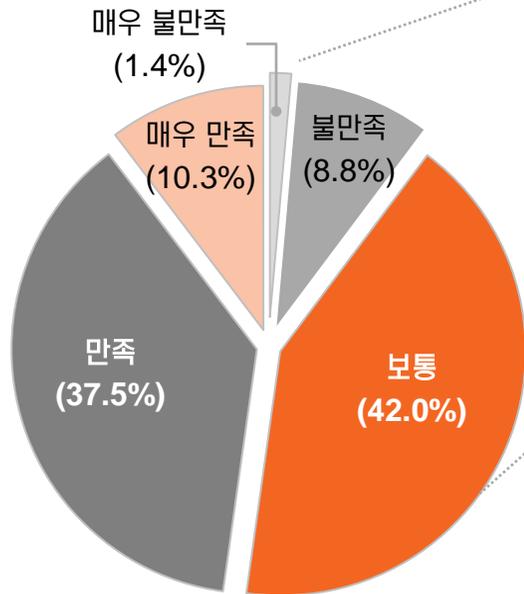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노동의 존엄성 보장 > 정책 만족도

응답 시민 중 47.8%는 서울시의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에 만족하는 반면, 10.2%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정책 인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만족 수준이 낮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3-③

귀하께서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매우 불만족	14명(1.4%)
불만족	88명(8.8%)
보통	420명(42.0%)
만족	375명(37.5%)
매우 만족	103명(10.3%)
만족도 평균	3.46

응답	평균(점)
20대	3.47
30대	3.52
40대	3.62
50대 이상	3.33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불만 다소불만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시사점

- 응답자 중 47.8%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10.2%만이 노동부문 서울시 정책활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의 인지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대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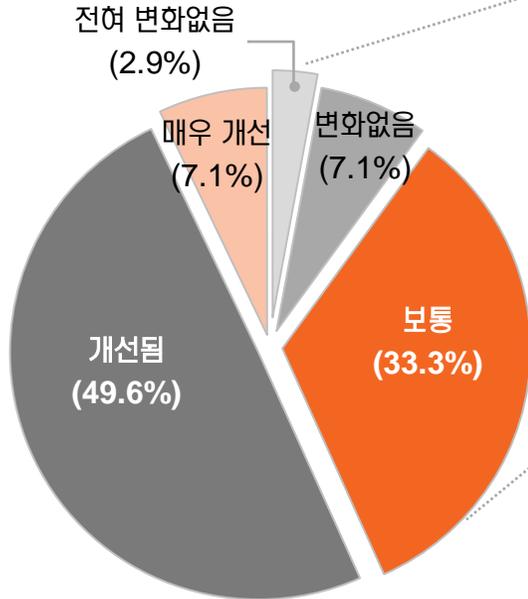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노동의 존엄성 보장 > 정책목표 달성 정도

응답 시민 중 56.7%는 서울시의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이 노동환경을 개선했거나 할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기대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정책 인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이 낮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3-④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 서울시의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 이전과 대비했을 때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전혀 변화없음	29명(2.9%)
변화없음	71명(7.1%)
보통	333명(33.3%)
개선됨	496명(49.6%)
매우 개선됨	71명(7.1%)
만족도 평균	3.51

응답	평균(점)
20대	3.51
30대	3.45
40대	3.69
50대 이상	3.43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미흡 다소미흡 보통 다소개선 매우개선

시사점

- 응답자 중 56.7%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함.
- 반면, 10.0%만이 정책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거나 없을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활동의 정책목표 달성 기대정도가 낮지 않음.
- 연령별로는 40대의 서울시 정책활동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만족도와 같이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의 인지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정책목표 달성의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대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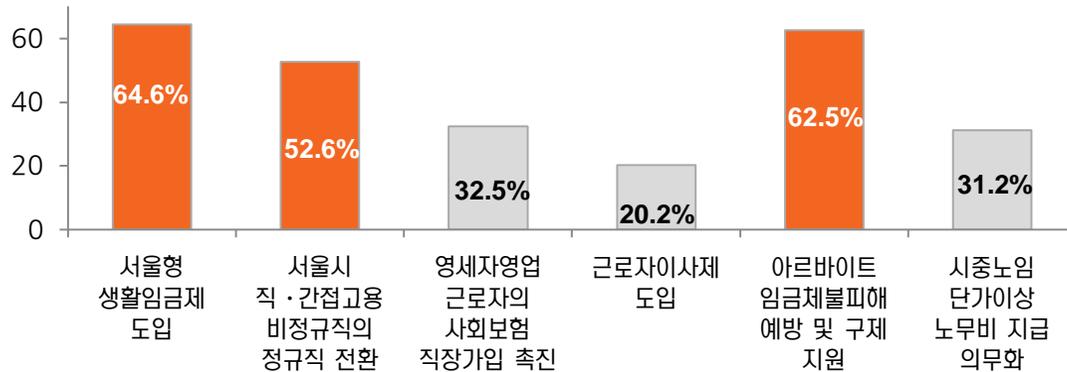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노동의 존엄성 보장 > 지속확대가 필요한 정책

응답 시민 중 60% 이상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아르바이트 임금체불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과 같은 임금 수준 개선과 피해 예방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6%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일자리 안정성 보호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설문 결과

설문문항
3-⑤

귀하께서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아래 서울시의 2017년도 경제민주화 정책 중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습니까?(최대 3개 복수선택)



응답비율(순위)

정책	응답비율(순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64.6%(1)	62.3%(2)	68.5%(1)	65.9%(1)	62.5%(2)
서울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6%(3)	53.0%(3)	53.1%(3)	56.8%(3)	49.4%(3)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사회보험 직장가입 촉진	32.5%(4)	27.0%(5)	31.0%(4)	32.3%(4)	36.9%(4)
근로자이사제 도입	20.2%(6)	15.8%(6)	23.9%(6)	25.0%(6)	17.6%(6)
아르바이트 임금체불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62.5%(2)	72.1%(1)	57.7%(2)	57.3%(2)	62.8%(1)
시중노임 단가 이상 노무비 지급 의무화	31.2%(5)	32.6%(4)	30.0%(5)	31.4%(5)	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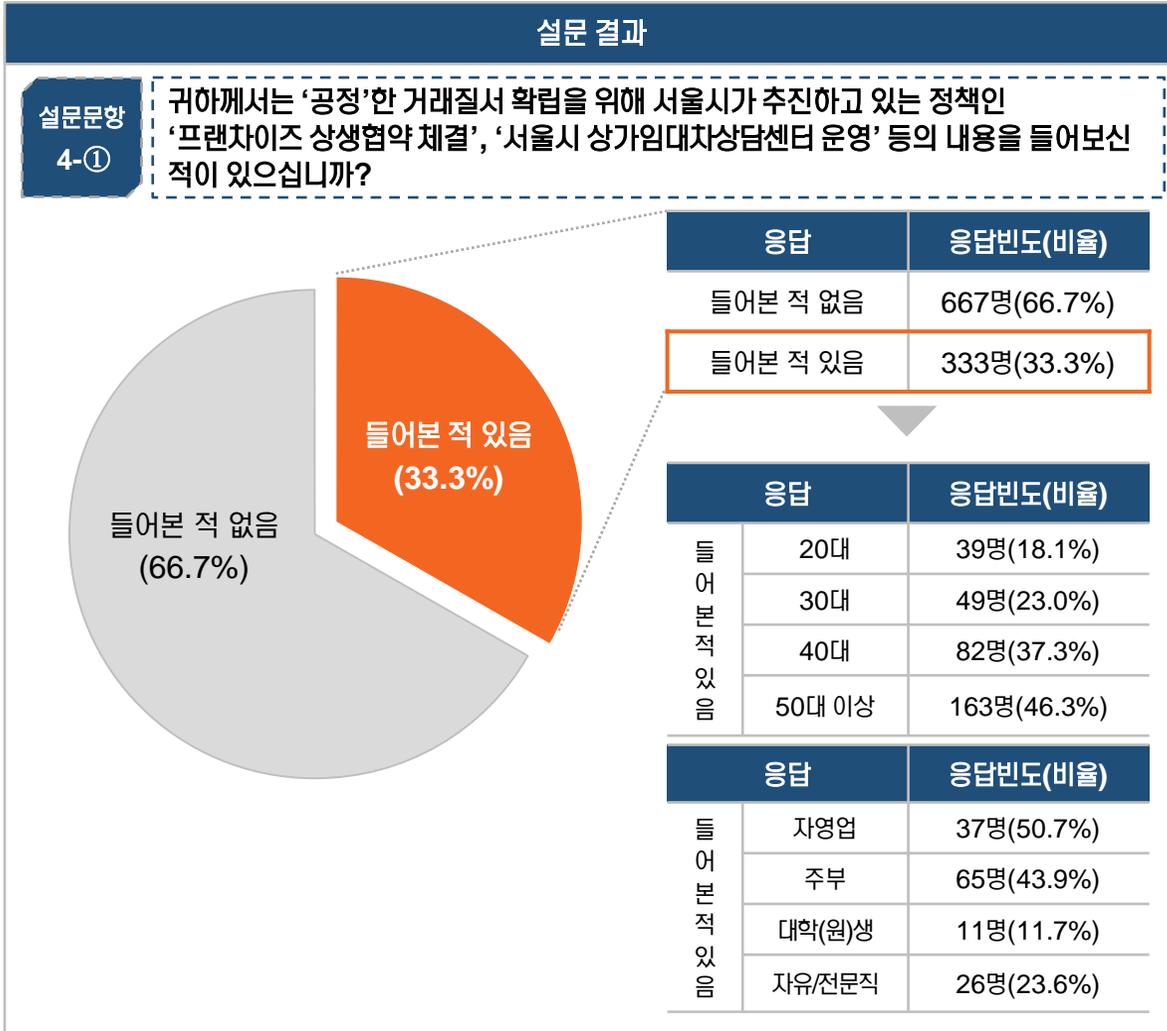
시사점

- 응답자 중 64.6%와 62.5%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예방 및 구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또한 52.6%는 서울시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20대의 경우, 72.1%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피해 예방 및 구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이를 통해 임금수준 및 임금체불 피해 예방에 시민의 관심이 높으며, 이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
- 그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일자리 안정성과 공정한 대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상가임대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33.3%가 서울시의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정책 내용을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전반적 정책 홍보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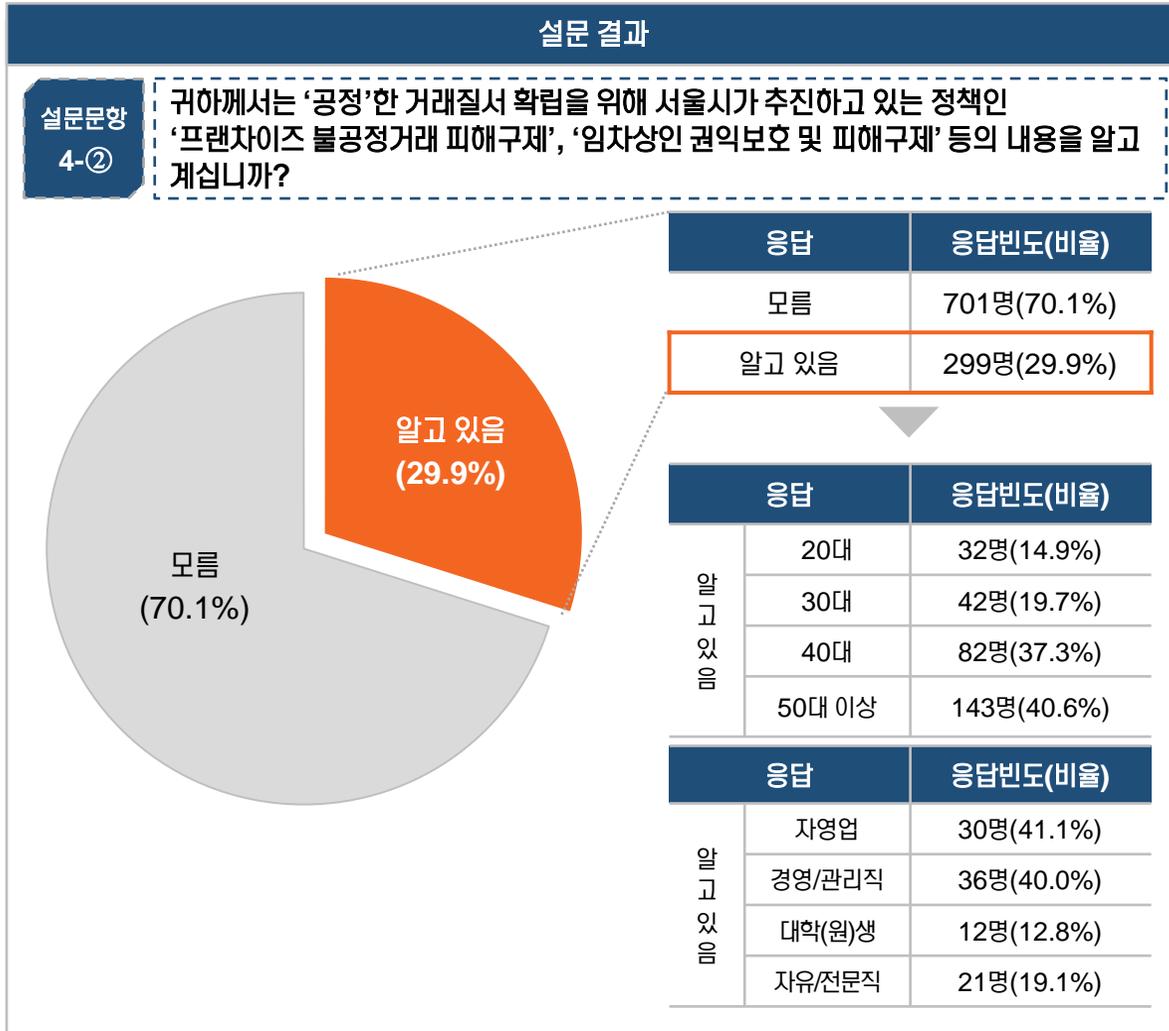


- 시사점**
- 응답자 중 33.3%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이 정책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과반 미만이었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중 50.7%, 주부 중 43.9%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11.7%, 자유/전문직 종사자 중 23.6%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같이 대다수 해당 정책의 수혜 집단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정책을 접하거나 들은 적이 높지만, 전반적 홍보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정책 인지도

응답 시민 중 29.9%는 서울시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영업 및 경영/관리직과 같이 해당 정책의 수혜 혹은 대상집단의 경우 40% 정도 정책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응답자 중 29.9%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이 정책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과반 미만이었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중 41.1%, 경영/관리직 종사자 중 40.0%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12.8%, 자유/전문직 종사자 중 19.1%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자영업자, 경영/관리직과 같이 대다수 해당 정책의 수혜 혹은 대상 집단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정책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전반적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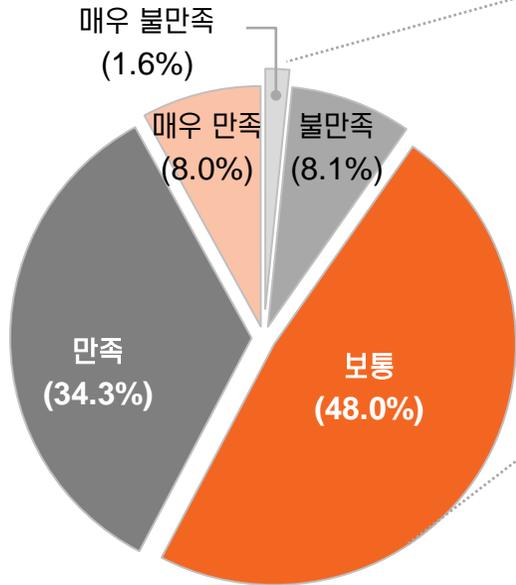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정책 만족도

응답 시민 중 42.3%는 서울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만족한 반면, 9.7%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정책 인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만족 수준이 낮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4-③

귀하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매우 불만족	16명(1.6%)
불만족	81명(8.1%)
보통	480명(48.0%)
만족	343명(34.3%)
매우 만족	80명(8.0%)
만족도 평균	3.39

응답	평균(점)
20대	3.40
30대	3.44
40대	3.52
50대 이상	3.27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불만 다소불만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시사점

- 응답자 중 42.3%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9.7%만이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 정책활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의 인지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대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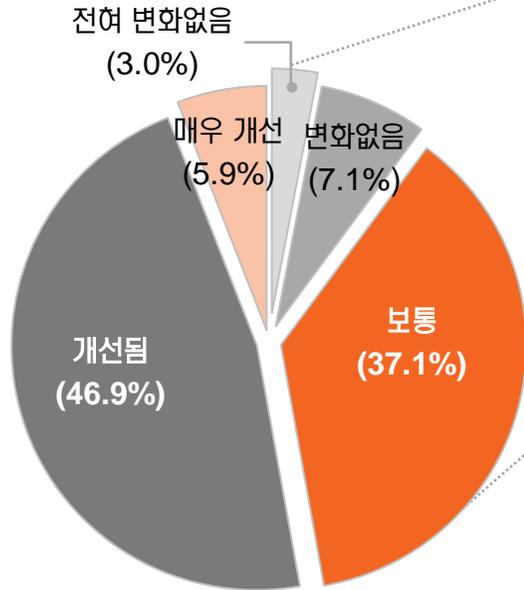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정책목표 달성 정도

응답 시민 중 52.8%는 서울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경제구조를 개선했거나 할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기대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정책 인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이 낮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4-④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서울시의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민주화 이전과 대비했을 때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전혀 변화없음	30명(3.0%)
변화없음	71명(7.1%)
보통	371명(37.1%)
개선됨	469명(46.9%)
매우 개선됨	59명(5.9%)
만족도 평균	3.46

응답	평균(점)
20대	3.41
30대	3.40
40대	3.69
50대 이상	3.37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미흡 다소미흡 보통 다소개선 매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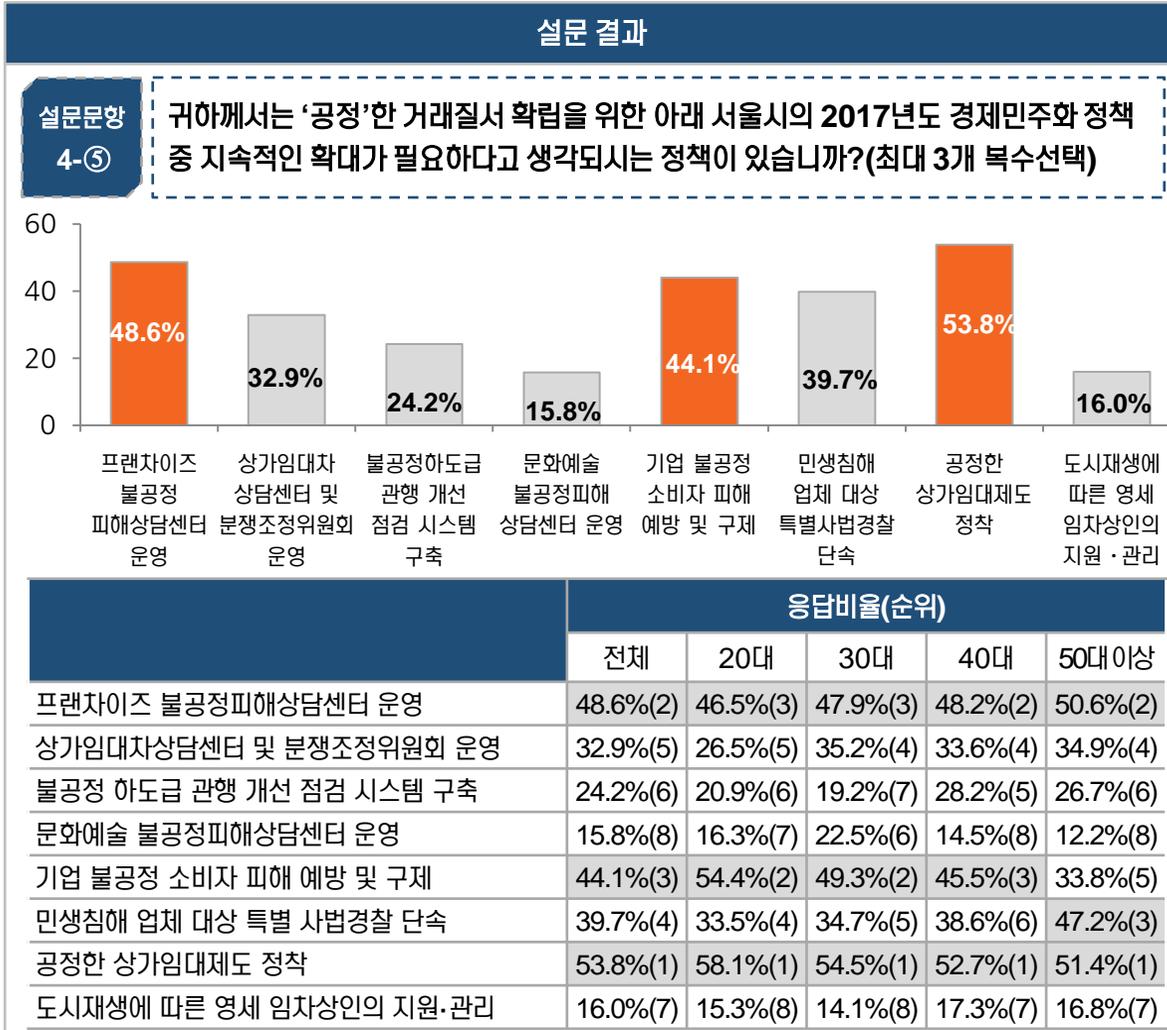
시사점

- 응답자 중 52.8%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통해 경제구조가 공정해졌거나 공정해질 것이라 기대함.
- 반면, 10.1%만이 정책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거나 없을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활동의 정책목표 달성 기대정도가 낮지 않음.
- 연령별로는 40대의 서울시 정책활동을 통해 경제구조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만족도와 같이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의 인지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정책목표 달성의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대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지속확대가 필요한 정책

응답 시민의 과반 이상은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6%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위 '갑질'에 대응 정책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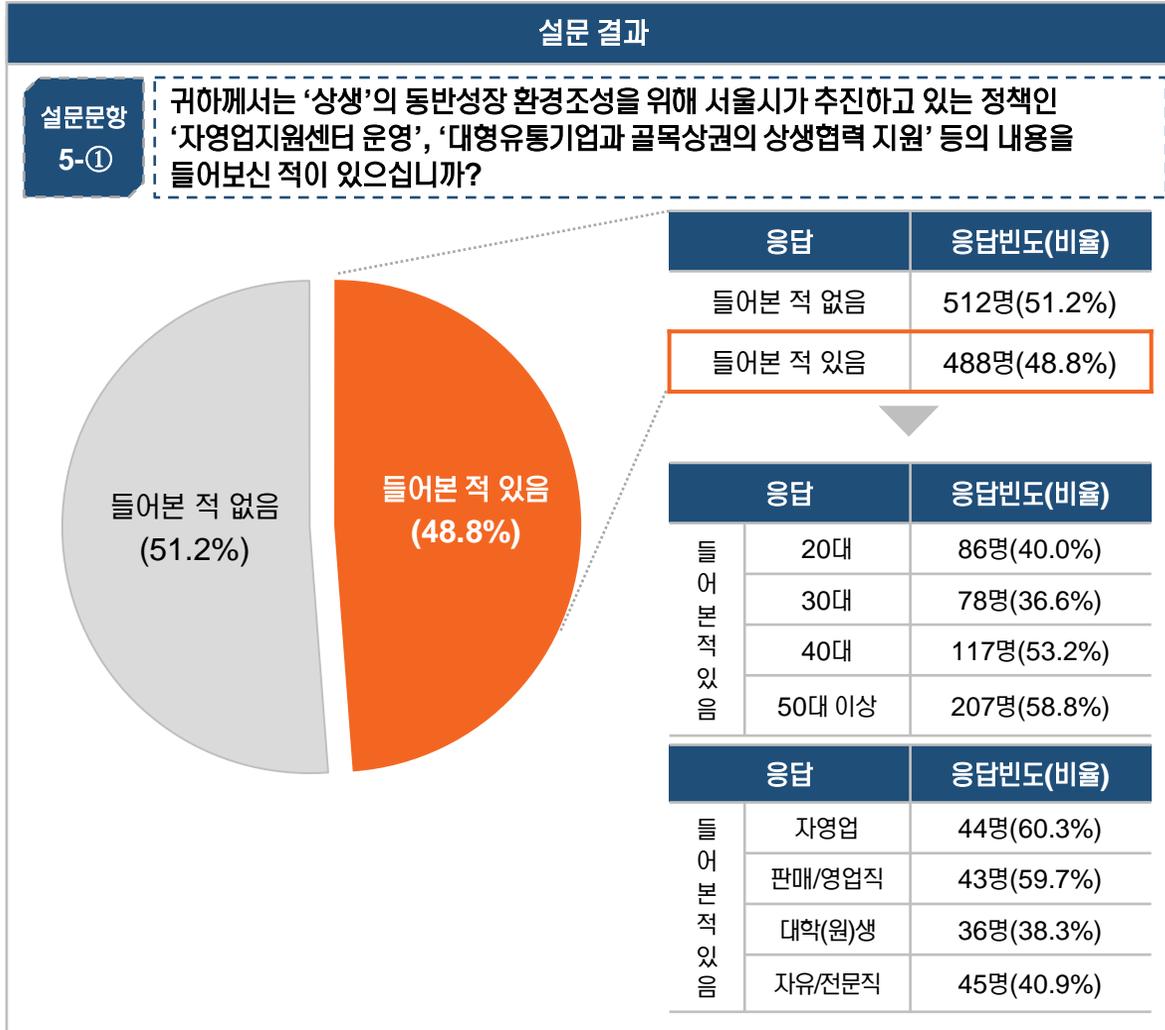


- 시사점**
- 응답자 중 53.8%와 48.6%는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노력,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44.1%는 기업 불공정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전연령에서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음.
 - 다만, 20~30대 젊은 층에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운영 확대보다는 기업 불공정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5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는 민생침해 대상 특별 사업경찰 단속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에 대응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자신과 밀접한 부문의 공정 거래 해당 정책 확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V-2. 시민 응답결과 >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응답 시민 중 48.8%는 서울시의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원)생, 자유/전문직의 인지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책 연관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정책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응답자 중 48.8%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중 60.3%, 판매/영업 서비스직 종사자 중 59.7%가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38.3%, 자유/전문직 종사자 중 40.9%가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자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와 같은 정책 수혜대상 집단에 비해 대학(원)생, 자유/전문직과 같이 상대적 정책 연관성이 낮은 집단이 정책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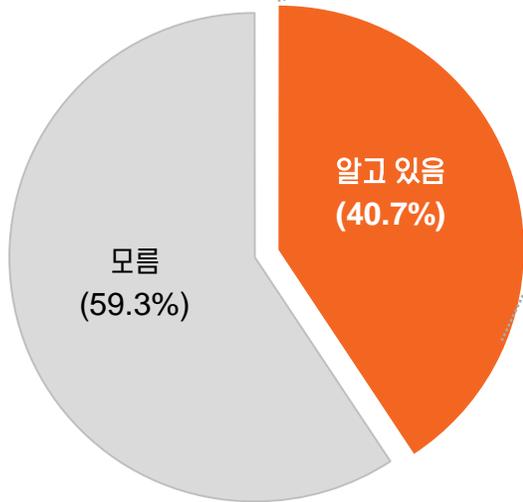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 정책 인지도

응답 시민 중 40.7%는 서울시가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영업 및 경영/관리직과 같이 해당 정책의 수혜 혹은 대상집단의 경우 56% 정도 정책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 인지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 결과

설문문항
5-②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모름	593명(59.3%)
알고 있음	407명(40.7%)

응답	응답빈도(비율)
20대	61명(28.4%)
30대	67명(31.5%)
40대	100명(45.5%)
50대 이상	179명(50.9%)

응답	응답빈도(비율)
자영업	41명(56.2%)
경영/관리직	41명(56.9%)
대학(원)생	28명(29.8%)
자유/전문직	33명(30.0%)

시사점

- 응답자 중 40.7%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상생의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중 56.2%, 경영/관리직 종사자 중 56.9%가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대학(원)생은 29.8%, 자유/전문직 종사자 중 30.0% 가 상생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앞선 정책을 들어본 경험과 같이 대학(원)생, 자유/전문직과 같이 상대적 정책 연관성이 낮은 집단이 정책 내용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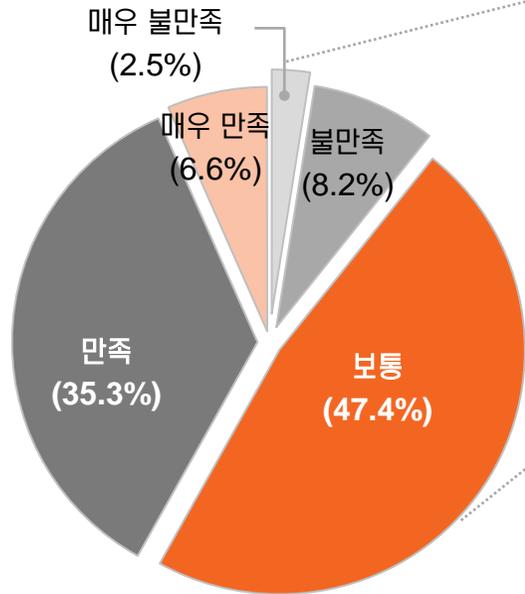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 정책 만족도

응답 시민 중 41.9%는 서울시의 상생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만족한 반면, 10.7%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 '공정' 부문의 정책보다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 결과

설문문항
5-③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매우 불만족	25명(2.5%)
불만족	82명(8.2%)
보통	474명(47.4%)
만족	353명(35.3%)
매우 만족	66명(6.6%)
만족도 평균	3.35

응답	평균(점)
20대	3.30
30대	3.37
40대	3.56
50대 이상	3.24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불만 다소불만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시사점

- 응답자 중 41.9%는 상생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10.7%만이 상생부문 서울시 정책활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노동'부문(47.8%), '공정'부문(42.3%) 대비 정책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타 부문 정책 만족도와 같이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경우 정책의 인지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대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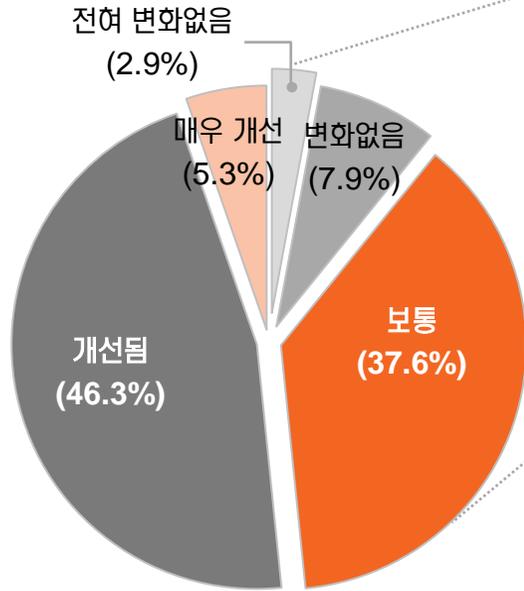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 정책목표 달성 정도

응답 시민 중 51.6%는 서울시의 상생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경제구조를 개선했거나 할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기대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기대수준이 낮아 청년, 노인 등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설문 결과

설문문항
5-④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서울시의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 이전과 대비했을 때 '상생' 구도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전혀 변화없음	29명(2.9%)
변화없음	79명(7.9%)
보통	376명(37.6%)
개선됨	463명(46.3%)
매우 개선됨	53명(5.3%)
만족도 평균	3.43

응답	평균(점)
20대	3.36
30대	3.41
40대	3.62
50대 이상	3.37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미흡 다소미흡 보통 다소개선 매우개선

시사점

- 응답자 중 56.7%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함.
- 반면, 10.0%만이 정책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거나 없을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활동의 정책목표 달성 기대정도가 낮지 않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서울시 정책활동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청년층 및 노년층과 같이 최근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의 상생 성장을 위한 정책노력 확대를 통해 기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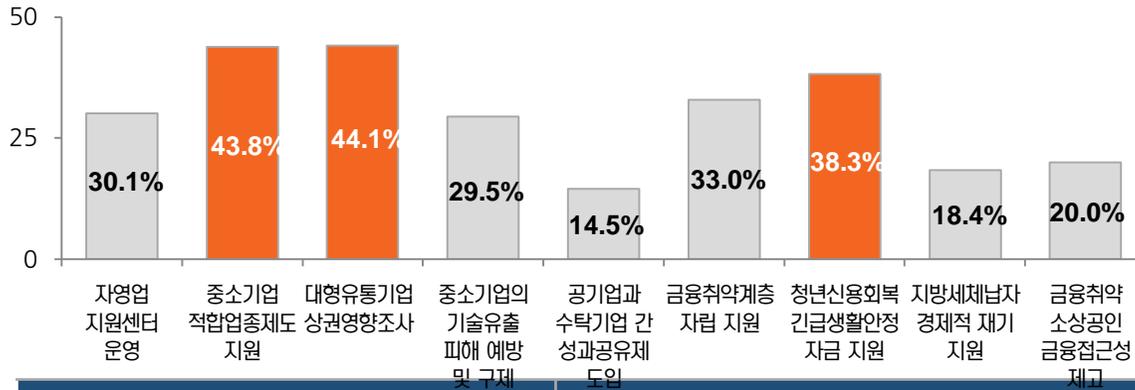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 > 지속확대가 필요한 정책

응답 시민의 약 44%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원, 대형유통기업 상권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약 38%와 33%는 청년 신용유이자 긴급생활안정지원,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의 금융 취약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실문 결과

설문문항
5-⑤

귀하께서는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래 서울시의 2017년도 경제민주화 정책 중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습니까?(3개 복수선택)



응답비율(순위)

정책	응답비율(순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30.1%(5)	39.1%(3)	31.9%(5)	23.6%(7)	27.6%(5)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원	43.8%(2)	40.5%(2)	45.1%(2)	49.1%(1)	41.8%(2)
대형유통기업 상권영향조사	44.1%(1)	34.0%(5)	46.9%(1)	48.2%(2)	46.0%(1)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	29.5%(6)	34.9%(4)	33.8%(4)	24.1%(6)	27.0%(6)
공기업과 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	14.5%(9)	17.7%(7)	13.1%(9)	15.0%(9)	13.1%(9)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33.0%(4)	24.7%(6)	29.1%(6)	38.6%(3)	36.9%(3)
청년 신용회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8.3%(3)	42.8%(1)	37.1%(3)	37.3%(4)	36.9%(3)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18.4%(8)	14.9%(9)	18.3%(8)	16.8%(8)	21.6%(7)
금융취약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	20.0%(7)	15.3%(8)	25.5%(7)	25.5%(5)	18.8%(8)

시사점

- 응답자 중 44.1%와 43.8%는 대형유통기업 상권영향조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제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리고 38.3%와 33.0%는 청년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금융 취약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노동', '공정' 부문과는 달리 연령별 다소 차이가 존재했으며, 20대의 경우, 타연령층에서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권영향조사의 순위가 다소 낮고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확대 필요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또한 20~30대 젊은 층에서는 40대 이상보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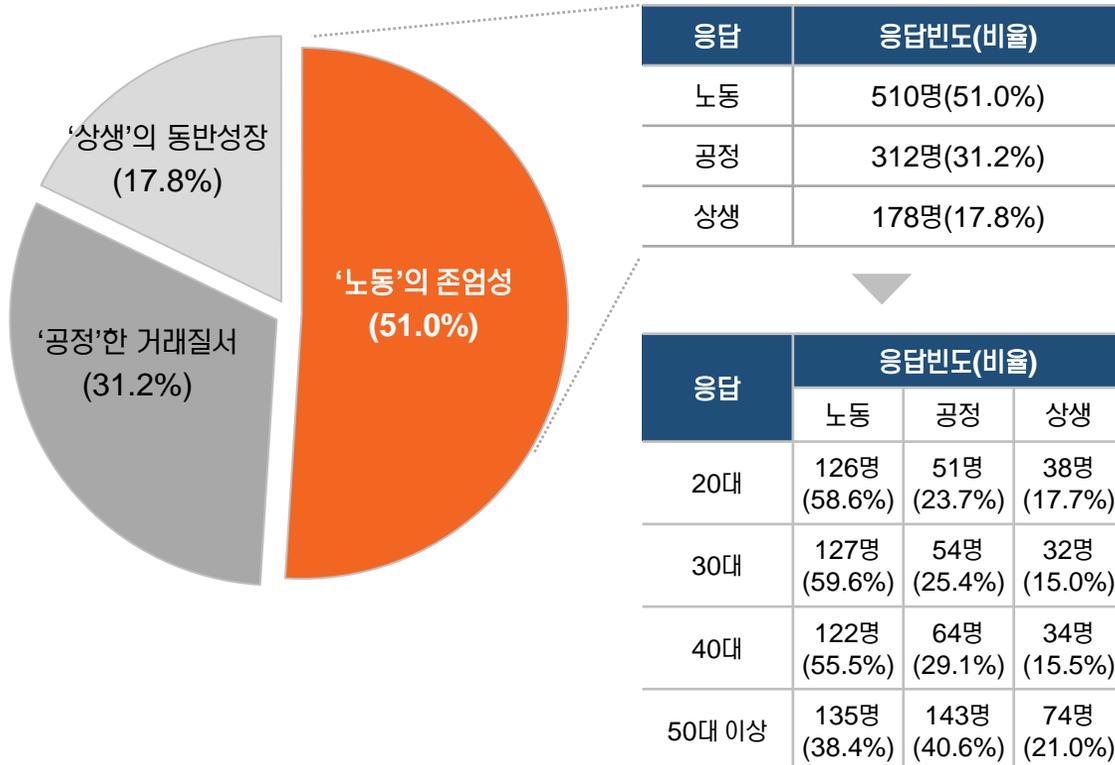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경제민주화 정책 가치 우선순위

응답 시민 중 51%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경제민주화 정책 가치 중 제1순위 가치라고 응답하였으며, 31.2%는 '공정'한 거래질서, 17.8%는 '상생'의 동반성장이 제1가치라 응답하여, 노동>공정>상생의 순으로 나타남

설문 결과

설문문항
6

앞서 언급된 '노동', '공정', '상생'의 3대 가치에 대해 귀하께서는 각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3순위 직접 기입 방식)



시사점

- 응답자 중 51.0%는 경제민주화 정책 가치 중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 제1순위 가치라고 응답했으며, 제1순위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노동 > 공정 > 상생의 순으로 확인
-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유사한 비율로 노동 > 공정 > 상생의 순으로 가치 우선순위를 응답
- 다만, 50대 이상은 공정(40.6%) > 노동(38.4%) > 상생(21.0%) 순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차이가 발생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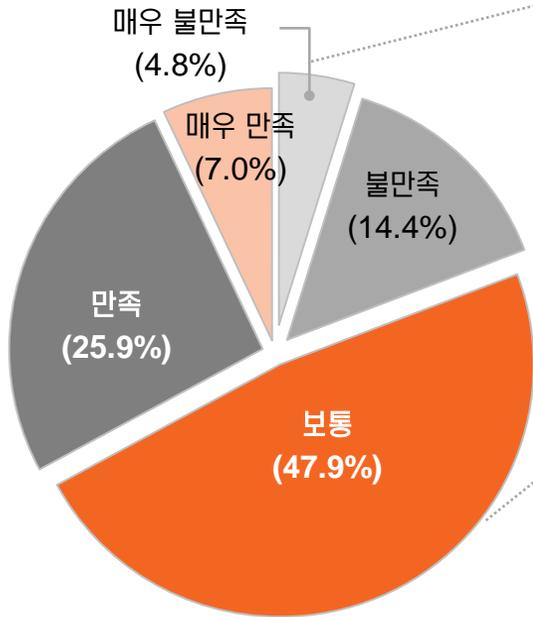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 > 정책 만족도

응답 시민 중 32.9%는 서울시의 지역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만족한 반면, 19.2%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매우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 '공정', '상생'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 결과

설문문항
7-①

귀하께서는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의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와 다각적인 활동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매우 불만족	48명(4.8%)
불만족	144명(14.4%)
보통	479명(47.9%)
만족	259명(25.9%)
매우 만족	70명(7.0%)
만족도 평균	3.16

응답	평균(점)
20대	3.18
30대	3.20
40대	3.29
50대 이상	3.04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불만 다소불만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시사점

- 응답자 중 32.9%는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19.2%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활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매우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절대적 정책 만족도는 매우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제민주화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강남/비강남의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생활 격차 증가가 사회적 이슈화 되어, 만족도 역시 다른 분야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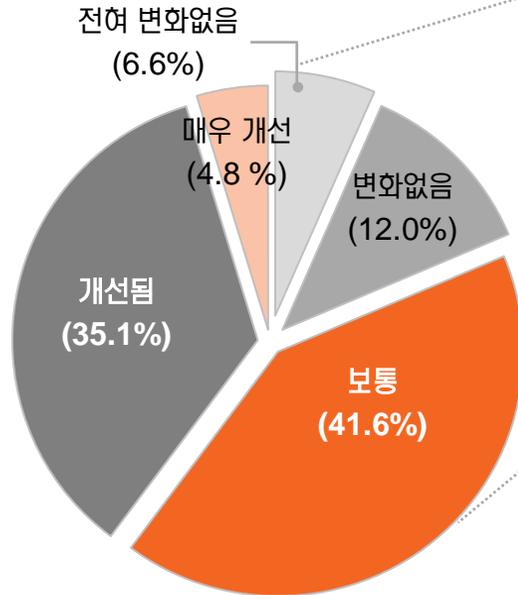
V-2. 시민 응답결과 >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 > 정책목표 달성 정도

응답 시민 중 39.9%는 서울시의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격차를 개선했거나 할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기대도가 매우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민주화 타 정책대비 정책 기대가 낮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설문 결과

설문문항
7-②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지역 간 경제격차가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 이전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빈도(비율)
전혀 변화없음	66명(6.6%)
변화없음	120명(12.0%)
보통	416명(41.6%)
개선됨	351명(35.1%)
매우 개선됨	47명(4.8%)
만족도 평균	3.19

응답	평균(점)
20대	3.15
30대	3.23
40대	3.31
50대 이상	3.12

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①-----②-----③-----④-----⑤

매우미흡 다소미흡 보통 다소개선 매우개선

시사점

- 응답자 중 39.9%는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통해 지역격차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함.
- 반면, 18.6%는 정책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거나 없을 것이라 응답하여 정책활동의 정책목표 달성 기대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가 서울시 정책활동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절대적 정책 기대도는 매우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제민주화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강남/비강남의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생활 격차 증가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국가 정책 실패 경험에 따라 다른 분야 대비 기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판단됨.

V. 시민 조사결과

V-3. 종합 시사점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정책적 홍보 노력 확대가 필요.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 특히,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노동' 분야의 가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해당 분야의 정책 목표 달성이 더욱 강조.

<p>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응답함 • 특히,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은 응답자의 약 3%에 불과하였음 • 전반적 인지도 및 개별 정책분야 인지도에 있어서 20~30대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각 정책분야에서 만족도와 정책목표 달성 기대도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대상 정책 홍보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젊은 세대, 대학(원)생, 무직자 등 현재의 경제적 취약계층 이면서 미래 노동 정책 수혜 대상자의 정책 인지 수준이 낮게 나타나 정책적 홍보노력 확대가 필요함 • 정책 인지도, 만족도, 정책목표 달성기여도의 연령별 경향이 모든 정책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인지 대비 만족도가 낮아 이들을 위한 정책노력 확대가 필요함
<p>노동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부문 정책의 경우, 경제민주화 다른 부문 정책보다 인지도와 만족도, 정책목표 달성 기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 부문의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아르바이트 임금체불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는 노동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로 판단하여, 노동 분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최저임금 등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대응 정책들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사회적 이슈 대응 정책노력이 필요함
<p>공정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부문 경우 공정한 상가임대차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운영, 기업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운영이 타 정책에 비해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다만, 50대 이상은 민생침해 업체 대상 특별 사법경찰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부문 역시 상가임대료 상승과 임대인 및 프랜차이즈 갑질 등 사회적 이슈 대응 정책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년층의 민생침해 업체 대상 특사경 단속 확대 필요 응답이 높은 것과 같이 연령별 불공정 피해 양태 차이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가 존재함
<p>상생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 부문 정책의 경우, 대형유통기업 상권영향조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지원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외 40대 이상에서는 금융취약층 지원 관련 제도 확대가 20대는 청년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 부문 역시 대형유통기업-중소기업/골목상권 상생 등 사회적 이슈 대응 정책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40대 이상에서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20대에서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확대 필요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상생을 위한 정책수요에 연령별 차이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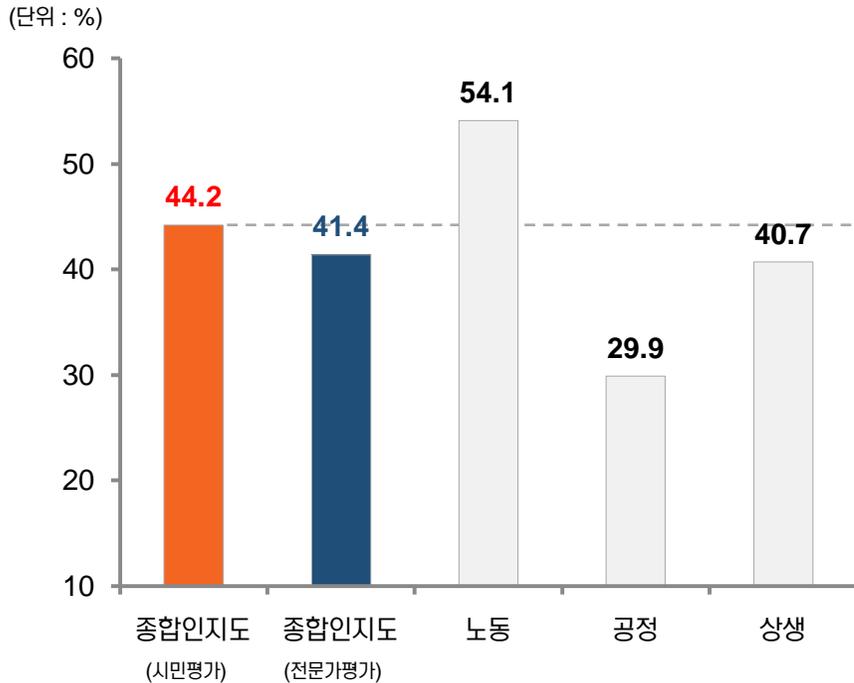
V. 시민 조사결과

V-3. 종합 시사점

경제민주화 3대 요소별 인지도는 노동 > 상생 > 공정 순으로 확인되며, 종합 인지도는 44.2%로 전문가 평가 가중치 적용 종합 인지도 41.4%와 시민의 전반 인지도인 46.3%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 '공정' 영역에 경제민주화 정책의 커버리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 시, 일반 시민의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정책 홍보 확대 필요성을 시사.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 시사점(원칙별 인지도)

경제민주화 3대 원칙별 인지도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노동, 공정, 상생)별 인지도는 노동(54.1%) > 상생(40.7%) > 공정(29.9%)의 순으로 나타남
- 원칙별 인지도에 시민이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 종합 인지도는 44.2%이며, 전문가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는 41.4%로 40% 초반으로 확인.
(참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 인지도 46.3%)
- 시민이 평가한 종합 인지도는 전반 인지도와 2% 차이로 개별 요소에 대한 인지수준과 종합적인 인지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커버리지가 '공정' 영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 시, 일반 시민의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
- 향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필요성을 시사

주1) 시민이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51.0%), 공정(31.2%), 상생(17.8%)

주2) 전문가가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30.0%), 공정(30.8%), 상생(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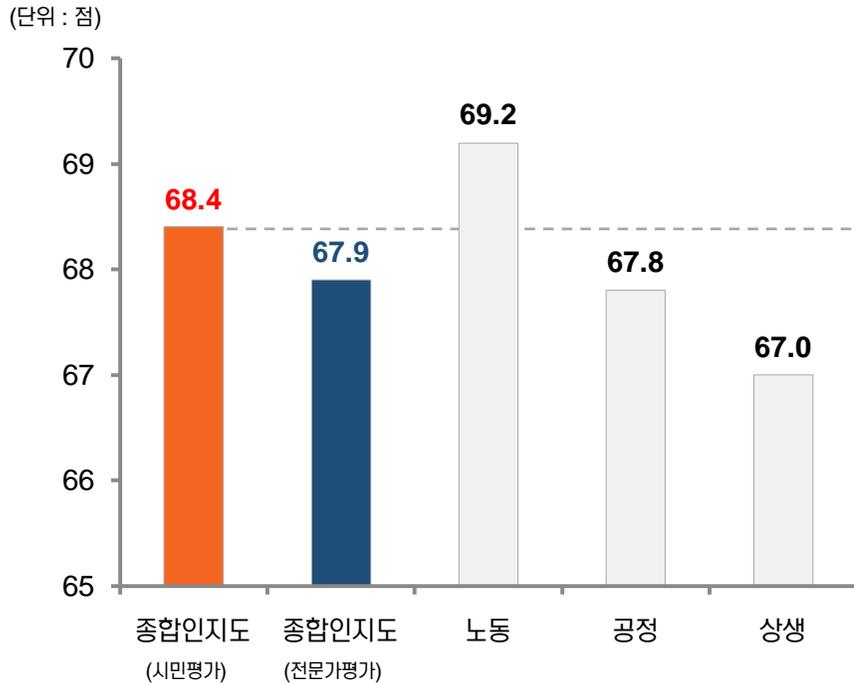
V. 시민 조사결과

V-3. 종합 시사점

경제민주화 3대 요소별 만족도는 노동 > 공정 > 상생 순으로 확인되며, 종합 만족도는 68.4점으로 전문가가 평가한 가중치 적용 종합 만족도 67.9점과 큰 차이가 없음. 인지도 수준과 만족도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 현업 근로자의 '노동' 부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해당 정책에 대한 관여도 및 지각된 인지수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 시사점(원칙별 만족도)

경제민주화 3대 원칙별 만족도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노동, 공정, 상생)별 만족도는 노동(69.2점) > 공정(67.8점) > 상생(67.0점)의 순으로 나타남
- 원칙별 만족도에 시민이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 종합 만족도는 68.4점이며, 전문가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는 67.9점으로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인지도와 상이한 원칙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높은 인지도 ≠ 높은 만족도)
- 노동 부문에 대한 직업별 만족도가 공무원(75점) > 사무/기술직(71.8점) > 판매/영업직(70.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현업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것은 해당 대상의 정책적 관여도, 지각된 인지수준 등이 높은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정책대상자의 직접적 정책 영향도가 만족도에 직결되기에 향후,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 기획·시행 강화가 필요

주1) 시민이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51.0%), 공정(31.2%), 상생(17.8%)

주2) 전문가가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30.0%), 공정(30.8%), 상생(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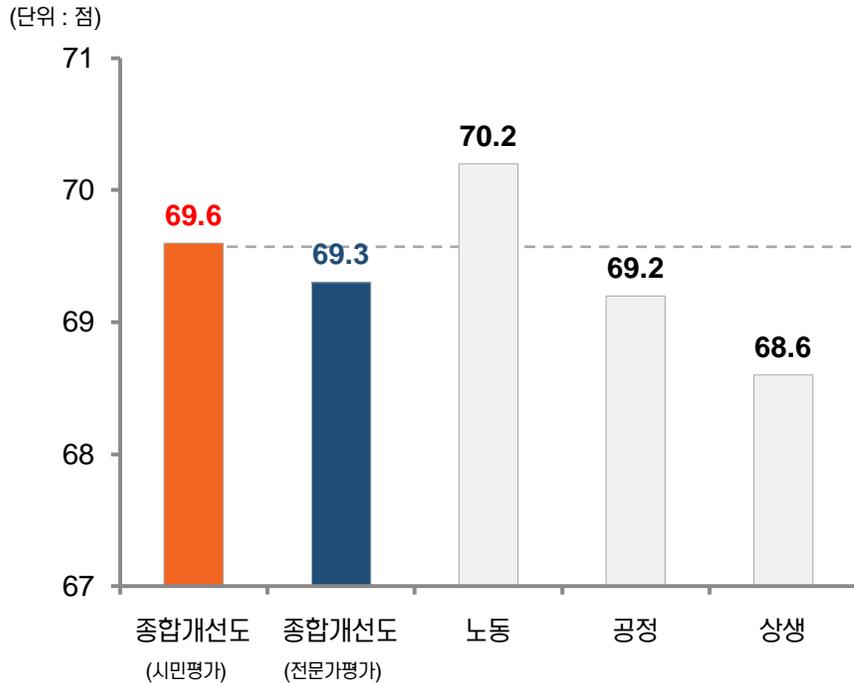
V. 시민 조사결과

V-3. 종합 시사점

경제민주화 3대 요소별 개선정도는 노동 > 공정 > 상생 순으로 확인되며, 종합 개선도는 69.6점으로 전문가가 평가한 가중치 적용 종합 개선도인 69.3점과 큰 차이 없음.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인지도 수준과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는 ‘노동’ 부문, 자영업자는 ‘상생’ 부문에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 맞춤형 정책 기획·시행 강화를 시사.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 시사점(원칙별 개선도)

경제민주화 3대 원칙별 개선정도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노동, 공정, 상생)별 개선수준은 노동(70.2점) > 공정(69.2점) > 상생(68.6점)의 순으로 나타남
- 원칙별 만족도에 시민이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 종합 만족도는 69.6점이며, 전문가 평가한 가중치 적용 시는 69.3점으로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인지도와 상이한 원칙별 개선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높은 인지도 ≠ 높은 만족도 ≙ 높은 개선 수준)
- 개선도 또한 만족도 수준과 유사한 조사대상별 응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책 관여도에 따른 영향을 시사 (일반 근로자는 ‘노동’ 부문에 높은 만족도/개선수준, 자영업자는 ‘상생’ 부문에 높은 만족도/개선수준을 나타냄)

주1) 시민이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51.0%), 공정(31.2%), 상생(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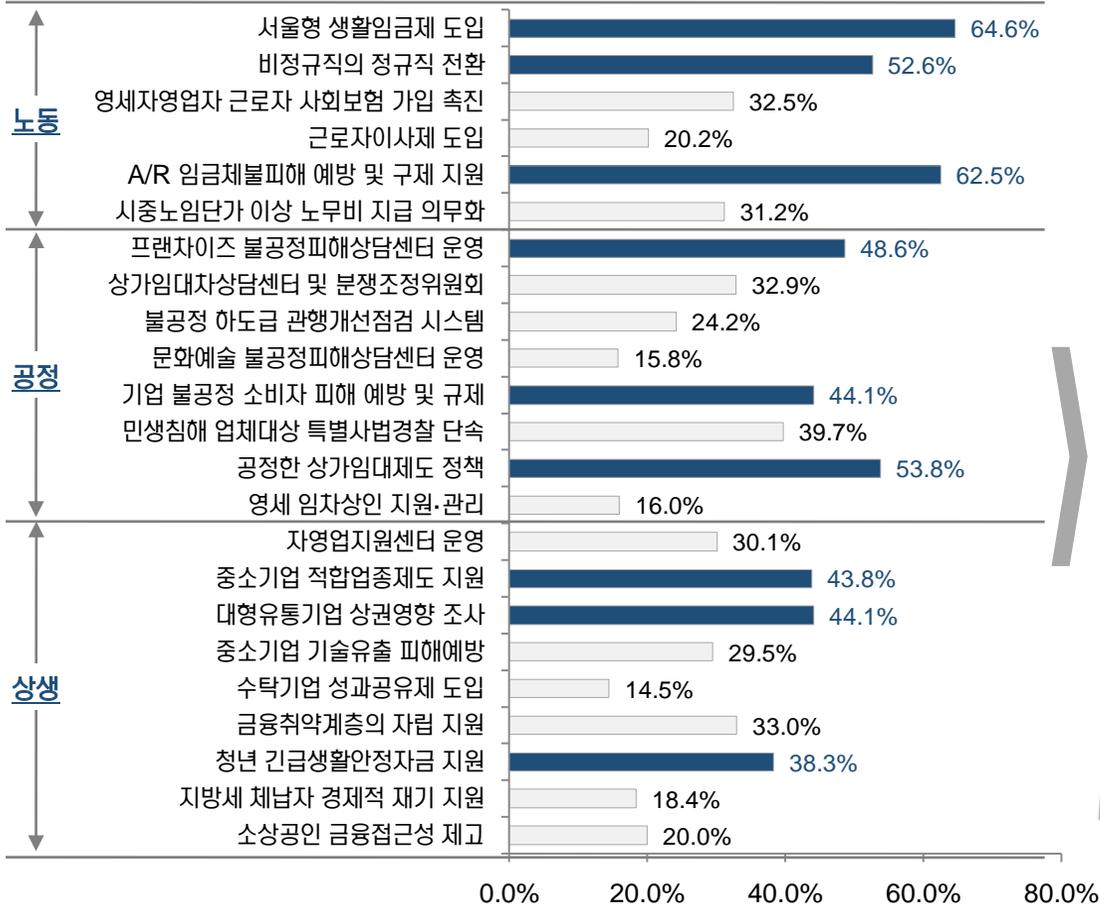
주2) 전문가가 평가한 요소별 가중치 : 노동(30.0%), 공정(30.8%), 상생(39.2%)

V. 시민 조사결과

V-3.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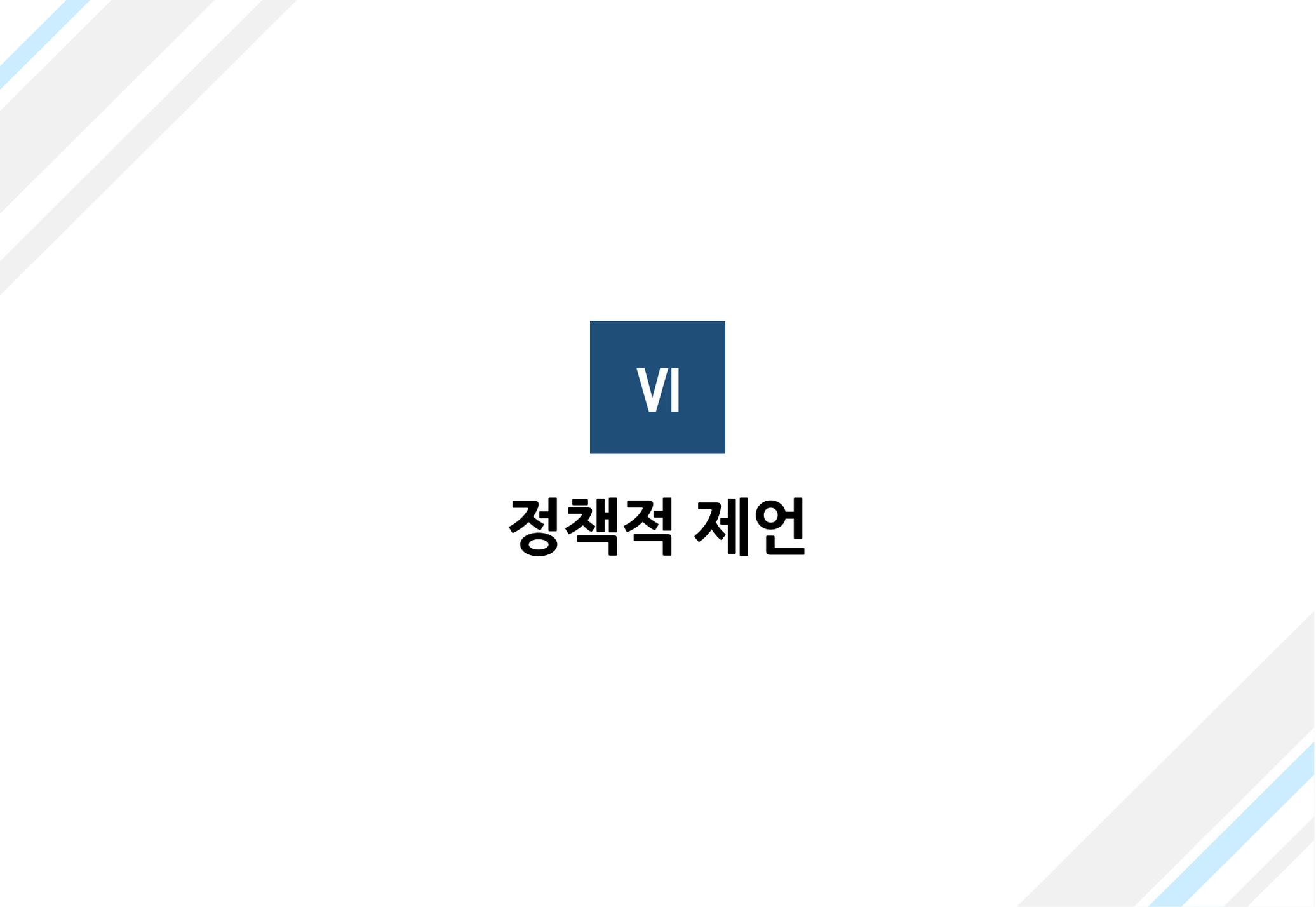
대체로 관여도가 높은 ‘노동’ 영역의 정책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확인. 영역별로 선호도가 높은 정책에 일반적인 직접지원 성격의 정책보다는 ‘공정·상생’ 기반 구축 및 제도 기반 강화 중심의 응답이 다수 나타나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 시사점(요구 정책)



-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 또한 **관여도가 높은 ‘노동’ 영역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영역별 선호도가 높은 Top3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직접지원 보다는 **‘공정·상생’ 기반 구축 및 제도 기반 강화** 중심의 응답 내용이 다소 포함
 - 일반적으로 정책 수혜자에 이와 같은 질문을 제시 할 경우, 직접적인 지원·혜택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함
 - 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시민의 강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에 기인
 - 사회적·경제적 정의 구현을 직접적인 지원 확대보다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
- 정책 대상자에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선심성 정책 확대 보다는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기반에 향후 투입 요소를 확대할 것**을 시사

주) ‘노동’, ‘공정’, ‘상생’ 분야별로 선호도 Top3 정책을 표기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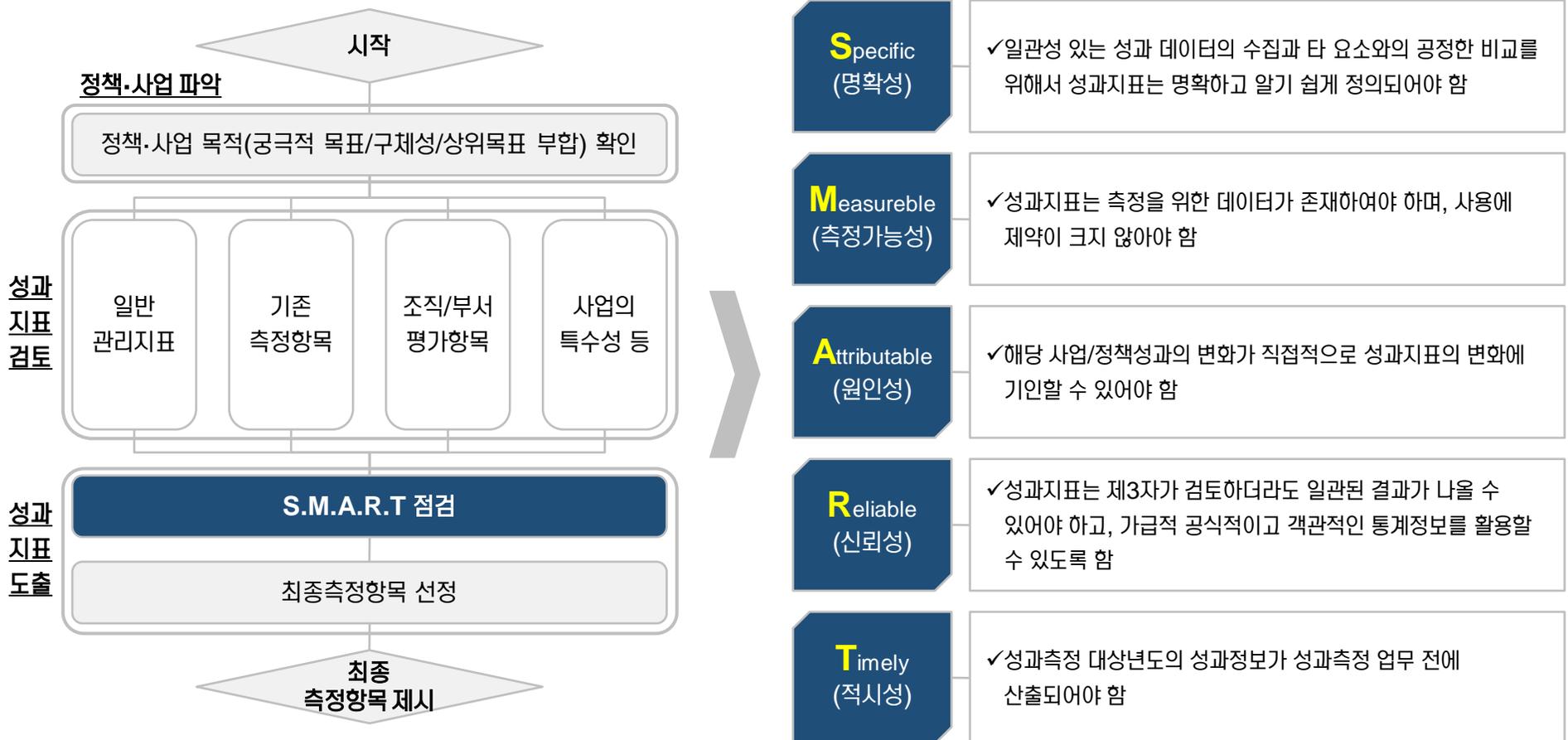
정책적 제언

VI. 정책적 제언

V-1.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책 초기에 따른 제약사항 및 성과 측정·관리기반의 부재 등으로 측정가능성을 중심으로 측정항목이 SEDPI에 우선적으로 반영. 차년도 SEDPI 산출부터는 측정항목의 고도화와 함께 도출된 측정항목들을 기준으로 S.M.A.R.T 원칙에 따른 점검과 보완 노력이 요구.

성과지표 적합성 판단을 위한 S.M.A.R.T 원칙



VI. 정책적 제언

V-1.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추진 목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제시 및 평가기준 마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EDPI가 타 도시와의 성과 비교를 위한 비교 척도가 아니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도 확인에 기반한 향후 정책목표 설정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필요

궁극적인 SEDPI의 의미 및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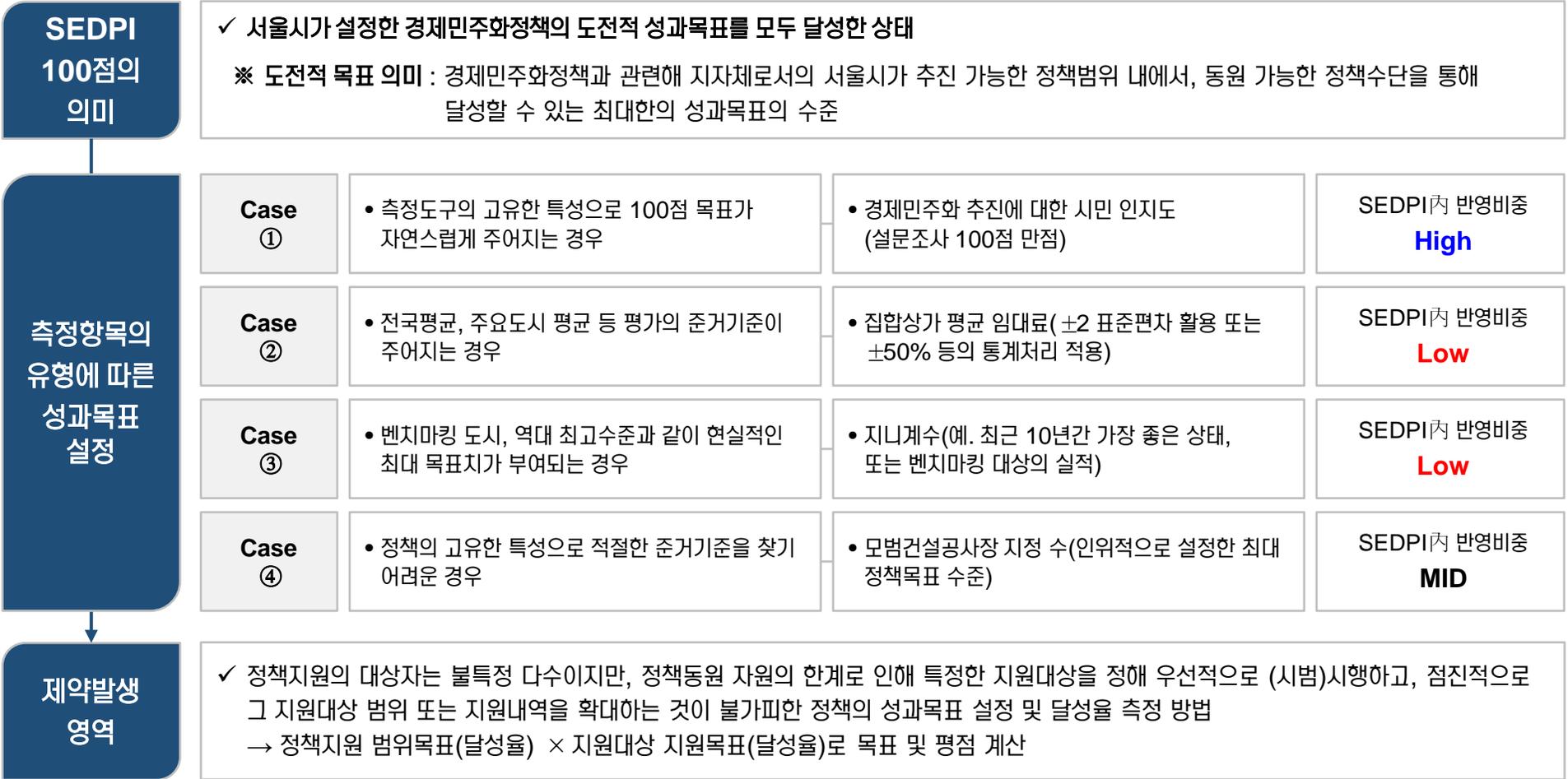
주요

VI. 정책적 제언

V-1.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 관리기반 상의 제약으로 정교한 성과목표 설정에 한계 상존. 단, SEDPI는 서울시가 설정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

SEDPI 및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목표 설정 방안



VI. 정책적 제언

V-1.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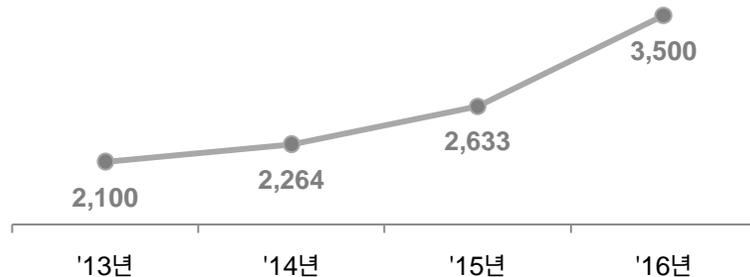
원자료 제공 혹은 지수화·등급모형 활용방식 모두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는 바, 지수·측정항목의 관리 목적, 관리 목표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채택 혹은 혼용하여,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성과관리와 시민대상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것을 권장.

수용도 제고를 위한 지수화·등급모형의 장점(사회적경제 기업 예시)

원자료 중심의 Dat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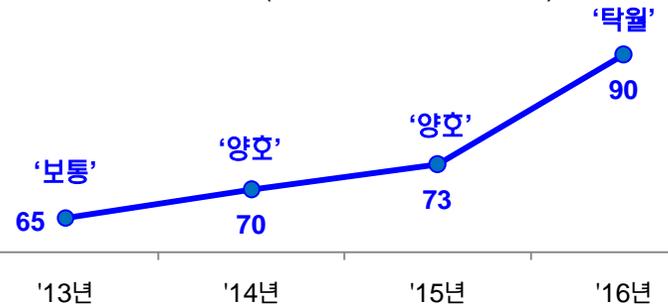
- 측정항목 고유의 값을 별도의 가공 없이 원자료(Raw Data) 형태로 다양한 정보 제공(예. 뉴욕市, CPR)

시각적 정보형태



지수화·등급모형화 활용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지수로 측정항목의 성과정보를 제공, 등급화된 평가결과 제시(예. 베델스만 SJI, SGI)



특징

- 측정항목의 ① 개선/유지/악화 여부, ② 특정 시점比 변화율 등 Dash Board 역할에 유용
- 별도의 Data 가공이 필요 없어 유연한 정보제공이 가능

- 측정항목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해당 측정항목의 성과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해석이 용이
- 성과목표 한계수준, 관리가능 범위를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가능

한계점

- 측정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시, 성과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점 상존(직관적인 이해 및 파악 어려움)
- 성과 변화에 대한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한 준거기준(Reference) 마련 어려움

- 지수화 및 준거기준의 마련을 위한 측정항목의 표준화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Raw Data의 축적이 필요
- 성과목표의 설정을 위한 별도의 논리개발이 요구되며, 목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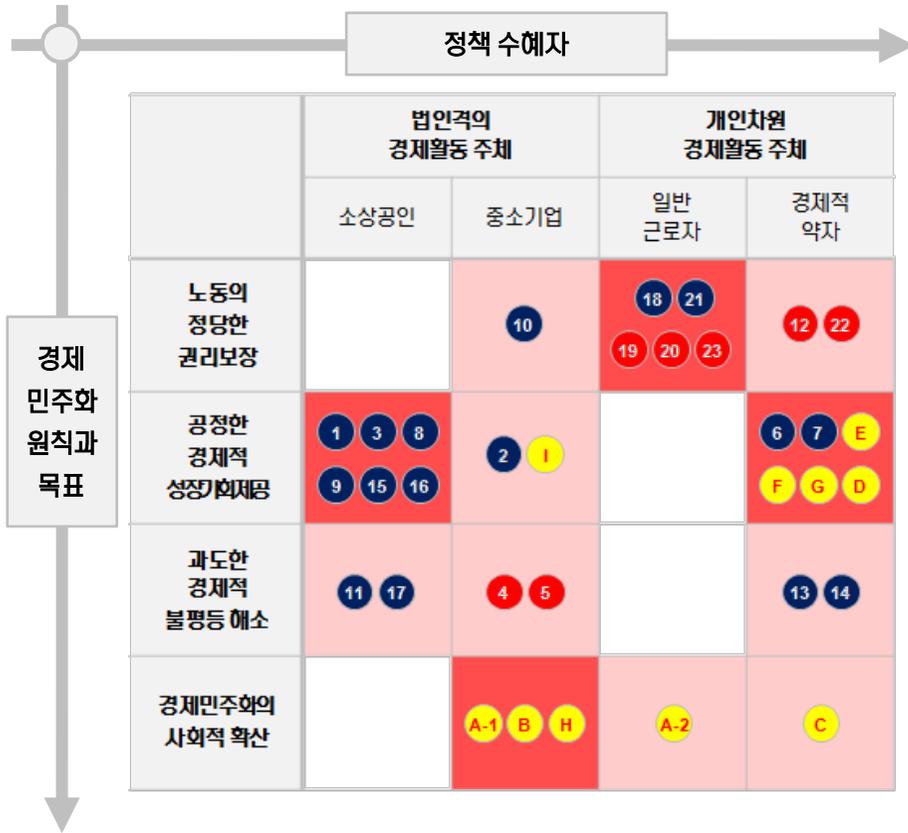
VI. 정책적 제언

V-2. 경제민주화 정책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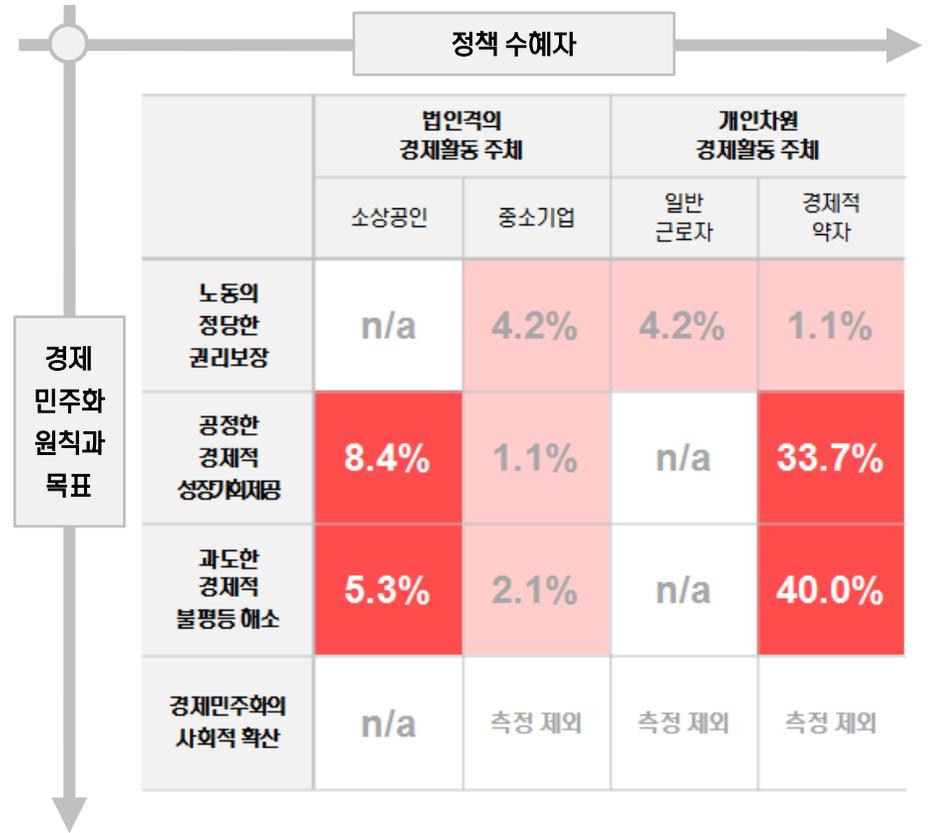
경제민주화 정책 커버리지는 투입자원의 집중도와 유사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정책 집중에 따른 투입자원의 확대를 통한 산출요소 발생관계를 고려 시, 단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부문과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부문의 성과가 기대.

경제민주화정책 커버리지와 투입자원 집중도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커버리지]



[정규직 공무원 기준 투입자원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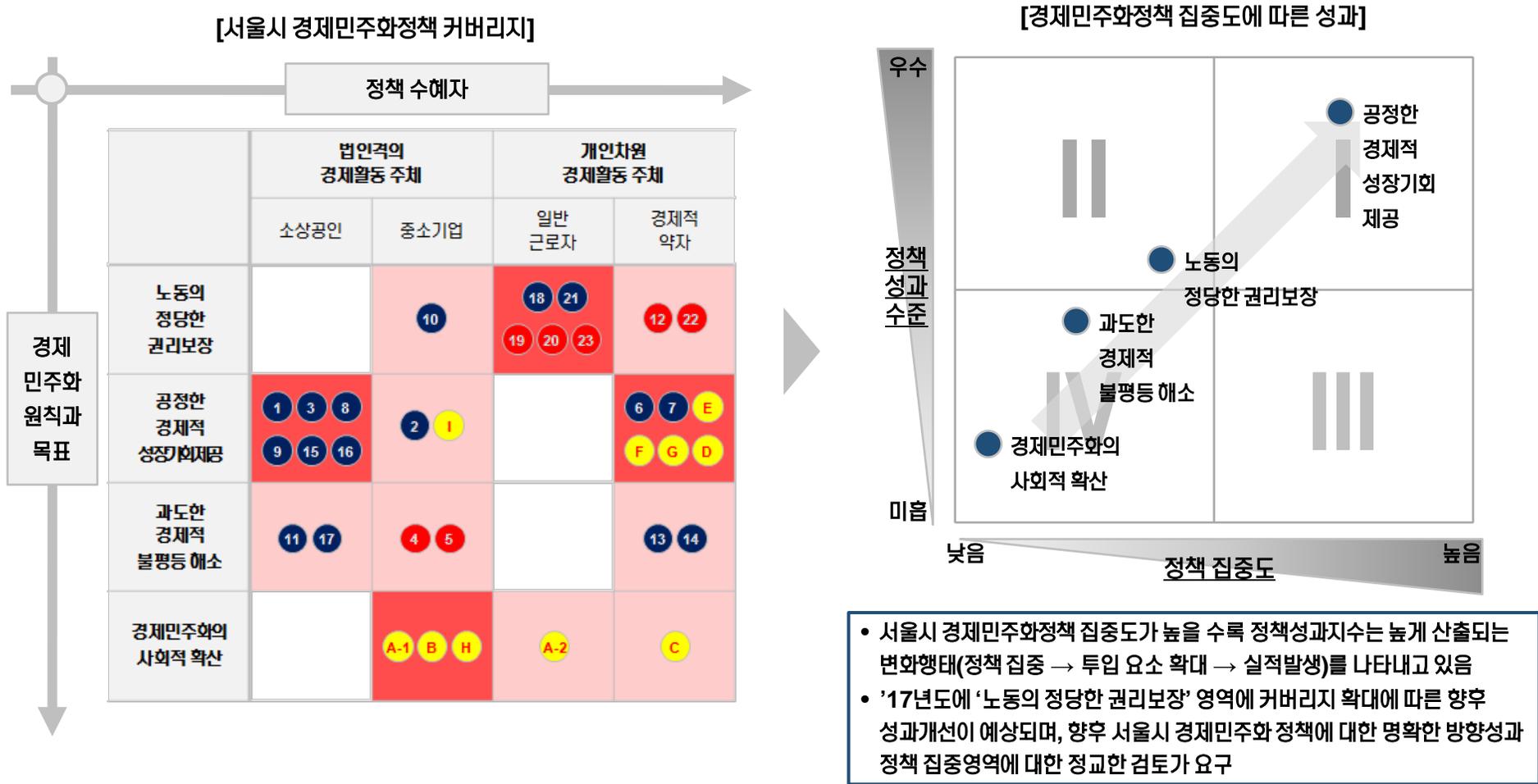


VI. 정책적 제언

V-2. 경제민주화 정책관리 관점의 정책적 제언

전술된 기대사항과 유사하게 정책적 집중도가 높을수록 정책성과지수가 높게 산출. '17년도에는 '노동의 정당한 권리보장' 영역에 커버리지 확대에 따른 향후 성과개선이 예상. 향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정책 집중영역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요구.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커버리지와 성과지수와 상관관계



VI. 정책적 제언

V-3. 종합 시사점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전반 인지도는 초기단계로 낮은 수준, 서울시의 정책노력 전개를 통해 활동/성과지수 모두 전년比 개선되었으나 성과지수는 ‘보통’영역과 ‘양호’영역의 경계선 수준이며, 시민이 인식하는 만족도와 유사한 수준. 본질적으로 정책 성과의 발생에는 정책 시차 (Time Lag)가 존재함을 감안 시, 지속적인 서울시의 정책의지와 노력에 따라 향후 성과가 기대.

시민 설문조사 및 SEDPI 산출에 따른 종합 시사점



End Of Document